

1. 1994학년도 1차 수능 ...2쪽
- 시장의 성격 변화와 기업 활동의 변화
2. 1994학년도 2차 수능 ...4쪽
- 경제학이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들
3. 2001학년도 수능 ...5쪽
-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기반한 호혜적 교환관계
4. 2002학년도 수능 ...11쪽
- 기업이 추구하는 이익의 종류
5. 2003학년도 9월 모평 ...15쪽
- 노동 시간 단축에 관한 노사정 3자의 견해차
6. 2006학년도 9월 모평 ...19쪽
- 카네만의 인지 심리학적 경제학 연구
7. 2006학년도 수능 ...23쪽
- 옵션의 원리와 기능
8. 2008학년도 6월 모평 ...28쪽
- 위치적 외부성의 의미와 효과
9. 2008학년도 수능 ...31쪽
- 공공사업의 타당성 진단과 할인율의 적용
10. 2009학년도 6월 모평 ...34쪽
- 조세전가 현상의 이해
11. 2010학년도 수능 ...37쪽
- 기업 결합의 성립 요건
12. 2011학년도 9월 모평 ...41쪽
- 환율의 상승과 J커브 현상의 이해
13. 2011학년도 수능 ...46쪽
- 채권 가격의 형성 요인에 대한 이해
14. 2012학년도 9월 모평 ...49쪽
- 한계비용과 공공 서비스의 가격 결정
15. 2012학년도 수능 ...52쪽
- 외부성 현상과 그 해결책
16. 2013학년도 수능 ...54쪽
- 연금 제도의 시행 목적
17. 2014학년도 예비B ...58쪽
- 시대의 변화에 따른 양극화 현상의 이해
18. 2015학년도 6월 모평A ...61쪽
- 인센티브 계약의 종류와 그 효과
19. 2015학년도 6월 모평B ...64쪽
- 광고 피해의 책임 주체와 광고의 규제
20. 2015학년도 수능A ...68쪽
- 공공 서비스의 특성과 종류
21. 2015학년도 수능B ... 72쪽
- 시민 사회와 산업 자본주의
22. 2016학년도 6월 모평AB ... 76쪽
-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23. 2016학년도 6월 모평B ... 80쪽
- 백과 바우만의 '현대의 개체화 현상'
24. 2016학년도 9월 모평A ... 84쪽
-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
25. 2016학년도 9월 모평B ... 89쪽
-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
26. 2016학년도 수능B ... 93쪽
- 지식 경영과 암묵지
27. 2017학년도 9월 모평 ... 97쪽
- 일인 주주 회사와 법인격 부인론
28. 2017학년도 수능 ... 102쪽
- 보험료 산정과 보험 가입자의 고지 의무
29. 2018학년도 6월 모평 ... 112쪽
- 통화 정책의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
30. 2018학년도 수능 ... 116쪽
- 환율의 오버슈팅
31. 2019학년도 9월 모평 ... 126쪽
- CDS 프리미엄
32. 2019학년도 수능 ... 131쪽
- 채권과 채무
33. 2020학년도 6월 모평 ... 136쪽
- 미시 건전성과 거시 건전성
34. 2020학년도 9월 모평 ... 142쪽
- 점유와 소유
35. 2020학년도 수능 ... 148쪽
- 바젤 협약
36. 2021학년도 6월 모평 ... 158쪽
- IC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37. 2021학년도 수능 ... 163쪽
- 예약의 유형
38. 2022학년도 9월 모평 ... 168쪽
- 광고의 효과와 영향
39. 2022학년도 수능 ... 174쪽
- 트리핀 딜레마와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가) 세계 경제는 제2차 세계 대전을 기점으로 큰 전환이 이루어졌다. 기업이 그 존속과 성장을 위해 소비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시장은 생산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태도를 바꾸어, 소비자의 잠재적 욕구를 파악하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전략을 채택해야만 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유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격을 책정하게 되었다. 즉, 제품을 시장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전략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일단 상품을 생산해 놓고 나서 그것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략이 아니다. 오히려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것을 생산하고,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소비자)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의 극대화라는 기업의 이념은 변함 없지만, 시대의 요구에 따라 기업 활동의 성격은 변화한다.

(나)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대체로 가격 수준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양이 조절된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요인과 비가격 요인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구매자 중심의 시장에서 가격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가격 이외에 판매점, 상표, 디자인, 신속한 배달과 수리, 광고 등과 같은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소비자의 선택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기업은 기업과 소비자와의 호혜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점에서 기업은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동안 기업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양립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기업들이 환경 문제나 사회 복지 등과 관련된 요인을 ㉠ 잘 살피지 않고 지나쳐 버렸다는 것이다. 오늘날 기업 활동에 관한 연구가 단지 기업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업 활동과 사회 전체의 균형적 발전간의 문제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 현대 기업은 단기적으로 이윤만을 추구하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소비자의 생활 수준과 문화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기업 활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27. 밑글은 다음 중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는가?

① 기업 활동의 성격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O) 시장의 성격이 바뀔에 따라 기업 활동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⑤ 생산과 서비스의 관계는 어떠한가?
 → (X)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으로서 '제품'과 '서비스'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 의하면 '생산'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산'과 '서비스'의 관계는 본문의 극히 일부에서만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답으로 볼 수 없습니다.

28. (나)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해당이 되는 어구는?

③ 호혜적 관계
 → (O) (나)는 구매자 중심의 시장에서는(시장의 성격 변화) 기업이 소비자와의 호혜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고(기업의 활동 변화)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단기적 이윤추구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버리고,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고려하고, 소비자의 생활 수준과 문화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기업 활동을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호혜적 :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 받는.

29. 다음 중, 그 뜻이 ㉠으로 풀이될 수 있는 단어는?

- ① 경시(輕視)했다
 → (X)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업신여기다.
- ② 간과(看過)했다
 → (O)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다.
- ③ 몰각(沒却)했다
 → (X) 「1」 아주 없애 버리다. 「2」 무시해 버리다.
- ④ 무시(無視)했다
 → (X) 「1」 사물의 존재 의의나 가치를 알아주지 아니하다. 「2」 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기다.
- ⑤ 묵과(默過)했다
 → (X) 잘못을 알고도 모르는 체하고 그대로 넘기다.

30. ㉠과 같은 기업 활동의 예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⑤ 소비자의 잠재적 욕구를 파악한다.
 → (X) 소비자의 잠재적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구매자 중심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 전략입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활동이며, ㉠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본문에서 예로 든 '환경 문제나 사회 복지'와 같은 것)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활동(제품 생산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 세계 경제는 제2차 세계 대전을 기점으로 큰 전환이 이루어졌다. 기업이 그 존속과 성장을 위해 소비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시장은 생산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제시문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가 전환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2차 세계 대전 이전의 세계 경제는 어떠했을까요?

16세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자본주의는 주로 상업 활동에서 이윤을 창출했던 상업자본주의, 산업혁명 이후 공장제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한 산업자본주의를 거쳐 19세기 말에는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산업자본주의 말기에는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다른 기업들을 망하게 하거나 병합하는 활동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그 결과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대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산업 자본에 은행 자본까지 융합되면서 덩치가 커진 소수의 대기업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이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배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대기업에 생산과 자본이 집중되어 있던 만큼 새로운 경쟁자는 나타나기 어려웠죠.

이렇게 소수 대기업이 시장의 이익을 독식하던 시대는 1929년 대공황을 시작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세계 경제가 하락했던 시기입니다. 주식 시장이 붕괴되면서 소비자들의 구입이나 기업의 신규투자가 위축되었고, 이는 곧 생산과 고용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독점자본주의 체제는 대기업의 대량생산을 받아줄 독점적 소비자장인 식민지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국주의와 함께 가는데요, 대공황 기간 동안 제국주의 열강들은 경제 회복을 위해 보호무역을 전개합니다. 자신들의 지배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역(식민지 등)을 각자의 경제 블록으로 설정하고, 관세 장벽을 높여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 경제 블록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제2차 세계 대전이 벌어집니다. 경제적 갈등이 군사적 갈등으로 터져나온 것이죠.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서방 국가들은 자유무역과 정치적 평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차원의 안정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 번영과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브레턴 우즈 협정이 맺어집니다. 1944년 미국 브레턴 우즈에서 44개 연합국 대표들이 모여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한 고정환율

제*의 도입을 통해 자유무역과 세계번영을 도모한 국제회의였죠. 협정문 전문의 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 이제 각국은 국제 금융거래의 문제에 대해 서로 조언을 구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세계의 번영에 해롭다고 의견이 일치된 행위는 불법화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 수지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한다. ...”

이 협정을 실행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이 탄생합니다.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와 같은 국제무역의 규칙도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식민지와 무역장벽에 기반한 제국주의적 독점자본주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정치적으로는 미국-소련 냉전 체제가 세계를 양분하고, 경제적으로는 브레턴 우즈 체제로 자유무역이 강조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생산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시장의 성격이 변화하였다는 제시문의 서술은 바로 이러한 기업 활동의 변화를 뜻합니다.

*기축통화 Key Currency : 국제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는 19세기 중반부터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담당했었고, 이후 제1차 세계 대전(1914~1918) 동안 막대한 부를 얻은 미국이 브레턴 우즈 협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금 1온스(28.35g)를 35달러로 고정시키고, 다른 나라의 화폐는 달러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금환본위제를 수립한 것이죠. 당시 미국은 전 세계 금의 2/3를 보유하고, 전 세계 산업 생산량의 1/2를 담당하고 있던 전무후무한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한 협정이었습니다.

*고정환율제 fixed exchange rate system : 지금은 대다수 국가에서 변동환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환율의 변동을 정부가 통제하여 일정하게 고정시켜 놓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35달러는 금 1온스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끔 규정해놓았고 나머지 국가의 화폐는 달러에 고정시켰기 때문에 금을 기준으로 모든 화폐가 일정한 교환비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환율에 개입하는 체제를 고정환율제라고 합니다.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경제 법칙은 합리적인 사람이 많고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은 사회에 잘 적용되는 법칙이다. 따라서 아무리 경제 정책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의 자질이 떨어질 때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처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경제 동향에 미치는 ㉠민심의 흐름이나 경제 사회 분위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현실 사회에 그 처방을 물리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경제의 방향은 ㉡민심의 향방에 크게 좌우된다.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을 가정하나 동물 근성도 잘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쉽사리 감정적이 되며, 경제 사회가 불안할수록 동물 근성이 잘 발동된다. 이런 의미에서도 경제 안정은 근본 문제가 된다. 그리고 경제는 이러한 인간의 경제 행위를 바탕으로 하므로 그 예측이 어렵다. 가령 일기 예보의 경우에는 내일의 일기를 오늘 예보하더라도 일기가 예보 자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경기 예측(景氣豫測)의 경우에는 다르다. 예를 들어, 정부가 경기 침체를 예고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비하여 행동을 하고, 반대로 경기 회복을 예고하면 또한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경기 예측 그 자체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예측이 어느 정도 빗나가는 것이 보통이다. ‘될 것이다’ 또는 ‘안 될 것이다’와 같은 예측은 이른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소지가 크다.

경제 문제는 인간의 가치 판단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가령 ‘값’은 젊고 유능하며 부양 가족이 없는데도 많은 봉급을 받는 데 비하여, ‘을’은 늙고 무능하나 많은 식구를 부양하는데도 적은 봉급을 받는 경우, 양자의 소득 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집 값이 집 없는 사람의 봉급보다 빨리 상승한다든가, 고급 주택의 건설이 많아진다고 할 때, 주택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은 감정이나 가치 판단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다.

43. 밑글에서 경제학이 고려할 사항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 감정 ② 합리성 ③ 가치 판단 ④ 동물 근성

→ (O) <해설 생략>

⑤ 지역 경제

→ (X) 지역 경제는 본문 어느 부분에서도 언급한 바 없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경제 정책을 만들 때에는 지역 경제도 고려해야 하겠지만요.

44. 문맥상 ㉠, ㉡에 공통적으로 바꾸어 넣을 수 있는 것은? [0.8점]

① 여파(餘波)

→ (X) 「1」 큰 물결이 지나간 뒤에 일어나는 잔물결. 「2」 어떤 일이 끝난 뒤에 남아 미치는 영향.

② 정세(政勢)

→ (X) 정치상의 동향이나 형세.

③ 사조(思潮)

→ (X) 한 시대의 일반적인 사상의 흐름.

④ 여론(輿論)

→ (O)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

⑤ 풍문(風聞)

→ (X)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

45. ㉢와 같은 인과적 구조를 보여 주는 것은?

① 기술의 혁신은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키고, 그것은 다시 오염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

→ (X) 악순환

② 큰 목소리가 사람들의 대화를 방해하고, 그것은 다시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만든다.

→ (X) 악순환

③ 실내의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 온도 조절 장치에 의해 보일러가 꺼지고, 온도는 다시 내려간다.

→ (X) 인과적 연쇄

④ 할아버지는 손자가 장차 큰 인물이 되리라고 늘 말하였고, 그 말에 용기 백배한 손자는 열심히 일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 (O) 예언 및 예측(큰 인물이 되리라)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으므로(큰 성공을 거둠) 적절한 사례입니다.

⑤ 풀어진 신발 끈을 다시 묶느라 집을 약간 늦게 출발하였고, 그래서 그는 기차를 놓쳤고, 그래서 그는 시험을 치르지 못했고, 그 결과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

→ (X) 인과적 연쇄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란 “행위자 갑이 을에게 베푼 바와 같이 을도 갑에게 똑같이 행하라.”라는 행위 준칙을 의미한다. 상호주의의 원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되는 탈리오의 법칙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일견 피해자의 손실에 상응하는 가해자의 처벌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가혹하고 엄격한 성격을 드러낸다. 만약 상대방의 밥그릇을 빼앗았다면 자신의 밥그릇도 미련 없이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리오 법칙은 온건하고도 합리적인 속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의 밥그릇을 발로 찼을 경우 보복의 대상은 밥그릇으로 제한되어야지 밥상 전체를 뒤엎는 것으로 확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대일 방식의 상호주의를 ‘대칭적’ 상호주의라 부른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실제 일상생활에서 별로 흔하지 않다.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거나, 말로 주고 되로 받는다’ 교환 관계가 더 일반적이다. 이를 대칭적 상호주의와 대비하여 ‘비대칭적’ 상호주의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교환되는 내용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정확한 대등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셈에 밝은 이른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들에게 있어서 선호나 기호 및 자원(資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교환에 임하는 행위자들이 각인각색(各人各色)인 까닭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만이 그들에게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호혜적(互惠的) 교환 관계가 가장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이 바로 시장이다. 어떠한 행위자도 공짜로 재화를 얻을 수 없다고 가정하는 시장 상황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환의 내용은 결코 등량(等量)·등가(等價)의 것들이 아니다. 행위자 갑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쌀을 원하고 을은 갑이 갖고 있는 설탕을 바랄 경우, 갑은 쌀에 대하여 그리고 을은 설탕에 대해 각각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양자를 서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은 각자의 선호와 자원의 범위 내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 장군 명군 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사회적 영역이다.

그런데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자발성(自發性)과 교환 과정의 공정성(公正性)이 바로 그것이다. 이 때 자발성은 행위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정성은 그들 간의 절차적 합리주의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강매나 사기, 도둑질 같은 행위는 선택의 자발성을 제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反)시장적인 것이다. 이러한 반시장적 행위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는 자발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행위자들이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시장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비(非)시장적 요소’라 말할 수 있다.

37.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 보편화되어 있다.
- (X) 대칭적 상호주의는 일상에서 별로 흔하지 않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 ② 사람들의 기호 및 자원에는 차이가 있다.
- (O) 셈에 밝은 경제적 인간들은 선호나 기호, 가진 자원이 다양하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 ③ 비대칭적 상호주의는 쌍방에게 이익을 준다.
- (O) 비대칭적 상호주의는 상호 이익을 보장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 ④ 행위자의 자발성과 절차적 공정성은 호혜적 교환 관계의 전제 조건이다.
- (O) 밑글은 호혜적 교환 관계가 가장 현저하게*(뚜렷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시장을 들었고, 시장이 기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행위자의 자발성과 교환 과정의 공정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교환 과정의 공정성은 곧 절차적 공정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저하다: 뚜렷이 드러나 있다.

- ⑤ 반시장적 요소와 비시장적 요소는 서로 다른 의미이다.
- (O) 반시장적 요소는 강매나 사기와 같이 자발성을 제한하고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반면 비시장적 요소는 자발성과 공정성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견지하다: 【…을】 「1」 어떤 견해나 입장 따위를 굳게 지니거나 지키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란 “행위자 갑이 을에게 베푸는 바와 같이 을도 갑에게 똑같이 행하라.”라는 행위 준칙을 의미한다. 상호주의의 원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되는 탈리오의 법칙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일견 피해자의 손실에 상응하는 가해자의 처벌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가혹하고 엄격한 성격을 드러낸다. 만약 상대방의 밥그릇을 빼앗았다면 자신의 밥그릇도 미련 없이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리오 법칙은 온건하고도 합리적인 속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의 밥그릇을 발로 밟을 경우 보복의 대상은 밥그릇으로 제한되어야지 밥상 전체를 뒤엎는 것으로 확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대일 방식의 상호주의를 ‘대칭적’ 상호주의라 부른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실제 일상생활에서 별로 흔하지 않다.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거나, 말로 주고 되로 받느’ 교환 관계가 더 일반적이다. 이를 대칭적 상호주의와 대비하여 ‘비대칭적’ 상호주의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교환되는 내용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정확한 대등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셀에 밝은 이른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들에게 있어서 선호나 기호 및 자원(資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교환에 임하는 행위자들이 각각각색(各人各색)인 까닭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만이 그들에게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호혜적(互惠的) 교환 관계가 가장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이 바로 시장이다. 어떠한 행위자도 공짜로 재화를 얻을 수 없다고 가정하는 시장 상황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환의 내용은 결코 등량(等量)·등가(等價)의 것들이 아니다. 행위자 갑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쌀을 원하고 을은 갑이 갖고 있는 설탕을 바랄 경우, 갑은 쌀에 대하여 그리고 을은 설탕에 대해 각각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양자를 서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은 각자의 선호와 자원의 범위 내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느’ 장군 명군 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사회적 영역이다.

그런데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자발성(自發性)과 교환 과정의 공정성(公正性)이 바로 그것이다. 이 때 자발성은 행위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정성은 그들 간의 절차적 합리주의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강매나 사기, 도둑질 같은 행위는 선택의 자발성을 제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反)시장적인 것이다. 이러한 반시장적 행위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는 자발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행위자들이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시장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비(非)시장적 요소’라 말할 수 있다.

38.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가설을 먼저 설정한 후, 그것을 구체적 현상에 적용하였다.

→ (X) 윗글에는 어떤 가설*도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설:

「1」『철학』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 체계를 연역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정.

「2」『사회 일반』 사회 조사나 연구에서, 주어진 연구 문제에 대한 예측적 해답.

② 다양한 학설들을 소개한 다음,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열거하였다.

→ (X)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둘 이상의 학설*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설: 학술적 문제에 대하여 주장하는 이론 체계.

③ 정의, 비교·대조, 예시의 방법을 활용하여 현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 (O) 윗글은 상호주의와 시장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고, 대칭적 상호주의와 비대칭적 상호주의를 비교하여 더 일상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탈리오의 법칙이 지닌 두 가지 속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시가 사용되었음은 물론이요. 이들은 모두 ‘사회적 관계’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비교: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일.

*대조: 둘 이상인 대상의 내용을 맞대어 같고 다름을 검토함.

※참고: 논지 전개 방식에서 비교와 대조를 구분하는 일은, 수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위에 나타난 뜻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선지에서도 가운데뎛점(-)을 활용하여 ‘비교’와 ‘대조’를 묶어 놓은 것입니다.

④ 여러 가지 특수한 사례로부터 현상에 대한 보편적 이론을 도출하였다.

→ (X) 윗글은 특수로부터 보편을 이끌어내는 귀납* 추리 방식으로 전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귀납: 『철학』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 및 법칙을 유도해 내는 일.

⑤ 현상을 바라보는 상반된 주장을 대비한 다음, 절충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 (X) 윗글에는 한 가지 현상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절충적 관점도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란 “행위자 갑이 을에게 베푸는 바와 같이 을도 갑에게 똑같이 행하라.”라는 행위 준칙을 의미한다. 상호주의의 원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되는 탈리오의 법칙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일견 피해자의 손실에 상응하는 가해자의 처벌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가혹하고 엄격한 성격을 드러낸다. 만약 상대방의 밥그릇을 빼앗았다면 자신의 밥그릇도 미련 없이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리오 법칙은 온건하고도 합리적인 속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의 밥그릇을 발로 찼을 경우 보복의 대상은 밥그릇으로 제한되어야지 밥상 전체를 뒤엎는 것으로 확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대일 방식의 상호주의를 ‘대칭적’ 상호주의라 부른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실제 일상생활에서 별로 흔하지 않다.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거나, 말로 주고 되로 받는다’ 교환 관계가 더 일반적이다. 이를 대칭적 상호주의와 대비하여 ‘비대칭적’ 상호주의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교환되는 내용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정확한 대등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셈에 밝은 이른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들에게 있어서 선호나 기호 및 자원(資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교환에 임하는 행위자들이 각각각색(各人各색)인 까닭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만이 그들에게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호혜적(互惠的) 교환 관계가 가장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이 바로 시장이다. 어떠한 행위자도 공짜로 재화를 얻을 수 없다고 가정하는 시장 상황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환의 내용은 결코 등량(等量)·등가(等價)의 것들이 아니다. 행위자 갑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쌀을 원하고 을은 갑이 갖고 있는 설탕을 바랄 경우, 갑은 쌀에 대하여 그리고 을은 설탕에 대해 각각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양자를 서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은 각자의 선호와 자원의 범위 내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 장군 명군 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사회적 영역이다.

그런데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자발성(自發性)과 교환 과정의 공정성(公正性)이 바로 그것이다. 이 때 자발성은 행위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정성은 그들 간의 절차적 합리주의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강매나 사기, 도둑질 같은 행위는 선택의 자발성을 제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反)시장적인 것이다. 이러한 반시장적 행위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는 자발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행위자들이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시장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에서 ‘시장의 비(非)시장적 요소’라 말할 수 있다.

39. ㉠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내가 무슨 **셈**을 따져서 그들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다. (정비석, 「비석과 금강산의 대화」)
- (O) 뒷글에서 ‘경제적 인간’을 수식하는 데 활용된 ‘셈에 밝은’이란 문구는 ‘손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 쓰인 ‘셈을 따져서’ 또한 이익과 손해를 따진다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정답은 ①번입니다.
- ② 그로서는 만세를 불렀다는 말이 마지막 방패였던 **셈**이다. (박경리, 「토지」)
- (X)
- ③ 나는 처음에 어떻게 되는 **셈**인지 몰라서 멀거나 천장만 한참 쳐다보았다. (김유정, 「안해」)
- (X)
- ④ **조금만 셈이 피면** 공부를 시켜서 제 손으로 벌어라도 먹게 만들어 주고 싶지만……. (염상섭, 「삼대」)
- (X)
- ⑤ 윤태는 벌써 한 달이 넘게 오르내린 층계건만 받을 옮길 때마다 번번이 **그 숫자를 셈**하게 되는 것이 싫었다. (유주현, 「하오의 연가」)
- (X)

*셈

[I] 「명사」

- 「1」 수를 세는 일.
- 「2」 주고받을 돈이나 물건 따위를 서로 따져 밝히는 일. 또는 그 돈이나 물건.
- 「3」 수를 따져 얼마인가를 세어 맞추는 일.
- 「4」 이익을 따져 보는 생각.
- 「5」 생활의 형편.
- 「6」 어떤 일이나 사실의 원인. 또는 그런 형편.
- 「7」 사물을 분별하는 슬기.

[II] 「의존 명사」

- 「1」 ((주로 ‘-은/는 셈이다’, ‘-은/는 셈으로’ 구성으로 쓰여)) 어떤 형편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말.
- 「2」 ((주로 ‘-을 셈이다’, ‘-을 셈으로’ 구성으로 쓰여))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내는 말.
- 「3」 ((주로 ‘-은/는/을 셈 치다’ 구성으로 쓰여)) 미루어 가정함을 나타내는 말.

*셈하다

「동사」 【…을】

- 「1」 수를 세다.
- 「2」 주고받을 돈이나 물건 따위를 서로 따져 밝히다.
- 「3」 수를 따져 얼마인가를 세어 맞추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란 “행위자 갑이 을에게 베푸는 바와 같이 을도 갑에게 똑같이 행하라.”라는 행위 준칙을 의미한다. 상호주의의 원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되는 탈리오의 법칙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일견 피해자의 손실에 상응하는 가해자의 처벌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가혹하고 엄격한 성격을 드러낸다. 만약 상대방의 밥그릇을 빼앗았다면 자신의 밥그릇도 미련 없이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리오 법칙은 온건하고도 합리적인 속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의 밥그릇을 발로 밟을 경우 보복의 대상은 밥그릇으로 제한되어야지 밥상 전체를 뒤엎는 것으로 확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대일 방식의 상호주의를 ‘대칭적’ 상호주의라 부른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실제 일상생활에서 별로 흔하지 않다.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거나, 말로 주고 되로 받는다’ 교환 관계가 더 일반적이다. 이를 대칭적 상호주의와 대비하여 ‘비대칭적’ 상호주의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교환되는 내용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정확한 대등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셀에 밝은 이른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들에게 있어서 선호나 기호 및 자원(資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교환에 임하는 행위자들이 각각각색(各人各色)인 까닭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만이 그들에게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호혜적(互惠的) 교환 관계가 가장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이 바로 시장이다. 어떠한 행위자도 공짜로 재화를 얻을 수 없다고 가정하는 시장 상황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환의 내용은 결코 등량(等量)·등가(等價)의 것들이 아니다. 행위자 갑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쌀을 원하고 을은 갑이 갖고 있는 설탕을 바랄 경우, 갑은 쌀에 대하여 그리고 을은 설탕에 대해 각각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양자를 서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은 각자의 선호와 자원의 범위 내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 장군 명군 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사회적 영역이다.

그런데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자발성(自發性)과 교환 과정의 공정성(公正性)이 바로 그것이다. 이 때 자발성은 행위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정성은 그들 간의 절차적 합리주의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강매나 사기, 도둑질 같은 행위는 선택의 자발성을 제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反)시장적인 것이다. 이러한 반시장적 행위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는 자발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행위자들이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시장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비(非)시장적 요소’라 말할 수 있다.

40.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내기 철에 품앗이를 하였다.

→ (O) 품앗이는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품을 지고 갚고 하는 일’을 말합니다. 갑이 을의 모내기를 도와주면, 을은 나중에 갑이 요청하는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서로 교환되는 노동의 양이나 질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갑이 100개의 모를 심었으므로, 을도 나중에 100개의 모를 심어준다든지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② 사재기를 통해 폭리*를 취했다.

→ (X) 사재기는 행위자의 자발적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판매자의 판매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구매하게 된다는 점에서 반시장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재기는 호혜적 교환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폭리: 지나치게 많이 남기는 부당한 이익.

③ 직장 동료끼리 교대로 점심을 샀다.

→ (O) 점심을 늘 같은 메뉴로 같은 장소에서 먹는 것이라면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될 수 있겠지만, 상식에 기대어 의미를 해석해보자면(이 시험의 과목명은 논리학이 아니라 언어 영역임) 서로 다른 가격의, 서로 다른 메뉴를 서로 제공하는 호혜적 교환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④ 할인 매장에서 짤깁으로 물건을 샀다.

→ (O) 할인 매장을 운영하는 판매자는 물건 날개당 남기는 이윤이 일반 매장보다 더 적을 것입니다. 여기서 물건을 구입하는 개별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익입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개별 거래에서 조금 이익을 덜 보더라도, 이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할인 매장을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리적으로 중심가에서 멀어 매장의 임대료는 싸지만 구매자가 방문할 기회가 적은 매장은, 정상가로 판매할 때보다 할인가로 판매했을 때 거래량이 많아져 최종적으로는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상품을 다량으로 매우 저렴하게 구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존의 매장 재고를 빠르게 처리하고자 하는 판매자의 경우에도 할인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할인 매장에서 교환되는 내용은 양과 질의 측면에 있어서 대등성을 결여하고 있고(할인된 가격), 상호 이익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호혜적 교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⑤ 알뜰 시장에서 중고 물건을 맞바꾸었다.

→ (O) 중고 물품은 교환되는 내용이 양이나 질의 측면에서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물물교환은 전형적인 호혜적 교환 관계입니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란 “행위자 갑이 을에게 베푸는 바와 같이 을도 갑에게 똑같이 행하라.”라는 행위 준칙을 의미한다. 상호주의의 원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되는 탈리오의 법칙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일견 피해자의 손실에 상응하는 가해자의 처벌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가혹하고 엄격한 성격을 드러낸다. 만약 상대방의 밥그릇을 빼앗았다면 자신의 밥그릇도 미련 없이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리오 법칙은 온건하고도 합리적인 속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의 밥그릇을 발로 찼을 경우 보복의 대상은 밥그릇으로 제한되어야지 밥상 전체를 뒤엎는 것으로 확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대일 방식의 상호주의를 ‘대칭적’ 상호주의라 부른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실제 일상생활에서 별로 흔하지 않다.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거나, 말로 주고 되로 받는다’ 교환 관계가 더 일반적이다. 이를 대칭적 상호주의와 대비하여 ‘비대칭적’ 상호주의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교환되는 내용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정확한 대등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셀에 밝은 이른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들에게 있어서 선호나 기호 및 자원(資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교환에 임하는 행위자들이 각각각색(各人各色)인 까닭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만이 그들에게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호혜적(互惠的) 교환 관계가 가장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이 바로 시장이다. 어떠한 행위자도 공짜로 재화를 얻을 수 없다고 가정하는 시장 상황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환의 내용은 결코 등량(等量)·등가(等價)의 것들이 아니다. 행위자 갑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쌀을 원하고 을은 갑이 갖고 있는 설탕을 바랄 경우, 갑은 쌀에 대하여 그리고 을은 설탕에 대해 각각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양자를 서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은 각자의 선호와 자원의 범위 내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 장군 명군 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사회적 영역이다.

그런데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자발성(自發性)과 교환 과정의 공정성(公正性)이 바로 그것이다. 이 때 자발성은 행위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정성은 그들 간의 절차적 합리주의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강매나 사기, 도둑질 같은 행위는 선택의 자발성을 제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反)시장적인 것이다. 이러한 반시장적 행위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는 자발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행위자들이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시장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에서 ‘시장의 비(非)시장적 요소’라 말할 수 있다.

41. ㉣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려 할 때, 그 논거로 가장 타당한 것은?

→ (발문 해설) 어떤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거나 ‘비판’하고자 한다면, 먼저 해당 주장(B)과 그것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A)를 본문에서 명확히 찾아야 합니다. ‘A이기 때문에 B하다’는 식으로 본문의 주장과 근거를 명확히 찾았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1)A가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방법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2)A가 B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부정하거나, ㉣의 근거만으로는 ㉣을 뒷받침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선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① 반시장적 행위는 상호주의의 산물이다.
→ (X) 반시장적 행위는 상호주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대칭이든 비대칭이든 상호주의는 서로의 행위가 짝을 이루어야 하는데, 반시장적 행위의 예시로 나타난 강매, 사기, 도둑질은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② 비시장적 요소는 시장의 기능을 보완한다*.
→ (X) 뒷글에서 반시장적 행위는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되지 않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비시장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시장적 요소는 시장에 부족한 무언가를 보충하여 완전하게 한다고 볼 수 있어 ②번 선지 자체는 적절한 서술이 됩니다. 그러나 ㉣에 대한 반론 근거로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의 논거를 공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완하다: 「동사」 【…을】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다.

③ 시장에서는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통용된다.
→ (X) 선지 자체는 적절한 서술입니다. 그러나 역시 ㉣에 대한 반론 근거로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④ 시장에는 탈리오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X) 선지 자체는 적절한 서술입니다. 만약 시장에 탈리오의 법칙이 적용된다면, 쌀 100kg을 쌀 100kg과 맞바꾸려 힘들게 시장까지 나온 판매자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에 대한 반론 근거로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⑤ 반시장적 요소는 시장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다.
→ (O) 위 선지의 경우 ㉣의 근거가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시장적 행위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될 수 있다.’라고 공격하는 것이죠. 이는 (발문 해설)에서 설명한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선지는 ㉣을 반론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란 “행위자 갑이 을에게 베푼 바와 같이 을도 갑에게 똑같이 행하라.”라는 행위 준칙을 의미한다. 상호주의의 원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되는 탈리오의 법칙에서 발견된다.

탈리오의 법칙은 lex talionis를 번역한 것입니다. 라틴어로 lex는 법을 뜻하며 talionis는 보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반좌법, 동해보복법(같은 해로움으로 보복)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이 법칙은 원시 사회의 정의관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함무라비 법전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제196조 만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그의 눈을 상하게 한다.

제200조 만일 누군가가 타인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그 사람의 이를 부러뜨린다.

성서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38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러한 탈리오의 법칙은 우리가 얼핏 보기에 고대 사회의 잔혹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히려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탈리오의 법칙이 고대 국가 단계로 접어들어 진일보한 정의 관념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고대 국가 성립 이전의 사회에서는 상대의 공격에 대해 무제한적 보복이 이루어졌었는데, 고대 국가 단계로 넘어오면서 법률로써 개인 간의 복수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정확히 상대가 손해를 끼친 수준까지만 보복을 할 수 있게끔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보복에 대해 재보복은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차별적 보복이 이루어지는 혼란한 사회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것 같지 않나요?

상호주의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교환되는 내용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정확한 대등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셀에 밝은 이른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들에게 있어서 선호나 기호 및 자원(資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교환에 임하는 행위자들이 각인각색(各人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경제활동이 자기애로부터 비롯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경제활동으로부터 그의 수익(만족, 효용,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구한다고 가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순수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의미) 인간의 모습은 ‘경제적 인간’이란 용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경제적 인간’은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하고 있는 주류 경제학 이론의 기본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적 인간’의 ‘합리성’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곧 ‘합리적 선택’을 의미하는데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선택’이란 여러 대안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편익이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을 말하며, 비용은 선택의 대가로 포기하게 되는 것의 가치인 기회비용을 말합니다. 즉, ‘경제적 인간’이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 대안을 검토하여 기회비용이 같다면 편익이 큰 안을 선택하고, 편익이 같다면 기회비용이 적은 것을 선택하는 합리성을 지녔다고 가정된 인간상인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다. 기업 또한 이익 추구라는 목적에서 탄생하여, 생산의 주체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곧 이익은 기업가로 하여금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이익에는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이익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이익이 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기업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가 장기 이익의 극대화와 상충할 때에는 단기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도 한다.

하루 세 번 칫솔질할 것을 권장하는 치과 의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모두가 이처럼 이를 닦으면 사람들의 치아 상태가 좋아져서 치과 의사의 단기 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하게 되므로 치과 의사로서는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칫솔질을 자주 하지 않으면 단기 이익은 증가하겠지만, 의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장기 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을 구별하여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 소자본끼리의 자유 경쟁 상태에서는 단기든 장기든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에 경쟁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시켰다는 의미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소유자가 곧 경영자였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은 자본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경영 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경영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주주의 대리인으로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 경영인은 기업의 장기적 전망보다 단기 이익에 치중하여 경영 능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주는 경영자의 이러한 비효율적 경영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은 물론 기업의 장기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오늘날의 기업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포함된 다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 사회가 어떠한 집단도 독점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다원(多元) 사회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이해 집단이 기업에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에 있는 집단으로는 노동 조합, 소비자 단체, 환경 단체, 지역 사회, 정부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이 이러한 다원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해 집단의 요구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그 래야만 기업의 장기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1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8점]

① 기업은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 주체이다.

→ (O) 기업은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 주체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산: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어 내거나,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재화: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해 주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물건. ex) 빵, 옷, 주택

***서비스: 형태는 없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인간의 행위. ex) 교육 활동, 의료 활동

② 기업은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면 장기적 이익을 보장받는다.

→ (X) 윗글에서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단기 이익은 극대화 되지만 장기 이익은 감소하거나, 단기 이익은 감소하지만 장기 이익은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단기 이익을 포기하고 장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의 서술은 기업이 단기적 손해를 감수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윗글은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기적 손해를 달갑게 받아들이면(감수하면) 단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일 뿐이지, 이로 인해 장기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근거는 윗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③ 자본주의 초기에도 기업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켰다.

→ (O)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장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려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였고,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시켰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④ 전문 경영인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없으면 기업의 장기 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다.

→ (O) 주주는 전문 경영인이 단기 이익에 치중하는 경영 활동을 하는지 감시하여 장기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주주의 적절한 감시가 없다면 전문 경영인의 비효율적 경영 활동으로 기업의 장기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⑤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이해 집단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 (O) 윗글에서는 오늘날의 기업이 다양한 이해 집단들의 요구도 모두 만족시켜야 장기 이익이 보장되고,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다. 기업 또한 이익 추구라는 목적에서 탄생하여, 생산의 주체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곧 이익은 기업가로 하여금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이익에는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이익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이익이 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기업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가 장기 이익의 극대화와 상충할 때에는 단기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도 한다.

하루 세 번 칫솔질할 것을 권장하는 치과 의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모두가 이처럼 이를 닦으면 사람들의 치아 상태가 좋아져서 치과 의사의 단기 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하게 되므로 치과 의사로서는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칫솔질을 자주 하지 않으면 단기 이익은 증가하겠지만, 의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장기 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을 구별하여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 소자본끼리의 자유 경쟁 상태에서는 단기든 장기든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에 경쟁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시켰다는 의미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소유자가 곧 경영자였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은 자본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경영 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경영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주주의 대리인으로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 경영인은 기업의 장기적 전망보다 단기 이익에 치중하여 경영 능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주는 경영자의 이러한 비효율적 경영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은 물론 기업의 장기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오늘날의 기업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①사회적 이익도 포함된 다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 사회가 어떠한 집단도 독점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다원(多元) 사회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이해 집단이 기업에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에 있는 집단으로는 노동 조합, 소비자 단체, 환경 단체, 지역 사회, 정부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이 이러한 다원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해 집단들의 요구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그 래야만 기업의 장기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19. 윗글에서 설명한 기업 목적의 성격 변화 과정과 유사한 것은?

① 관객이 늘어남에 따라 극장이 점차 대형화되었다.

→ (X) 극장이 대형화되는 것은 질적 변화 없이 양적으로만 외연이 확대되는 것이므로 윗글에서 설명한 기업 목적의 성격 변화 과정과 유사하지 않습니다.

②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우주의 신비가 점차 밝혀지게 되었다.

→ (X) 우주의 신비가 점차 밝혀지는 것은 우주에 대한 인류의 무지가 줄어드는 것, 또는 우주에 대한 인류의 지식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질적 변화 없이 양적으로만 늘어나는 변화입니다.

③ 생산 활동의 신속·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 설비가 도입되었다.

→ (X) 자동화 설비는 기존 생산 활동 수단보다 더 뛰어난 수단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도입하는(끌어들이는) 목적은 기존보다 '생산 활동의 신속·정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수단이 무엇이었던, '자동화 설비'는 그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준만 더 높음) 이는 질적으로 다른 목적이 추가되는 기업 목적의 성격 변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④ 인간은 자신의 생존만이 아니라 점차 환경과의 조화도 함께 고려하게 되었다.

→ (O) 윗글에 나타난 기업 목적의 성격 변화 과정은 '자본가의 이익', 즉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던 것에서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목적인 '사회적 이익'까지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rightarrow (A + B)$

선지 ④의 '인간'은 '자신의 생존'만 추구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환경과의 조화'도 고려하게 되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기존의 목적과 질적으로 다른 목적인 '환경과의 조화'를 추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선지의 '인간'의 '고려' 사항의 변화 과정은 기업 목적의 성격 변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⑤ 인류 역사의 초기에는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다가 점차 미래를 위해 음식을 저장하게 되었다.

→ (X) 초기에는 음식을 버리다가 이후에는 저장하게 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태도나 행동 양식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rightarrow B$

따라서 이는 윗글의 기업 목적 성격의 변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다. 기업 또한 이익 추구는 목적에서 탄생하여, 생산의 주체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곧 이익은 기업가로 하여금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이익에는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이익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이익이 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기업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가 장기 이익의 극대화와 상충할 때에는 단기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도 한다.

하루 세 번 칫솔질할 것을 권장하는 치과 의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모두가 이처럼 이를 닦으면 사람들의 치아 상태가 좋아져서 치과 의사의 단기 이익은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하게 되므로 치과 의사로서는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칫솔질을 자주 하지 않으면 단기 이익은 증가하겠지만, 의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장기 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을 구별하여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 소자본끼리의 자유 경쟁 상태에서는 단기든 장기든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에 경쟁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시켰다는 의미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소유자가 곧 경영자였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은 자본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경영 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경영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주주의 대리인으로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 경영인은 기업의 장기적 전망보다 단기 이익에 치중하여 경영 능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주는 경영자의 이러한 비효율적 경영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은 물론 기업의 장기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오늘날의 기업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포함된 다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 사회가 어떠한 집단도 독점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다원(多元) 사회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이해 집단이 기업에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에 있는 집단으로는 노동 조합, 소비자 단체, 환경 단체, 지역 사회, 정부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이 이러한 다원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해 집단들의 요구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그 래야만 기업의 장기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20. 밑글의 논지*에 비추어 ‘기업 : 이익’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논지: 논하는 말이나 글의 취지**.

취지: 어떤 일의 근본이 되는 목적이나 긴요한* 뜻.

***긴요하다: 「형용사」【…에/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① TV 방송 : 카메라

→ (X) 밑글에 나타난 ‘기업’과 ‘이익’의 관계는 ‘활동 주체’와 ‘활동 목적’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TV 방송과 카메라의 관계는 이러한 ‘활동 주체 : 활동 목적’의 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카메라는 TV 방송의 수단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② 시계 : 톱니바퀴

→ (X) 톱니바퀴는 시계의 구성요소입니다.

③ 연주회 : 지휘자

→ (X) 지휘자는 연주회를 성립시키는 주체 중 하나입니다.

④ 스포츠 : 규칙 준수

→ (X) 규칙 준수는 경쟁을 스포츠로 인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⑤ 정당 : 정권 획득

→ (O) 정당*의 활동 목적은 정권의 획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 이익’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 『정치』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다. 기업 또한 이익 추구라는 목적에서 탄생하여, 생산의 주체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곧 이익은 기업가로 하여금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이익에는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이익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이익이 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기업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가 장기 이익의 극대화와 상충할 때에는 단기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도 한다.

하루 세 번 칫솔질할 것을 권장하는 치과 의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모두가 이처럼 이를 닦으면 사람들의 치아 상태가 좋아져서 치과 의사의 단기 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하게 되므로 치과 의사로서는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칫솔질을 자주 하지 않으면 단기 이익은 증가하겠지만, 의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장기 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을 구별하여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 소자본끼리의 자유 경쟁 상태에서는 단기든 장기든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에 경쟁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시켰다는 의미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소유자가 곧 경영자였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은 자본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경영 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경영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주주의 대리인으로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 경영인은 기업의 장기적 전망보다 단기 이익에 치중하여 경영 능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주는 경영자의 이러한 비효율적 경영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은 물론 기업의 장기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오늘날의 기업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포함된 다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 사회가 어떠한 집단도 독점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다원(多元) 사회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이해 집단이 기업에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에 있는 집단으로는 노동 조합, 소비자 단체, 환경 단체, 지역 사회, 정부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이 이러한 다원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해 집단의 요구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그 래야만 기업의 장기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22. ㉠의 구체적인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업원 연수의 기회를 확대한다.

→ (X) 종업원 연수의 목적이 직무 능력 향상이라면, 이는 기업이 소유한 (인적) 자원의 가치를 높이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수와 같은 활동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 사례로는 볼 수 있겠으나, 사회적 이익의 구체적인 사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러한 종업원 연수 기회 확대를 통해 직무 능력이 향상되면, 기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업원 연수의 기회 확대'도 사회적 이익의 구체적 사례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 이익' 추구 활동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므로 위 선지 또한 사회적 이익의 구체적 사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분명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이는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시켰다는 의미이다.' 문장을 보아도 '기업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기업의 이익' 그 자체가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말은 아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② 고객에게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 (O) 고객에게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킨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③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 투자를 한다.

→ (O)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 투자는 다원 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인 환경 단체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킨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④ 지역 사회에 안락한 공원을 조성해 준다.

→ (O) 지역 사회 또한 다원 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로서 이들의 안락함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적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⑤ 불우 이웃을 위한 성금을 낸다.

→ (O) '불우 이웃'은 본문에서 정확히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불우 이웃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이들 또한 기업 활동과 간접적 이해 관계에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성금 출연'은 사회적 이익의 구체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가 시간을 갖고 인간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 시간은 주당 44시간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주당 40시간인 데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동 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노동자, 사용자, 정부 간의 이른바 노·사·정 협의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 시간의 양보다 질적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노동 시간의 단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즉, 노동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늘어난 여가 시간을 통해 자기 계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지식과 경험이 업무 수행 능력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시간의 노동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한 개인으로서 인간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물론, 노동자로서도 재충전의 기회를 충분히 갖게 된다. 이 경우 직장과 일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잔업이나 특근 등 지난날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해 발생했던 직업병과 산업 재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노동자 측의 주장이다.

반면에 기업 측에서는 법정 노동 시간의 단축이 실제로 노동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시간 외 일에 대한 초과 임금 지급으로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의 생산 차질과 노동 조건을 둘러싼 노사 마찰 때문에 노동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기술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외국으로 나가거나 기술 집약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성급한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야기될 노사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사용자 측은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 양측의 대립을 조정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는 노동 시간의 단축이 초래할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①실업 문제의 해소를 노동 시간 단축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당 노동 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토요일 휴무에 의한 주 5일제 근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가·문화·교육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고용이 창출되고 경기가 부양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해 ②사회 집단이나 계층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단절이 확산되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13.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기업은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노동의 질이 하락하여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X) 밑글에서 기업은 (법정)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노동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며,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을 뿐입니다.

② 노동자는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장시간의 노동에서 벗어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주장한다.

→ (O) 밑글에서 노동자 측은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인간 관계 회복과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것, 이로 인한 회복과 재충전은 삶의 질 향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밑글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노동자는 노동 시간의 단축이 능력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O) 밑글에서 노동 시간의 단축은 여가 시간을 늘리고, 늘어난 여가 시간은 자기 계발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업무 수행 능력이 높아지고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상승은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이익 증대로 연결될 것으로 이는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쟁력: 경쟁할** 만한 힘. 또는 그런 능력.

**경쟁하다: 같은 목적에 대하여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루다.

*제고하다: 쳐들리어 높아지다.

④ 기업은 동일한 노동 생산성 하에서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기업의 이익이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O) 밑글에서 기업은 (법정) 노동 시간의 단축이 실제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동일하므로 실제 노동 시간은 그대로일 것인데, 법정 노동 시간만 줄어든 것이므로, 줄어든 법정 노동 시간만큼 시간 외 일의 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초과 임금 지급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와 인건비가 상승하고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기업의 이익이 감소될 것이라는 선지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판단됩니다.

(전) 100시간 = 법정 노동 시간 44시간 + 초과 56시간
↓ (법정 노동 시간 4시간 단축) ↓

(후) 100시간 = 법정 노동 시간 40시간 + 초과 60시간

⑤ 정부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뿐 아니라, 노동 시간 단축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고 있다.

→ (O) 밑글에서 정부는 실업 문제의 해소, 여가·문화·교육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경기 부양을 기대하며 법정 노동 시간의 단축이 초래할 파급 효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가 시간을 갖고 인간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 시간은 주당 44시간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주당 40시간인 데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동 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노동자, 사용자, 정부 간의 이른바 노·사·정 협의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 시간의 양보다 질적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노동 시간의 단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즉, 노동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늘어난 여가 시간을 통해 자기 계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지식과 경험이 업무 수행 능력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시간의 노동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한 개인으로서 인간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물론, 노동자로서도 재충전의 기회를 충분히 갖게 된다. 이 경우 직장과 일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잔업이나 특근 등 지난날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해 발생했던 직업병과 산업 재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노동자 측의 주장이다.

반면에 기업 측에서는 법정 노동 시간의 단축이 실제로 노동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시간 외 일에 대한 초과 임금 지급으로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의 생산 차질과 노동 조건을 둘러싼 노사 마찰 때문에 노동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기술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외국으로 나가거나 기술 집약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성급한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야기될 노사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사용자 측은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 양측의 대립을 조정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는 노동 시간의 단축이 초래할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①실업 문제의 해소를 노동 시간 단축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당 노동 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토요일 휴무에 의한 주 5일제 근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가·문화·교육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고용이 창출되고 경기가 부양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해 ②사회 집단이나 계층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단절이 확산되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14. ㉠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노동 시간이 단축되어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 기업이 감량 경영 체제를 구축한다.
→ (X) 감량 경영 체제는 불황을 이겨 내기 위하여 기업 규모를 알맞게 줄여 경영하는 방식으로, 이것의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경기(불황/호황)이지, 노동 생산성 증가가 아니므로 선지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② 노동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노동 생산성이 증가한다면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 (O) ㉠의 주요 근거는 '노동 시간의 단축'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법정 노동 시간이 줄어들어도 실제 노동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전체 노동 시간을 유지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노동자들에게 초과 근무를 요구하기보다는 추가 고용을 통해 부족한 노동 시간을 채우려 할 것이란 예측입니다.

(전) 총 440시간 = 44시간 × 노동자 10명
↓ (법정 노동 시간 4시간 단축) ↓
(후) 총 440시간 = 40시간 × 노동자 11명
(+10% 고용 창출 효과)

그러나 만약 정부의 전제가 틀렸고, 노동자 측의 주장처럼 업무 수행 능력이 높아지고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노동 시간이 단축되는 성과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노동자의 수로 생산되는 상품의 양이 유지되거나 더 많을 수도 있어서(생산성 향상 정도에 따라 다름) 기업에서 굳이 추가로 노동자를 고용할 유인이 없어집니다.

(전) 연필 440개 = 44시간 × 노동자 10명(시간당 1개)
노동 440시간
↓ (법정 노동 시간 4시간 단축) ↓
(후) 연필 440개 = 40시간 × 노동자 10명(시간당 1.1개)
노동 400시간 (+10% 생산성 향상시)

따라서 ㉠의 숨어 있는 전제인 노동 '생산성의 비향상'을, 노동자 측의 논거를 인용하여 공격한 선지 ㉡의 반론은 아주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실업자가 증가하여 일자리 공유가 불가능해진다.

→ (X) 뒷글에서 기업 측은 노동 시간이 단축될 경우, 일부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을 겪을 것이라 했습니다. 인력난은 노동력이 부족하여 겪는 어려움을 뜻합니다.

④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기업이 노동자 수를 감축하여 실업자가 양산된다.

→ (X) 뒷글 어디에서도 노동 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수에 대한 감축 우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⑤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되어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

→ (X) 노사 갈등의 심화가 실업자 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얼마나 많은 여가 시간을 갖고 인간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 시간은 주당 44시간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주당 40시간인 데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동 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노동자, 사용자, 정부 간의 이른바 노·사·정 협의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 시간의 양보다 질적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노동 시간의 단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즉, 노동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늘어난 여가 시간을 통해 자기 개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지식과 경험이 업무 수행 능력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시간의 노동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한 개인으로서 인간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물론, 노동자로서도 재충전의 기회를 충분히 갖게 된다. 이 경우 직장과 일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잔업이나 특근 등 지난날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해 발생했던 직업병과 산업 재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노동자 측의 주장이다.

반면에 기업 측에서는 법정 노동 시간의 단축이 실제로 노동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시간 외 일에 대한 초과 임금 지급으로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의 생산 차질과 노동 조건을 둘러싼 노사 마찰 때문에 노동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기술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외국으로 나가거나 기술 집약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성급한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야기될 노사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사용자 측은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 양측의 대립을 조정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는 노동 시간의 단축이 초래할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실업 문제의 해소를 노동 시간 단축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당 노동 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토요일 휴무에 의한 주 5일제 근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가·문화·교육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고용이 창출되고 경기가 부양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해 ㉡사회 집단이나 계층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단절이 확산되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15. ㉠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노동 시간 단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의 불만이 증폭된다.
 - (X) 농어민은 노동 시간 단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맞습니다만, 애초에 법정 노동 시간의 제약이나 혜택을 받았던 계층이 아니므로 노동 시간 단축에 의해 새롭게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② 관광객 수의 증가에 따라 여가 관련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된다.
 - (X) 노동 시간의 단축에 따라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총수요가 증가했다는 것만으로 관련 기업의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이러한 경쟁을 사회 계층 간 갈등으로 해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관광지의 환경이 파괴되어 기업과 환경 단체 사이의 대립이 늘어났다.
 - (X) 관광객이 늘어나면 관광지의 환경이 파괴되는 수준이나 빈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업과 환경 단체가 대립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광지 환경 파괴의 원인은 기업이 아니라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관광객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영세 기업 노동자의 박탈감이 커진다.
 - (O)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전격 도입되는지 점진적으로 도입되는지, 이에 대해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업 측에서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생각해보면 노동 시간 단축이 사업장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점진적,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음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가령, 정부가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괄 의무 적용을 하고, 그 이하의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 유예 기간을 두어 중소기업에 배려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대기업이나 일부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주 5일 근무의 혜택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박탈감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노동 시간 단축에 의해 발생한 갈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 예시로 적절합니다.

*사업장: 어떤 사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
*영세: 「2」 살림이 보잘것없고 몹시 가난함.
- 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갈등이 심화된다.
 - (X) 법정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빈부 격차를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노동자는 부유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노동 시간 단축과 부유층-빈곤층 사이의 갈등은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가 시간을 갖고 인간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 시간은 주당 44시간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주당 40시간인 데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동 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노동자, 사용자, 정부 간의 이른바 노·사·정 협의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 시간의 양보다 질적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노동 시간의 단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즉, 노동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늘어난 여가 시간을 통해 자기 개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지식과 경험이 업무 수행 능력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시간의 노동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한 개인으로서 인간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물론, 노동자로서도 재충전의 기회를 충분히 갖게 된다. 이 경우 직장과 일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잔업이나 특근 등 지난날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해 발생했던 직업병과 산업 재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노동자 측의 주장이다.

반면에 기업 측에서는 법정 노동 시간의 단축이 실제로 노동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시간 외 일에 대한 초과 임금 지급으로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의 생산 차질과 노동 조건을 둘러싼 노사 마찰 때문에 노동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기술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외국으로 나가거나 기술 집약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성급한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야기될 노사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사용자 측은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 양측의 대립을 조정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는 노동 시간의 단축이 초래할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①실업 문제의 해소를 노동 시간 단축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당 노동 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토요일 휴무에 의한 주 5일제 근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가·문화·교육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고용이 창출되고 경기가 부양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해 ②사회 집단이나 계층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단절이 확산되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16. 뒷글에서 노사 양측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은?

① 기업의 사업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 (X) 기업의 사업 구조 조정은, 법정 노동 시간 단축이 시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중소기업이 택해야 하는 생존 전략으로서, 기업 측이 제시한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 측에서 주장된 바가 아니며,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시된 것도 아니므로 정답으로서 부적절합니다.

②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O)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로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들었고, 기업 측에서는 노동 시간 단축의 부정적 효과로서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주체 모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③ 기술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 (X) 뒷글에서 기업 측은 법정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기술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이 기술 수준이 높은 사업(기술 집약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선지①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노동 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방향을 제시된 것이지만 기업 측이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노동자 측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④ 중소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 (X) 뒷글에서 기업 측은 법정 노동 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므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되며, 넓게 보면 기업 측에서는 선지④를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측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고, 이를 동의한다고 추론할 만한 근거도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육성하다: 길러 자라게 하다.

⑤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 (X) 뒷글에서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체는 정부로 나타납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고용과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며, 기업 측에서는 인력난*을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만 나타날 뿐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은 읽어들 수 없습니다.

*인력난: 노동력이 부족하여 겪는 어려움.

날마다 언론에서는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투자 심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경제학에서는 ‘심리’에 대해 그다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2002년에 카네만이라는 심리학자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수여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학과 심리학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물론,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시기에 등장하여 자유방임의 철학에 수정을 가했던 케인스의 경제학이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성찰에 근거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케인스는 인간의 심리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파고들었다기보다, 우리의 의사 결정은 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우리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확률적으로도 파악하기 힘든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기에 인간의 행동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성을 갖추기보다는 때로는 직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동에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 그의 생각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회자되었을지언정 합리성을 전제로 한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바꾸어 놓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런데 카네만과 같은 확률 인지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경제학의 방법론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확률에 대해 판단할 때에 ‘주관적 추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A가 B에 속할 확률을 판단할 때 실제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보다 A가 B를 얼마나 닮았는지에 더 영향을 받는다면, ㉡ A의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쉬울수록 A가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거나, 또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자신의 평가를 조정하지만 최종적인 추정 결과는 처음의 평가 쪽으로 기울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주관적 추론은 편리한 인지 방법이지만, 체계적인 편향이나 심각한 오류를 낳기 쉽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이들은 합리적인 인간 행동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비판하는 연구로 나아갔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득에 관한 의사 결정과 손실에 관한 의사 결정 사이의 비일관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은 매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위험(risk)’을 기피하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위험을 선호하는 비일관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이해할 만한 것이기는 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정, 즉 위험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과는 모순된다. 카네만 등은 이러한 실험 결과가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싫어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해석하였다. 손실은 언제나 이득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합리성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기초하여 사회 현상을 다루어 온 경제학으로 하여금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정보다는 그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과연 심리학이 경제학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 귀추가 기대된다.

3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① 카네만은 경제학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강조하였다.

→ (X) 카네만이 등장하기 전, 이미 1930년대에도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성찰에 근거한 케인스 경제학이 있었음이 나타납니다.

② 케인스는 심리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변화시켰다.

→ (X) 뒷글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듯 케인스는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바꾸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그의 연구는 심리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③ 확률 인지 심리학은 주관적 추론의 체계적인 편향이나 오류를 시정했다.

→ (X) 뒷글에서 확률 인지 심리학은 ‘주관적 추론’이 ‘체계적인 편향이나 심각한 오류’를 낳는다는 것을 그저 알아냈다고만 서술되어 있을 뿐, 이를 시정했다고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시정하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

④ 확률 인지 심리학의 성과는 경제학의 접근 방법에 중요한 변화를 요구한다.

→ (O) 뒷글에서 카네만과 같은 확률 인지 심리학자들의 연구(성과)는 경제학의 방법론(접근 방법)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나타납니다. 인간 행동에 대한 막연한 가정(합리적으로 행동)보다는 그(인간 행동)에 대한 관찰(심리학적 연구)에서 출발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⑤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인간 행동에 대한 가정보다 관찰에 기초하여 합리성을 논한다.

→ (X) 뒷글에 나타나듯 기존의 경제학은 인간 행동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사회 현상을 다루어왔습니다. 따라서 ‘관찰에 기초’한다는 서술도 적절하지 않고, ‘합리성을 논한다’는 서술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A]

날마다 언론에서는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투자 심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경제학에서는 ‘심리’에 대해 그다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2002년에 카네만이라는 심리학자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수여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학과 심리학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물론,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시기에 등장하여 자유방임의 철학에 수정을 가했던 케인스의 경제학이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성찰에 근거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케인스는 인간의 심리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파고들었다기보다, 우리의 의사 결정은 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우리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확률적으로도 파악하기 힘든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기에 인간의 행동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성을 갖추기보다는 때로는 직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동에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 그의 생각은 경제학도들 사이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위로 회자되었을지언정 합리성을 전제로 한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바꾸어 놓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런데 카네만과 같은 확률 인지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경제학의 방법론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확률에 대해 판단할 때에 ‘주관적 추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A가 B에 속할 확률을 판단할 때 실제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보다 A가 B를 얼마나 닮았는지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거나, ㉡ A의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쉬울수록 A가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거나, 또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자신의 평가를 조정하지만 최종적인 추정 결과는 처음의 평가 쪽으로 기울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주관적 추론은 편리한 인지 방법이지만, 체계적인 편향이나 심각한 오류를 낳기 쉽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이들은 합리적인 인간 행동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비판하는 연구로 나아갔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득에 관한 의사 결정과 손실에 관한 의사 결정 사이의 비일관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은 매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위험(risk)’을 기피하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위험을 선호하는 비일관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이해할 만한 것이기는 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정, 즉 위험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과는 모순된다. 카네만 등은 이러한 실험 결과가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싫어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해석하였다. 손실은 언제나 이득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합리성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기초하여 사회 현상을 다루어 온 경제학으로 하여금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정보다는 그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과연 심리학이 경제학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 귀추가 기대된다.

37. 문맥상 ㉠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은? [1점]

㉠ 투자 관리는 예술도 과학도 아니고 공학이라는

→ (X) ‘직관’이나 ‘충동’과 관련된 어휘가 없습니다.

“투자 관리는 예술도 과학도 아니다. 그것은 공학이다.”
-마코비츠, 포트폴리오 선택(1952)

㉡ 직관은 많은 것을 하지만, 모든 것을 하지는 않는다는

→ (X) ‘직관’이라는 어휘가 그대로 쓰였습니다만, ‘직관’의 유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가치 판단이 드러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가치 판단’이 아니라 ‘사실’, ‘팩트’입니다. ‘직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충동에 좌우되기도 한다’는 인간 행동에 대한 사실적 서술이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어구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 시장에만 맡겨둔다면 비참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 (X) ‘시장’을 인간의 ‘합리성’이나 ‘충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라고 (마음대로)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비참한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을 케인스가 했다고 추론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 기업 투자는 이자율보다 기업가의 동물적 본능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 (O) 윗글에 나타난 케인스의 생각에서 핵심어를 찾아 보면, ‘합리성’ vs ‘직관’ + ‘충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 구도가 잘 나타나는 선지가 바로 위의 ㉣번 선지입니다.

㉤ 과학의 장점은 우리 인간을 미혹으로 이끄는 감정을 배제한다는 것이라는

→ (X) 감정을 배제한다는 것은 본문에 나타난 케인스의 인간 행동에 대한 생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A]

날마다 언론에서는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투자 심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경제학에서는 ‘심리’에 대해 그다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2002년에 카네만이라는 심리학자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수여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학과 심리학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물론,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시기에 등장하여 자유방임의 철학에 수정을 가했던 케인스의 경제학이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성찰에 근거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케인스는 인간의 심리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파고들었다기보다, 우리의 의사 결정은 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우리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확률적으로도 파악하기 힘든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기에 인간의 행동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성을 갖추기보다는 때로는 직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동에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 그의 생각은 경제학도들 사이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위로 회자되었을지언정 합리성을 전제로 한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바꾸어 놓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런데 카네만과 같은 확률 인지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경제학의 방법론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확률에 대해 판단할 때에 ‘주관적 추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A가 B에 속할 확률을 판단할 때 실제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보다 A가 B를 얼마나 닮았는지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거나, ㉠ A의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쉬울수록 A가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거나, 또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자신의 평가를 조정하지만 최종적인 추정 결과는 처음의 평가 쪽으로 기울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주관적 추론은 편리한 인지 방법이지만, 체계적인 편향이나 심각한 오류를 낳기 쉽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이들은 합리적인 인간 행동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비판하는 연구로 나아갔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득에 관한 의사 결정과 손실에 관한 의사 결정 사이의 비일관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은 매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위험(risk)’을 기피하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위험을 선호하는 비일관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이해할 만한 것이기는 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정, 즉 위험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과는 모순된다. 카네만 등은 이러한 실험 결과가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싫어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해석하였다. 손실은 언제나 이득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합리성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기초하여 사회 현상을 다루어 온 경제학으로 하여금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정보다는 그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과연 심리학이 경제학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 귀추가 기대된다.

38. ㉠의 구체적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동전던지기를 하는데 앞면이 다섯 번 연이어 나왔을 때, 다음에는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 (X)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쉽고 어렵고의 차이에 근거한 판단이 아닙니다.

② 교통사고 소식이 위암으로 인한 사망 소식보다 대중 매체에 더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이 위암으로 사망할 가능성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 (O) 이 선지를 보고, “나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사망할 가능성보다 위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지 않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윗글만으로 어떻게 교통사고보다 위암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을 알 수 있느냐”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 두 가지의 의문은 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 관련이 없는 질문입니다.

㉠의 핵심은 ‘주관적 추론’의 부정확성이 아닙니다. 추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비합리성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위 선지에 대한 판단 포인트는 ‘때문에’에 있습니다. 매체에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사망 사례)를 떠올리기 쉽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위암으로 인한 것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그 인과 관계의 비합리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 선지는 ㉠의 구체적 사례로 가장 적절합니다.

③ 50달러와 25달러로 나누어 받는 것보다 75달러를 한꺼번에 받는 것을 선호하는 데 반해, 150달러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보다는 100달러를 내고 다음에 50달러를 지불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 (X)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쉽고 어렵고의 차이에 근거한 판단이 아닙니다.

④ ‘ $1 \times 2 \times 3 \times 4 \times 5 \times 6 \times 7 \times 8$ ’이라고 칠판에 쓰면서 5초 이내에 답하라고 하였을 때 응답자들이 낸 답의 중앙값은 512였으나, ‘ $8 \times 7 \times 6 \times 5 \times 4 \times 3 \times 2 \times 1$ ’이라고 쓴 경우에는 2,250이었다. 정답은 40,320이다.

→ (X)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쉽고 어렵고의 차이에 근거한 판단이 아닙니다.

⑤ 값이 15달러인 계산기를 구입하는 상황에서 5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20분 더 운전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68%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데 반해, 125달러인 계산기를 구입하는 상황에서는 29%만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 (X)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쉽고 어렵고의 차이에 근거한 판단이 아닙니다.

[A]

날마다 언론에서는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투자 심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경제학에서는 ‘심리’에 대해 그다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2002년에 카네만이라는 심리학자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수여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학과 심리학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물론,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시기에 등장하여 자유방임의 철학에 수정을 가했던 케인스의 경제학이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성찰에 근거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케인스는 인간의 심리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파고들었다기보다, 우리의 의사 결정은 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우리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확률적으로도 파악하기 힘든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기에 인간의 행동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성을 갖추기보다는 때로는 직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동에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 그의 생각은 경제학도들 사이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회자되었을지언정 합리성을 전제로 한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바꾸어 놓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런데 카네만과 같은 확률 인지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경제학의 방법론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확률에 대해 판단할 때에 ‘주관적 추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A가 B에 속할 확률을 판단할 때 실제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보다 A가 B를 얼마나 닮았는지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거나, ㉡ A의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쉬울수록 A가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거나, 또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자신의 평가를 조정하지만 최종적인 추정 결과는 처음의 평가 쪽으로 기울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주관적 추론은 편리한 인지 방법이지만, 체계적인 편향이나 심각한 오류를 낳기 쉽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이들은 합리적인 인간 행동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비판하는 연구로 나아갔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득에 관한 의사 결정과 손실에 관한 의사 결정 사이의 비일관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은 매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위험(risk)’을 기피하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위험을 선호하는 비일관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이해할 만한 것이기는 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정, 즉 위험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은 모순된다. 카네만 등은 이러한 실험 결과가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싫어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해석하였다. 손실은 언제나 이득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합리성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기초하여 사회 현상을 다루어 온 경제학으로 하여금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정보다는 그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과연 심리학이 경제학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 귀추가 기대된다.

39. [A]와 관련지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피실험자들에게 4,000달러를 벌 확률이 80%이고 한 푼도 못 얻을 가능성이 20%인 경우와, 100%의 가능성으로 3,000달러를 벌는 경우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었다. 앞의 것을 선택할 경우에 수학적 기댓값(3,200달러)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실험자의 80%가 확실하게 3,000달러를 벌는 쪽을 선택하였다. 경제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을 기피한 것이다.

다음으로, 4,000달러를 잃을 확률이 80%이고 한 푼도 잃지 않을 가능성이 20%인 경우와, 100%의 확률로 3,000달러를 잃는 경우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물었다. 이 실험에서는 92%의 응답자가 손실의 기댓값이 더 큰 도박 쪽을 택했다. 이번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험을 선호한 것이다.

- ① 경제학에서는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을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것 같은.
 - (X) 뒷글에서 위험에 관한 합리성의 판단 기준은 ‘태도의 일관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선호 또는 기피라는 태도 그 자체만으로는 비합리적임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 ②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일관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실험 결과이군.
 - (O) 뒷글에서 언급했듯이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비일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 ③ 경제학적 합리성에는 위배될지라도 사람들은 그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군.
 - (O) <보기>에 나타난 사람들의 행동은 경제학적으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태도의 비일관성), 손실을 회피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손실 기댓값이 더 크고 위험하더라도 선택을 강행하는, 손실 회피의 측면에서는 나름의 일관성이 발견됩니다.
- ④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은 기대되는 이익이 조금 적더라도 확실한 쪽을 더 낫다고 생각하는군.
 - (O) <보기>에서 100%로 3000\$를 얻게 되는 선택을 한 사람들은, 위험한 선택에 비해 기대되는 이익(기댓값)이 200\$ 더 적더라도 안전한 쪽을 택했습니다.
- ⑤ 경제학에서는 실현될 수 있는 결과 값이 기댓값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가지고 위험을 측정하는군.
 - (O) <보기>에서 위험하다고 서술된 선택은 기댓값과 결과 값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안전하다고 서술된 선택은 기댓값과 결과 값이 동일했습니다. 즉, 경제학에서는 두 값의 거리가 곧 위험도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옵션(option)’이라면 금융 상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옵션의 성격을 갖는 현상이 참 많다. 옵션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위험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시기(행사 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 가격)으로 어떤 상품(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옵션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하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탈레스는 올리브유 압착기에 대한 옵션을 개발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압착기를 빌려야 했다. 탈레스는 파종기에 미리 조금의 돈을 주고 수확기에 일정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 두었다. 만약 올리브가 풍작이면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탈레스는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려서, 수확기에 새로 형성된 임대료로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 흉작이면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탈레스가 파종기에 계약을 통해 사 둔 권리는 그 성격상 ‘살 권리’라는 옵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성격 때문에 옵션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낳는다. 즉, 미래에 기초 자산의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옵션을 구입한 사람의 수익이 늘어나게 해 주지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해도 그의 손실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사기 위해 지급하는 돈, 즉 ‘옵션 프리미엄’은 이러한 보장을 제공 받기 위해 치르는 비용인 것이다.

옵션 가운데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식 옵션의 사례를 살펴보면 옵션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한층 더 쉽다.

가령, 2년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당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천 원에 샀다고 하자. 2년 후에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이 옵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1만 5천 원이라면 1만 원에 사서 5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되므로 옵션 구입 가격 1천 원을 제하면 수익은 주당 4천 원이 된다. 하지만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옵션을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1천 원에 그친다.

여기서 주식 옵션을 가진 사람의 수익이 기초 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화에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 회사가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영자가 옵션을 지급 받는 대신 포기한 현금을 옵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

수익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옵션은 적은 돈으로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때문에 옵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게 해 주는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옵션 보유자가 기초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옵션은 보유자로 하여금 더 큰 위험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주식을 살 권리를 가진 경영자의 경우에는 기초 자산의 가격을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만, 그런 사업일수록 가격을 많이 하락시킬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옵션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주주와 경영자의 행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무척 중요하다.

5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주식 옵션은 매매될 수 없다.

→ (X)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주식 옵션)을 샀다고 했으므로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선지는 적절하지 않아요. 주식 옵션을 산 사람이 있다는 것은 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하므로, 본문에서 ‘샀다’는 말만 나타나도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매매: 물건을 팔고 사는 일.

② 옵션은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권리는 아니다.

→ (O)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하지 않을 수도(옵션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③ 옵션의 행사 가격은 행사 시기에 가서 정해진다.

→ (X) 옵션의 행사 가격은 옵션이 매매되는 시점에 이미 정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④ 주식 이외의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옵션은 없다.

→ (X) 뒷글에서 ‘옵션’은 ‘금융 상품’의 하나라고 했고, ‘기초 자산’은 어떤 상품이라고만 언급했을 뿐 반드시 주식이어야 한다는 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옵션 가운데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옵션’이 있다는 본문의 문장을 살펴보면, 기초 자산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고, 그 중 하나가 주식 옵션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⑤ 옵션 프리미엄은 옵션을 행사한 후에 얻게 되는 이득이다.

→ (X) 미래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 옵션 프리미엄입니다. 행사한 후에 얻게 되는 이득을 지칭하는 용어는 별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A]

‘옵션(option)’이라면 금융 상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옵션의 성격을 갖는 현상이 참 많다. 옵션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위험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시기(행사 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 가격)으로 어떤 상품(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옵션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하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탈레스는 올리브유 압착기에 대한 옵션을 개발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압착기를 빌려야 했다. 탈레스는 파종기에 미리 조금의 돈을 주고 수확기에 일정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 두었다. 만약 올리브가 풍작이면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탈레스는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려서, 수확기에 새로 형성된 임대료로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홍작이면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탈레스가 파종기에 계약을 통해 사 둔 권리는 그 성격상 ‘살 권리’라는 옵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성격 때문에 옵션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낳는다. 즉, 미래에 기초 자산의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옵션을 구입한 사람의 수익이 늘어나게 해 주지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해도 그의 손실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사기 위해 지급하는 돈, 즉 ‘옵션 프리미엄’은 이러한 보장을 제공 받기 위해 치르는 비용인 것이다.

옵션 가운데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식 옵션의 사례를 살펴보면 옵션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한층 더 쉽다.

가령, 2년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당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천 원에 샀다고 하자. 2년 후에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이 옵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1만 5천 원이라면 1만 원에 사서 5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되므로 옵션 구입 가격 1천 원을 제하면 수익은 주당 4천 원이 된다. 하지만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옵션을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1천 원에 그친다.

여기서 주식 옵션을 가진 사람의 수익이 기초 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화에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영자가 옵션을 지급 받는 대신 포기한 현금을 옵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

수익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옵션은 적은 돈으로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때문에 옵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게 해 주는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옵션 보유자가 기초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옵션은 보유자로 하여금 더 큰 위험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주식을 살 권리를 가진 경영자의 경우에는 기초 자산의 가격을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만, 그런 사업일수록 가격을 많이 하락시킬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옵션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주주와 경영자의 행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무척 중요하다.

53.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압착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 (X) 적절한 추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 압착기를 빌리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 (X) 적절한 추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압착기를 빌리기는 더 쉬워질 겁니다.

③ 압착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 (X) 적절한 추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압착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 겁니다.

④ 압착기 임대 계약금을 돌려받기 쉬워지기 때문에

→ (X) 적절한 추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글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옵션은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으로 보입니다.

⑤ 압착기의 임대료가 계약한 수준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 (O) 뒷글에서 기하학의 아버지 탈레스가 기하학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떻게 돈을 버셨는지 파악해봅시다 (농담입니다). 탈레스가 이윤을 남기려면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가 수확기의 임대료보다 낮아야 합니다.

수확기 임대료 - 계약 임대료 = 이윤!
(단, 수확기 임대료 > 계약 임대료)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이 되려면 올리브 농사가 풍작이어야 합니다. 풍작이면 압착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짐) 가격이(임대료가) 상승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홍작이면 어떻게 될까요? 홍작이면 압착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빌리려는 사람이 적어짐) 가격이(임대료가) 하락한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확기의 임대료가 계약한 임대료보다 더 낮게 형성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만약 이런 상황에서 옵션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가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 수확기 임대료가 100₩인데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가 200₩이었다고 생각해봅시다. 200₩에 빌려서 시장에서 다시 100₩에 빌려주면 한 대를 빌려줄 때마다 100₩씩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옵션 프리미엄이 얼마였든간에 옵션을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옵션 프리미엄만큼 손해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옵션을 행사하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므로,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옵션(option)’이라면 금융 상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옵션의 성격을 갖는 현상이 참 많다. 옵션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위험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시기(행사 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 가격)으로 어떤 상품(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옵션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하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탈레스는 올리브유 압착기에 대한 옵션을 개발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압착기를 빌려야 했다. 탈레스는 파종기에 미리 조금의 돈을 주고 수확기에 일정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 두었다. 만약 올리브가 풍작이면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탈레스는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려서, 수확기에 새로 형성된 임대료로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흉작이면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탈레스가 파종기에 계약을 통해 사 둔 권리는 그 성격상 ‘살 권리’라는 옵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성격 때문에 옵션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낳는다. 즉, 미래에 기초 자산의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옵션을 구입한 사람의 수익이 늘어나게 해 주지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해도 그의 손실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사기 위해 지급하는 돈, 즉 ‘옵션 프리미엄’은 이러한 보장을 제공 받기 위해 치르는 비용인 것이다.

옵션 가운데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식 옵션의 사례를 살펴보면 옵션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한층 더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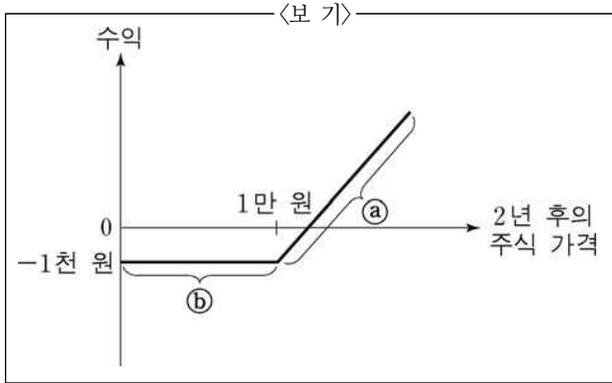
가령, 2년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당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천 원에 샀다고 하자. 2년 후에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이 옵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1만 5천 원이라면 1만 원에 사서 5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되므로 옵션 구입 가격 1천 원을 제하면 수익은 주당 4천 원이 된다. 하지만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옵션을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1천 원에 그친다.

여기서 주식 옵션을 가진 사람의 수익이 기초 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화에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영자가 옵션을 지급 받는 대신 포기한 현금을 옵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

수익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옵션은 적은 돈으로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때문에 옵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게 해 주는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옵션 보유자가 기초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옵션은 보유자로 하여금 더 큰 위험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주식을 살 권리를 가진 경영자의 경우에는 기초 자산의 가격을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만, 그런 사업일수록 가격을 많이 하락시킬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옵션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주주와 경영자의 행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무척 중요하다.

54. [A]에서 2년 후의 상황을 <보기>의 그래프로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함을 보여 준다.

→ (O) [A]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래프상으로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어서 순간부터(㉠구간) 수익이 -1000₩에서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간의 일부는 분명 수익이 음수값(-)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왜 본문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말하는 것 일까요? ㉠구간에서 음수값이 나타나는 구간은 주식 가격이 10000₩ ~ 11000₩인 구간입니다.

<주식 가격이 11,000₩인 경우의 시뮬레이션>
 주식 옵션을 행사해서 10,000₩에 사서 (-10,000₩)
 주식 시장에 갖다팔면 11,000₩을 얻고 (+11,000₩)
 주식 옵션의 프리미엄인 1,000₩을 빼면 (-1000₩)
 결국 남는 것은 0₩!

만약 주식 가격이 1만₩이 넘은 순간부터, 그래프상에서 수익이 0이 되는 지점인, 주식 가격이 1만1천₩이 되는 시점까지 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손실이 조금이나마 감소되지 않고 꾸준히 -1000₩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즉 주식 가격이 10001₩인 경우, 옵션을 행사하면 1₩의 차익을 얻어 이미 지불한 비용인 옵션 프리미엄 -1000₩의 손실을 -999₩로 줄일 수 있었기에 그래프가 조금씩이나마 우상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식 가격이 10,000₩보다 단 1₩이라도 높다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는 주식 가격이 아무리 낮아져도 손실은 일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O) 뒷글에 나타나듯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더라도 옵션만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옵션 프리미엄인 -1000₩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③ ㉢의 모양이 수평인 것은 구입한 주식 옵션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 (X)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포기했기 때문에 손실이 일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식 가격이 10,000₩보다 낮은 상황에서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주식 가격이 하락한 만큼 추가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식 가격이 9,000₩이라면, 옵션을 행사할 경우 -1,000₩의 손실이 발생하고(계약 금액은 10,000₩이었으므로 주식을 10,000₩에 사서 9,000₩에 되파는 삽질), 여기에 옵션 프리미엄 비용이 있었으니 -1,000₩이 가산되므로 손실이 -2,000₩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④ ㉣가 세로축의 0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것은 옵션 프리미엄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O) ㉣구간은 주식 가격이 10,000₩보다 낮아서 옵션을 포기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주식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든 손실이 -1,000₩으로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옵션 프리미엄이 1,000₩이었기 때문입니다.

⑤ ㉠와 ㉡의 모양이 다른 것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 (O) ㉠의 모양이 우상향인 것은 옵션 보유자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이고, ㉡의 모양이 수평인 것은 옵션 보유자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옵션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수익의 비대칭성, 즉 손실의 최댓값은 옵션 프리미엄의 크기만큼으로 일정하지만, 수익은 주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비례하여 상승하는 옵션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option)’이라면 금융 상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옵션의 성격을 갖는 현상이 참 많다. 옵션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위험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시기(행사 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 가격)으로 어떤 상품(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옵션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하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탈레스는 올리브유 압착기에 대한 옵션을 개발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압착기를 빌려야 했다. 탈레스는 파종기에 미리 조금의 돈을 주고 수확기에 일정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 두었다. 만약 올리브가 풍작이면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탈레스는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려서, 수확기에 새로 형성된 임대료로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 흉작이면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탈레스가 파종기에 계약을 통해 사 둔 권리는 그 성격상 ‘살 권리’라는 옵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성격 때문에 옵션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낳는다. 즉, 미래에 기초 자산의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옵션을 구입한 사람의 수익이 늘어나게 해 주지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해도 그의 손실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사기 위해 지급하는 돈, 즉 ‘옵션 프리미엄’은 이러한 보장을 제공 받기 위해 치르는 비용인 것이다.

옵션 가운데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식 옵션의 사례를 살펴보면 옵션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한층 더 쉽다.

가령, 2년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당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천 원에 샀다고 하자. 2년 후에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이 옵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1만 5천 원이라면 1만 원에 사서 5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되므로 옵션 구입 가격 1천 원을 제하면 수익은 주당 4천 원이 된다. 하지만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옵션을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1천 원에 그친다.

여기서 주식 옵션을 가진 사람의 수익이 기초 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화에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 회사가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영자가 옵션을 지급 받는 대신 포기한 현금을 옵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

수익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옵션은 적은 돈으로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때문에 옵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게 해 주는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옵션 보유자가 기초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옵션은 보유자로 하여금 더 큰 위험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주식을 살 권리를 가진 경영자의 경우에는 기초 자산의 가격을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만, 그런 사업일수록 가격이 많이 하락시킬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옵션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주주와 경영자의 행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무척 중요하다.

55. ㉠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경영자가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추구하도록

→ (X) 뒷글에 노동자들의 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 경영자가 주식 가격의 상승을 추구하도록

→ (O) 경영자가 주식 옵션을 갖게 된다면, 경영자의 수익은 기초 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주식 가격이 옵션에 계약된 가격보다 상승한다면, 상승한 차액만큼 이익이 되기 때문에 경영자는 주식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경영자가 주식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면, 결국 회사의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경영자가 덜 위험한 사업을 선택하도록

→ (X) 뒷글에서 설명하듯 주식 옵션을 지급하게 되면 경영자는 더욱 공격적인 경영활동, 주식 가격의 하락 위험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영자가 사업의 다각화를 추구하도록

→ (X) 뒷글에 사업의 다각화, 즉 다양한 방면으로의 사업 전개와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 경영자가 사회 공익을 추구하도록

→ (X) 뒷글에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테니스 선수 그라프는 1992년에 우승을 통해 거액을 벌었지만, 유독 속적인 셀레스에게는 계속해서 패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셀레스가 사고를 당해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그라프는 경기 능력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승률이 거의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우승 상금은 물론 광고 출연 등의 부수적 이익 또한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위치적 외부성'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한 사람의 보상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외부성이라고 한다. 특히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보상이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성과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 위치적 외부성이라고 한다.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할 경우에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수단은 반드시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위치를 하락시킨다. 그라프의 사례는 경쟁자의 성과에 의해 자신의 위치적 보상이 크게 상승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위치적 외부성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예컨대 한 경쟁자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 이는 다른 경쟁자들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른 경쟁자들 또한 지출을 늘리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경쟁자가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반복적으로 늘린다면, 경쟁자 간의 실질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인 성과에 따른 각 경쟁자의 위치적 보상 정도가 클수록 이와 같은 투자의 유인은 커진다.

위치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람들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린다. 그러나 경쟁자의 위치에 따른 이익이 한정되어 있고 투자의 결과 각자의 위치에 별 효과가 없다면 소모적인 지출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투자 행태를 군비 경쟁에 비유하여 ㉡ '위치적 군비 경쟁'이라고 부른다. 위치적 군비 경쟁은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데, 이는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결과가 사회 전체에 다소간 기여할 수 있다면 모든 구성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고 더 이상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과도한 투자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더구나 개인 간에 위치적 외부성이 강하게 작용하면, 사회적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사회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면 경쟁을 자제시키는 사회적 규범이 생겨나거나 경쟁을 제약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사회적 협약이 마련되기도 한다.

19. 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1점]

- ① 위치적 외부성은 비슷한 수준의 경쟁자 사이에서 크게 작용한다.
 - (O)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한다는 것은, 경쟁자의 상대적 성과에 의해 자신의 상대적 위치가 변화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보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상대적 위치와 관련성이 높은 경쟁자, 즉 자신과 순위가 비슷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위치적 외부성이 강하게 작용할 것을 추론할 수 있게 합니다.
 - 예를 들어 매년 1~2위를 다투는 최상위권 야구팀은 만년 꼴찌인 야구팀이 겨울 전지훈련을 하와이로 가든 뉴욕으로 가든 아무 신경이 쓰이지 않을 겁니다. 반면 올해 준우승팀이 모기업의 지원 아래 겨울 전지훈련을 LA로 가서 메이저리그 팀과 함께 훈련을 하기로 했다면, 올해 우승팀은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쿠바 대표팀을 초청하든가, 다른 메이저리그 팀과 협력을 추진하든가 해서 경쟁적으로 투자를 해야만 왕좌를 지킬 수 있겠죠.
- ② 위치적 외부성이 나타나면 경쟁자의 비용 지출이 수반될 수 있다.
 - (O) 각자의 상대적 성과에 따라 상대적 위치가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누군가 투자를 늘리면 경쟁자는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위가 하락하고, 하락한 순위(상대적 위치)는 위치적 보상의 하락을 불러오기 때문이지요.
- ③ 위치적 보상은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의 차이가 클수록 증가한다.
 - (X) 위치적 보상은 경쟁자의 성과와 자신의 성과에 따른 상대적 위치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경제적 비효율성'입니다.
 - *유인: 어떤 일 또는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 *(경제적) 유인: 사람들의 행동이나 선택을 유도하거나 바꿀 수 있게 하는 요인.
 - ※ 경제 관련 글에 나타난 '유인'은 '경제적 유인'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 ④ 위치적 군비 경쟁의 비효율성을 인식하면 사회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 (O) 사회적 규범이나 사회적 협약은 사회적 해결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⑤ 위치적 외부성으로 인한 경쟁의 결과가 경쟁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 (O) 경쟁의 결과, 경쟁자들 간의 순위가 변화했다면 상대적 위치가 상승한 사람은 이익이 되겠지만 하락한 사람은 손해일 것입니다. 만약 경쟁자들 간의 순위가 변화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위치에 따른 이익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경쟁을 위한 지출이 이익을 창출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 선수 그라프는 1992년에 우승을 통해 거액을 벌었지만, 유독 속적인 셀레스에게는 계속해서 패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셀레스가 사고를 당해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그라프는 경기 능력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승률이 거의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우승 상금은 물론 광고 출연 등의 부수적 이익 또한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위치적 외부성'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한 사람의 보상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외부성이라고 한다. 특히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보상이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성과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 위치적 외부성이라고 한다.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할 경우에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수단은 반드시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위치를 하락시킨다. 그라프의 사례는 경쟁자의 성과에 의해 자신의 위치적 보상이 크게 상승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위치적 외부성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예컨대 한 경쟁자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 이는 다른 경쟁자들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른 경쟁자들 또한 지출을 늘리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경쟁자가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반복적으로 늘린다면, 경쟁자 간의 실질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인 성과에 따른 각 경쟁자의 위치적 보상 정도가 클수록 이와 같은 투자의 유인은 커진다.

위치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람들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린다. 그러나 경쟁자의 위치에 따른 이익이 한정되어 있고 투자의 결과 각자의 위치에 별 효과가 없다면 소모적인 지출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투자 행태를 군비 경쟁에 비유하여 ㉡ '위치적 군비 경쟁'이라고 부른다. 위치적 군비 경쟁은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데, 이는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결과가 사회 전체에 다소간 기여할 수 있다면 모든 구성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고 더 이상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과도한 투자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더구나 개인 간에 위치적 외부성이 강하게 작용하면, 사회적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사회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면 경쟁을 자제시키는 사회적 규범이 생겨나거나 경쟁을 제약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사회적 협약이 마련되기도 한다.

20. ㉠이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사퇴가 나머지 후보들의 당선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 (O)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경쟁자)들 중 1명만 당선되는 것을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 후보가 '사퇴'라는 성과를 보인다면, 나머지 후보들의 당선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특정 후보(경쟁자A)의 상대적 성과에 의해 다른 후보(경쟁자B)의 위치적 보상이 영향을 받는 위치적 외부성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② 프로 경기 식전 행사에서 유명 가수가 공연하면 관중이 크게 늘어 참가 선수들이 출전 수당을 더욱 많이 받게 된다.
 - ➔ (X) 유명 가수와 참가 선수들은 서로 경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치적 외부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때 만약 유명 가수에게 그 어떤 비용도 지불된 바가 없다면, 또는 비용이 지불되었더라도 그 비용을 어떤 식으로든 참가 선수들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면, 외부성 현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 ③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좋은 좌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열기 전에 줄을 길게 서기도 한다.
 - ➔ (O)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경쟁자입니다. 모두들 좋은 좌석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누가 먼저 줄을 서느냐(상대적 성과)에 따라 좌석(위치적 보상)이 결정됩니다. 이는 위치적 외부성이 나타난 사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④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이 다른 학생들보다 한두 해 늦게 입학하면 학업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의 취학을 미루려고 한다.
 - ➔ (O) 서로 취학을 미루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학업 성취도'라는 성과를 얻기 위한 학부모들 간의 경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위치적 외부성이 나타난 사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시야말로 위치적 외부성이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줄을 세우는 시험에서의 위치적 외부성은 필연적입니다.
- ⑤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므로, 모두가 남보다 더 크게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알아듣기가 더욱 힘들게 된다.
 - ➔ (O) 많은 사람들이 (A-B, C-D, E-F, G-H ...) 동시에 말을 하고 있으면, 더 크게 말을 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의사소통이라는 성과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키우는 이런 상황은 위치적 외부성이 나타나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 선수 그라프는 1992년에 우승을 통해 거액을 벌었지만, 유독 속적인 셀레스에게는 계속해서 패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셀레스가 사고를 당해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그라프는 경기 능력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승률이 거의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우승 상금은 물론 광고 출연 등의 부수적 이익 또한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위치적 외부성'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한 사람의 보상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외부성이라고 한다. 특히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보상이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성과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 **위치적 외부성**이라고 한다.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할 경우에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수단은 반드시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위치를 하락시킨다. 그라프의 사례는 경쟁자의 성과에 의해 자신의 위치적 보상이 크게 상승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위치적 외부성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예컨대 한 경쟁자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 이는 다른 경쟁자들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른 경쟁자들 또한 지출을 늘리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경쟁자가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반복적으로 늘린다면, 경쟁자 간의 실질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인 성과에 따른 각 경쟁자의 위치적 보상 정도가 클수록 이와 같은 투자의 유인은 커진다.

위치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람들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린다. 그러나 경쟁자의 위치에 따른 이익이 한정되어 있고 투자의 결과 각자의 위치에 별 효과가 없다면 소모적인 지출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투자 행태를 군비 경쟁에 비유하여 ㉡ **'위치적 군비 경쟁'**이라고 부른다. 위치적 군비 경쟁은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데, 이는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결과가 사회 전체에 다소간 기여할 수 있다면 모든 구성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고 더 이상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과도한 투자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더구나 개인 간에 위치적 외부성이 강하게 작용하면, 사회적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사회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면 경쟁을 자제시키는 사회적 규범이 생겨나거나 경쟁을 제약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사회적 협약이 마련되기도 한다.

21. ㉠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다른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 (X) 다른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면, 경쟁자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렸는지를 알 수가 없어 경쟁적인 지출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지출 수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이어야만 위치적 외부성 및 위치적 군비 경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 ㄴ. 집단 내 경쟁자들의 이익의 합이 변하지 않는다.
 - (O) 집단 내 경쟁자들의 이익의 합이 일정할 때, 위치적 군비 경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등, 2등, 3등...에 대한 보상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 ㄷ.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의 효력이 강하다.
 - (X)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의 효력이 강하면, 과도한 경쟁이 차단됩니다.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행위가 예방되는 것입니다. 이는 위치적 군비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ㄹ. 경쟁자들은 위치적 보상이 성과 향상을 위한 지출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한다.
 - (O) 위치적 군비 경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위치적 보상(편익)이 지출(투자 비용)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출(투자 비용)이 위치적 보상(편익)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손해를 보는 셈인데, 그런 전제 하에서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율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 을 곱한 11억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원의 현재 가치는 $(1+0.1)$ 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볼릴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 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공공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위 글의 글쓴이가 상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장 이자율과 사회적 할인율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 (X) 이 글에서 시장 이자율은 사회적 할인율을 바람직하게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하나의 주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글의 핵심은 아닙니다.
- ② 자본 시장에서 미래 세대의 몫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 (X) 사회적 할인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몫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은 나타납니다만, 자본 시장(대출과 저축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미래 세대를 어떻게 배려할지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③ 사회적 할인율이 민간 자본의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X) 사회적 할인율이 민간 자본의 수익률에 끼치는 영향은 이 글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④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가?
 - (O) 뒷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문단: 사업 타당성 진단에 활용되는, 할인율의 개념
 - 2문단: 공공사업의 타당성 진단에 활용되는 사회적 할인율
 - 3문단: 사회적 할인율을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 수익률로 간주하자는 주장의 근거와 요지
 - 4문단: 사회적 할인율을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 수익률로 간주할 수 없는 이유 및 바람직한 사회적 할인율 책정의 방향.
 종합하면, 뒷글은 사회적 할인율이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장의 논리를 비판하며, 사회적 할인율은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글입니다.
- ⑤ 공공 부문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가?
 - (X) 공공 부문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이 글에 나타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율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 을 곱한 11억 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 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볼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 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5. ㉠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① 민간 투자도 공익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X) 민간 투자가 공익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②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투자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X) 선도한다는 것은 앞장서서 이끌거나 안내한다는 것인데, ㉠의 내용은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는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같은 부문에 함께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각자의 투자 영역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③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는 동등한 투자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 (X) ㉠은 오히려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이라면 정부는 투자를 철회하는 것이 낫다는 듯한 뉘앙스의 문장입니다. 동등한 투자 기회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④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X) 수익률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좀 된다 싶은 공공 부문의 사업이라면, 민간이 알아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정부는 손을 떼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중에서도 수익률이 낮아 민간이 투자하지 않는 부문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의 주장입니다.

⑤ 정부는 민간 기업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 부문을 보완해야 한다.

→ (O) ㉠의 내용을 쪼개어 보겠습니다.

1.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으로 볼 수 있다.

2. 민간 투자가 가능한 공공 부문은 정부의 투자 필요성이 작다.

이를 통해 읽어낼 수 있는 내용은, '3. 정부의 투자는 낮은 수익률로 민간 투자가 어려운 공공 부문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율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 을 곱한 11억 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 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볼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 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①공공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6. 위 글로 보아 <보기>의 ㉠에 대한 판단으로 타당한 것은? [3점]

—<보 기>—

한 개발 업체가 어느 지역의 자연 환경을 개발하여 놀이 동산을 건설하려고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연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여 놀이동산의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시하여 찬성하는 사람들로 갈리어 있다. 그래서 개발 업체와 지역 주민들은 ㉠놀이동산으로부터 장기간 파급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이익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계산해 보기로 하였다.

- ①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주민들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X) 사업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생각되면, 놀이동산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겁니다. 이들은 놀이동산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딱딱 깎아내릴 것입니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깎이는 양이 적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점에서 세일할 때 할인율이 높으면 물건 값을 많이 깎아주지 않습니까? 할인율이 낮으면 물건 값을 적게 깎아주는 것이고요. 사업 타당성도 똑같습니다. 열도당도 않은 사업은 높은 할인율로 후려쳐서 낮은 현재 가치를 매기게 되고, 그럴듯한 사업은 낮은 할인율로 조금만 깎아서 높은 가치를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 ②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O) 자연 환경의 가치를 중시한다면 자연 개발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이들은 놀이동산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딱딱 깎아내릴 것입니다.
- ③ 개발 업체는 놀이동산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X) 개발 업체는 사업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주장하고 자 할 것이므로(당위성 확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겠죠. 자기 사업의 현재 가치를 자기가 후려칠, 너무나 검허한 사업자는...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겁니다.
- ④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X) 소득 증진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놀이동산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죠. 이들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사업의 현재 가치를 크게 깎아내리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 ⑤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되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X)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이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사업의 현재 가치를 대폭 깎으려 할 것입니다.

정부는 조세를 부과해 재정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그런데 조세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공평 과세, 즉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의 조세를 부과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특정 조세에 대한 납부자를 결정하게 되면 조세법을 통해 납부 의무를 지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부자의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하는 데, 이를 '조세전가(租稅轉嫁)'라고 한다.**

정부가 불문에 **자루당 10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세금 부과 전에 자루당 1,500원에 100만 자루가 거래되고 있었다면 생산자는 총 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생산자는 1,500원이라는 가격에 불만을 갖게 되므로 가격을 100원 더 올리려고 한다. 생산자가 불만을 갖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의 불만이 누그러지지만 반대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이르게 되며, 1,500원~1,600원 사이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즉 생산자는 법적 납부자로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루당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셈이다.** 반면에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 된다.**

한편, 조세전가가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소비자는 자루당 1,500원을 생산자에게 지불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1,600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불만이 시장에 반영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작동하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가격 하락 폭만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즉 정부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해도 생산자에게 **조세가 전가된다.**

그렇다면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는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 어느 측에 세금을 부과하든 **①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상승 요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 새로운 가격은 원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즉 생산자의 세금이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하락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소비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②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세전가 현상으로 인해 정부는 누가 진정한 조세 부담자인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43. '조세전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조세 부담 비중이 달라진다.
 - (O) 윗글에서는 가격의 변화에 대응하여 구입량이나 생산량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차이에 따라 조세 부담 비중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구입량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적은 소비자는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많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생산량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적은 생산자는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많을 것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 ②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시에 조세전가의 혜택을 누린다.
 - (X) 조세전가의 혜택은 하나의 주체만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과된 조세를 타인에게 전가하게 된다면, 자신은 혜택을 누리는 셈이지만 타인은 부담을 떠안은 셈이 되므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 ③ 조세전가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물품세의 단위당 조세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 (X) 윗글에서 물품세의 단위당 조세액은 조세 부과 단계에서 결정되는 고정값으로 나타납니다. 조세전가 현상은 정부의 조세 부과 이후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따라서 선후관계도 맞지 않고, 조세액이 바뀐다는 서술도 맞지 않습니다.
- ④ 생산자에게 조세가 부과될 경우 결국 소비자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
 - (X) 실질적인 세금 부담 비율은 두 경제 주체가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비자가 세금을 전액 실질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가능하기는 하겠지만(시장 가격 상승에도 소비량을 전혀 줄일 수 없는 소비자인 경우), 위의 서술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 ⑤ 조세전가가 발생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상실된다.
 - (X) 조세전가는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에 의해 실현됩니다.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상실된다면, 조세전가도 나타날 수 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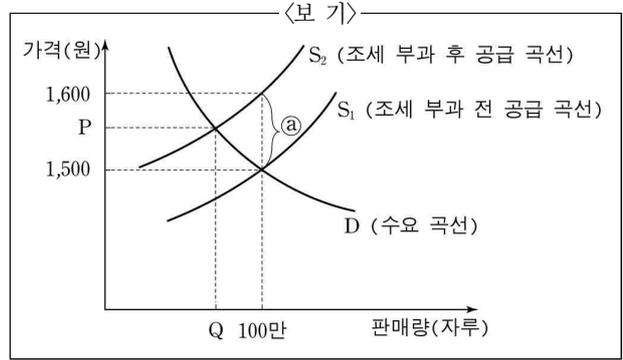
정부는 조세를 부과해 재정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그런데 조세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공평 과세, 즉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의 조세를 부과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특정 조세에 대한 납부자를 결정하게 되면 조세법을 통해 납부 의무를 지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부자의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하는 데, 이를 '조세전가(租稅轉嫁)'라고 한다.

정부가 불펜에 자루당 10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세금 부과 전에 자루당 1,500원에 100만 자루가 거래되고 있었다면 생산자는 총 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생산자는 1,500원이라는 가격에 불만을 갖게 되므로 가격을 100원 더 올려려고 한다. 생산자가 불만을 갖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의 불만이 누그러지지만 반대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이르게 되며, 1,500원~1,600원 사이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즉 생산자는 법적 납부자로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루당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셈이다. 반면에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 된다.

한편, 조세전가가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소비자는 자루당 1,500원을 생산자에게 지불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1,600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불만이 시장에 반영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작동하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가격 하락 폭만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즉 정부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해도 생산자에게 조세가 전가된다.

그렇다면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는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 어느 측에 세금을 부과하든 ①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상승 요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 새로운 가격은 원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즉 생산자의 세금이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하락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소비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②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세전가 현상으로 인해 정부는 누가 진정한 조세 부담자인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44. [A]를 <보기>와 같이 그래프로 그렸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세 부과 후 소비자는 P를 자루당 가격으로 지불한다.
 - (O) 조세 부과 후 공급 곡선이 S1에서 S2로 이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 곡선인 D가 공급 곡선 S와 만나는 교점의 가격은 1,500원이 아닌 P원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P를 자루당 가격으로 지불하고, 생산자는 P를 자루당 가격으로 받게 됩니다.
- ② 조세 부과 후 생산자는 a를 자루당 조세액으로 납부한다.
 - (O) [A]에서 세금의 납부자는 '생산자'입니다. 자루당 100원의 물품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적절한 선지입니다. 물론 100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상승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도 일부 금액을 납부한 셈이 됩니다. 그러나 위 선지의 포인트는 정부에 최종 '납부'하는 사람이 얼마를 납부하느냐이므로 '생산자'가 '100'원을 '납부'한다는 서술은 적절한 서술입니다.
- ③ 조세를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이면 공급 곡선 S1이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
 - (X) S1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S2가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겠습니다. S1은 조세가 부과되기 '전'입니다.
- ④ 소비자의 자루당 세금 부담액은 P에서 1,500원을 뺀 것이다.
 - (O)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1500원이었던 불펜이,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가격이 P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P-1500원만큼 소비자는 세금을 전가받은 셈입니다.
- ⑤ 조세 부과로 판매량이 100만 자루에서 Q로 줄어들게 된다.
 - (O) [A]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보기> 그래프 상의 S2와 D의 교점은(Q, P) 100만자루보다 0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조세를 부과해 재정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그런데 조세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공평 과세, 즉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의 조세를 부과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특정 조세에 대한 납부자를 결정하게 되면 조세법을 통해 납부 의무를 지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부자의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하는데, 이를 ‘조세전가(租稅轉嫁)’라고 한다.

정부가 불펜에 자루당 10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세금 부과 전에 자루당 1,500원에 100만 자루가 거래되고 있었다면 생산자는 총 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생산자는 1,500원이라는 가격에 불만을 갖게 되므로 가격을 100원 더 올리려고 한다. 생산자가 불만을 갖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의 불만이 누그러지지만 반대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이르게 되며, 1,500원~1,600원 사이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즉 생산자는 법적 납부자로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루당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셈이다. 반면에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 된다.

한편, 조세전가가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소비자는 자루당 1,500원을 생산자에게 지불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1,600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불만이 시장에 반영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작동하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가격 하락 폭만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즉 정부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해도 생산자에게 조세가 전가된다.

그렇다면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는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 어느 측에 세금을 부과하든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상승 요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 새로운 가격은 원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즉 생산자의 세금이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하락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소비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세전가 현상으로 인해 정부는 누가 진정한 조세 부담자인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45. ㉠,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바나나 가격이 오르면 곧 오렌지를 구매하는 소비자
→ (X) 바나나 가격이 오르면(가격 변화) 곧 오렌지를 구매하는(바나나 구입량 크게 변화) 소비자이므로 ㉠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 ㉠ :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구입을 쉽게 줄이는 소비자
→ (X) 커피 가격이 오르면(가격 변화) 커피 구입을 쉽게 줄이는(커피 구입량 크게 변화) 소비자이므로 ㉠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 ㉠ : 상표와 상관없이 가장 저렴한 샴푸를 구매하는 소비자
→ (X) 상표와 상관없이 가장 저렴한 샴푸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다른 것에 구매되지 않고 오직 가격의 변화에 따라 구입량이 크게 변화하는 소비자이므로 ㉠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 ㉡ : 사과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한 농장주
→ (X) 사과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시장에 내놓는 생산량을 크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높으면 창고에서 대량으로 출하하고, 시장 가격이 낮으면 창고 문을 닫아 두는 것이죠. 이런 농장주는 가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 ㉡ : 유행이 바뀌어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 액세서리 생산자
→ (O) 유행이 바뀌어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액세서리의 시장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생산량을 줄일 수 없습니다.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데, 가격이 낮아지니까 매대에서 거둬서 다시 재고로 쌓아둔다?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데 재고를 유지한다? 말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의 처분세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과 조직 등을 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 결합'이라고 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속한 사회에는 간혹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령, 시장 점유율이 각각 30%와 40%인 경쟁 기업들이 결합하여 70%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 경쟁이 제한되어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과 소비자에게 끼칠 ㉢폐해를 가려내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심사는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는 해당 기업 간에 단일 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가 ㉣관련이다. 예컨대 주식 취득을 통한 결합의 경우, 취득 기업이 피취득 기업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합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심사도 종료된다.

반면에 결합이 성립된다면 정부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그 결합이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수평 결합인지,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 간의 수직 결합인지, 이 두 결합 형태가 아니면서 특별한 관련이 없는 기업 간의 혼합 결합인지를 규명하게 된다. 문제는 어떻게 시장을 확정할 것인지인데, 대개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이 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품으로 옮겨 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 상품들은 서로에 대해 대체재, 즉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줄 수 있는 상품에 가까워진다. 이 경우 생산자들이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일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설령 그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결합의 장점이거나 불가피성에 관해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비로소 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20. 위 글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는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 (X) 정부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윗글의 핵심입니다.
- ② 기업 결합으로 얻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X) 기업 결합으로 얻은 이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습니다.
- ③ 기업 결합을 통한 기업의 확장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X) 국제 경쟁력 강화는 분명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 글은 정부가 기업의 결합 과정을 어떻게 심사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심사하고 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 ④ 기업 활동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는 소비자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 (X) 기업 활동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 소비자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은 윗글로부터 추론해내기 어렵습니다. 윗글에 소개된 기업 활동은 다양한 기업 활동 중 기업 결합 하나일 뿐이고, 그러한 기업 결합의 위법성 여부조차도 정부가 판단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⑤ 기업 결합의 순기능을 살리되 그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신중히 가려내야 한다.
→ (O) 첫 문단의 내용은 '정부는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정부의 구체적인 판단 과정입니다. 따라서 윗글의 취지*는 위 선지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지: 어떤 일의 근본이 되는 목적이나 긴요한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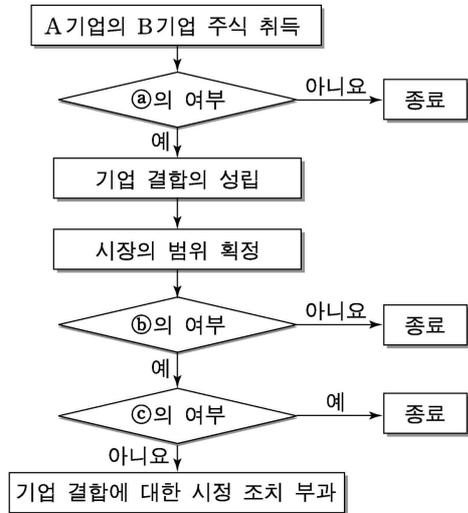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과 조직 등을 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 결합’이라고 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속한 사회에는 간혹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령, 시장 점유율이 각각 30%와 40%인 경쟁 기업들이 결합하여 70%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 경쟁이 제한되어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과 소비자에게 끼칠 ㉢폐해를 가려 내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심사는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는 해당 기업 간에 단일 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가 ㉣관건이다. 예컨대 주식 취득을 통한 결합의 경우, 취득 기업이 피취득 기업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합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심사도 종료된다.

반면에 결합이 성립된다면 정부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그 결합이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수평 결합인지,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 간의 수직 결합인지, 이 두 결합 형태가 아니면서 특별한 관련이 없는 기업 간의 혼합 결합인지를 규명하게 된다. 문제는 어떻게 시장을 확정할 것인지인데, 대개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 이 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품으로 옮겨 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 상품들은 서로에 대해 대체재, 즉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줄 수 있는 상품에 가까워진다. 이 경우 생산자들이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일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설령 그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결합의 장점이거나 불가피성에 관해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비로소 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21. 위 글에 나타난 기업 결합의 심사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3점]



→ 위 도표에서 가장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주식 취득에 의한 ㉠의 여부 판단입니다.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취득했으니, A가 B를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했는지를 판단해야 하겠죠? 이때 지배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면, 기업 결합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결합 심사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다음으로 ㉡의 여부 판단입니다. 지문에서는 시장의 범위 확정 이후 경쟁 제한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경쟁 제한이 없다면 기업 심사는 종료되고 기업 결합은 합법적인 것으로 판명됩니다.

마지막으로 ㉢의 여부 판단입니다. 위 도표에서는 최종적으로 ㉢의 여부 판단에 의해 심사가 종료되거나 시정조치가 부과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지문에 의하면 이는 취득 기업 측의 항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과정입니다. 이때 항변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결합 심사는 종료되고, 해당 기업의 결합은 합법적인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만약 항변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시정조치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시정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에 방문해보시면 기업결합법 관련 탭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 예) 당해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 | | | |
|---------------------|-----------|-----------|
| (a) | (b) | (c) |
| ① A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 대체재 존재 | - 경쟁 제한 |
| ② A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 항변의 타당성 | - 경쟁 제한 |
| ③ B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 경쟁 제한 | - 항변의 타당성 |
| ④ B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 대체재 존재 | - 항변의 타당성 |
| ⑤ B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 항변의 타당성 | - 경쟁 제한 |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과 조직 등을 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 결합’이라고 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속한 사회에는 간혹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령, 시장 점유율이 각각 30%와 40%인 경쟁 기업들이 결합하여 70%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 경쟁이 제한되어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과 소비자에게 끼칠 ㉢폐해를 가려 내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심사는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는 해당 기업 간에 단일 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가 ㉣관건이다. 예컨대 주식 취득을 통한 결합의 경우, 취득 기업이 피취득 기업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합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심사도 종료된다.

반면에 결합이 성립된다면 정부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그 결합이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수평 결합인지,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 간의 수직 결합인지, 이 두 결합 형태가 아니면서 특별한 관련이 없는 기업 간의 혼합 결합인지를 규명하게 된다. 문제는 어떻게 시장을 확정할 것인지인데, 대개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이 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품으로 옮겨 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 상품들은 서로에 대해 대체재, 즉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줄 수 있는 상품에 가까워진다. 이 경우 생산자들이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일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설령 그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결합의 장점이거나 불가피성에 관해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비로소 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22. <보기>는 어느 지역의 4가지 음료수 A~D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조사한 결과이다.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반응은?

— <보 기> —

판매량 가격인상	A의 판매량	B의 판매량	C의 판매량	D의 판매량
A 가격 10% 인상	20% ↓	15% ↑	5% ↑	변화 없음
B 가격 10% 인상	15% ↑	20% ↓	3% ↑	2% ↑
C 가격 10% 인상	3% ↑	2% ↑	20% ↓	15% ↑

※ 이 지역에는 4개의 회사만이 각각 한 종류의 음료수를 생산하며, 이들 회사는 다른 음료수를 생산할 수 없다.
(↑: 증가, ↓: 감소)

- ① A의 소비자들은 B보다 C를 대체재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는군.
→ (X) A의 가격이 올랐을 때, A의 판매량은 20% 줄어든 반면 B는 15%가 증가하고 C는 5%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A를 구매하던 소비자들이 A의 가격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B나 C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B의 판매량 증가는 C보다 3배나 큰 것으로 A 소비자들은 C보다 B를 대체재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 ② B와 동일 시장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가장 큰 상품은 A이군.
→ (O) A의 가격이 높아졌을 때 B의 수요량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고, B의 가격이 높아졌을 때는 A의 수요량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서로의 가격 변화에 따른 민감도가 높은 두 상품은 서로에 대해 대체재일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바탕으로 할 때 A와 B는 동일 시장 내의 경쟁 상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③ C의 가격 인상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상품은 B이군.
→ (X) C의 가격 인상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상품은 15%가 증가한 D입니다.
- ④ A 생산 회사와 D 생산 회사가 결합한다면 수평 결합으로 볼 가능성이 크군.
→ (X) A와 D는 대체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와 D를 생산하는 회사는 경쟁자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수평 결합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⑤ C 생산 회사와 D 생산 회사가 결합한다면 혼합 결합으로 볼 가능성이 크군.
→ (X) C와 D는 대체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관계인 만큼 수평 결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과 조직 등을 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 결합’이라고 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속한 사회에는 간혹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령, 시장 점유율이 각각 30%와 40%인 경쟁 기업들이 결합하여 70%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 경쟁이 제한되어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과 소비자에게 끼칠 ㉢폐해를 가려 내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심사는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는 해당 기업 간에 단일 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가 ㉣관건이다. 예컨대 주식 취득을 통한 결합의 경우, 취득 기업이 피취득 기업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합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심사도 종료된다.

반면에 결합이 성립된다면 정부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그 결합이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수평 결합인지,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 간의 수직 결합인지, 이 두 결합 형태가 아니면서 특별한 관련이 없는 기업 간의 혼합 결합인지를 규명하게 된다. 문제는 어떻게 시장을 확정할 것인지인데, 대개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이 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품으로 옮겨 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 상품들은 서로에 대해 대체재, 즉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줄 수 있는 상품에 가까워진다. 이 경우 생산자들이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일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설령 그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결합의 장점이거나 불가피성에 관해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비로소 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23. ㉠~㉤의 사전적 뜻풀이가 잘못된 것은?

- ① ㉠ : 사라져 없어지게 함.
→ (X) 침해: 침범하여 해를 끼침.
- ② ㉡ :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함.
→ (O)
- ③ ㉢ : 폐단으로 생기는 해.
→ (O)
- ④ ㉣ : 어떤 사물이나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
→ (O)
- ⑤ ㉤ : 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정함.
→ (O)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국내 기업은 수출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동시에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품을 덜 소비하므로 수입액은 감소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 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 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J자 형태가 되므로 'J커브 현상'이라 한다. J커브 현상에서 경상 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환율 상승 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국 기업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수입 상품 소비가 가격 변화에 따라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J커브의 형태가 보여 주듯이,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 수지가 개선된다.

한편, J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환율 상승 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상 수지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첫째,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는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다.**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 **경상 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의존하여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잃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나, 정책 당국이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환율 정책을 구사한다. 경상 수지가 적자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고환율 정책이 선호된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환율과 경상 수지 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환율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 * 환율 :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
- * 경상 수지 : 상품(재화와 서비스 포함)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결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클 때는 흑자, 작을 때는 적자로 구분함.

28. 위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① 환율 상승에 따르는 수입 상품의 가격 변화

→ (O) 환율 상승에 따라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② 경상 수지 개선을 위한 고환율 정책의 필연성

→ (X) 지문에 환율 상승(고환율)에 따른 경상 수지 개선은 필연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고환율 정책의 필연성은 뒷글에서 다른 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③ 가격 변화에 대한 외국 소비자의 지체된 반응

→ (O) 지문에서는 수출 상품의 가격 변화에 대해 외국 소비자가 소비를 늘리는 반응을 보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이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반응은 '지체된'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④ 국내외 수요 구조가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

→ (O) 국내외의 수요 구조란 국내외의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지문에서는 이러한 수요 구조에 따라, 환율이 올랐을 때 경상 수지가 개선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⑤ 환율 상승이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

→ (O) 첫 문단의 첫 문장에 나타납니다. 의외로 첫 문단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부분이 첫 문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문제를 풀면서 위 선지에 대한 근거를 즉각 떠올리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의식적으로 첫 문단을 조금 더 세심하게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국내 기업은 수출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동시에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품을 덜 소비하므로 수입액은 감소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 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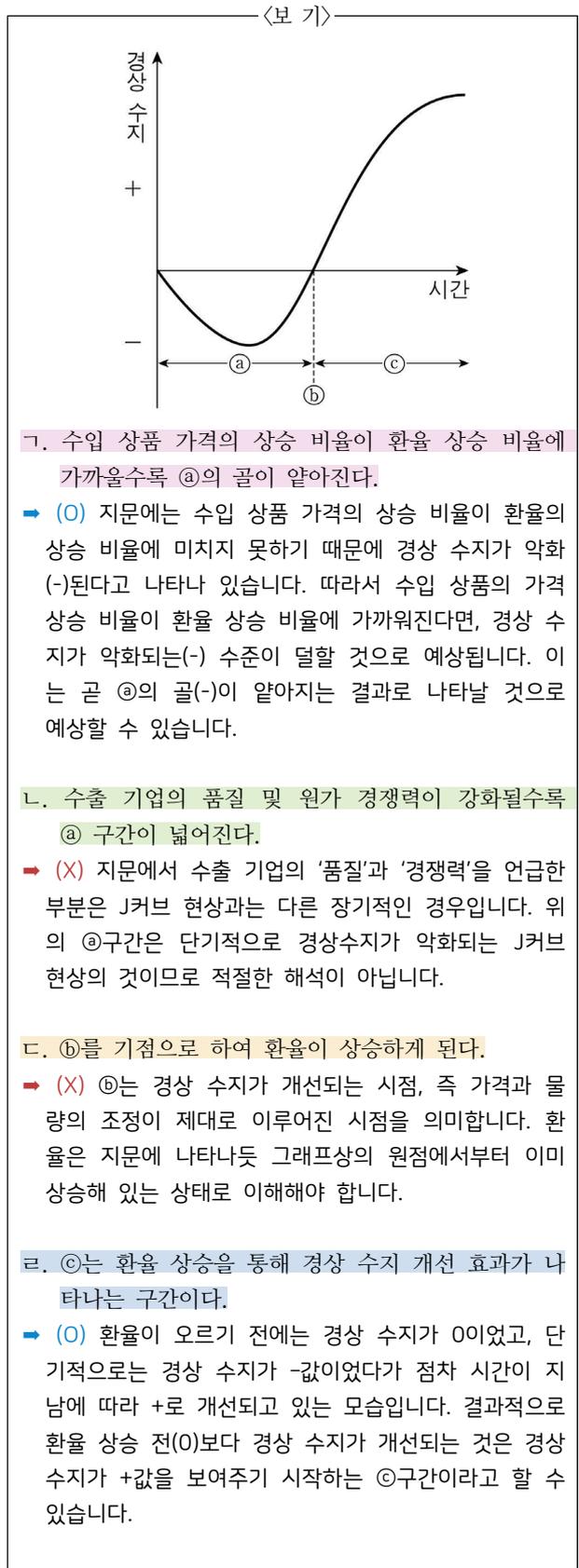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 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J자 형태가 되므로 'J커브 현상'이라 한다. J커브 현상에서 경상 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환율 상승 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국 기업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수입 상품 소비가 가격 변화에 따라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J커브의 형태가 보여 주듯이,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 수지가 개선된다.

한편, J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환율 상승 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상 수지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첫째,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 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는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다.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 경상 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 수출 기업의 환율 상승에만 의존하여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잃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나, 정책 당국이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환율 정책을 구사한다. 경상 수지가 적자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고환율 정책이 선호된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환율과 경상 수지 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환율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 * 환율 :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
- * 경상 수지 : 상품(재화와 서비스 포함)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결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클 때는 흑자, 작을 때는 적자로 구분함.

2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J커브 그래프를 해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ㄱ, ㄷ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국내 기업은 수출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동시에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품을 덜 소비하므로 수입액은 감소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 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 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J자 형태가 되므로 'J커브 현상'이라 한다. J커브 현상에서 경상 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환율 상승 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국 기업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수입 상품 소비가 가격 변화에 따라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J커브의 형태가 보여 주듯이,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 수지가 개선된다.

한편, J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환율 상승 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상 수지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첫째,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는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다.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 **경상 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의존하여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잃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나, 정책 당국이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환율 정책을 구사한다. 경상 수지가 적자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고환율 정책이 선호된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환율과 경상 수지 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환율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 * 환율 :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
- * 경상 수지 : 상품(재화와 서비스 포함)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결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클 때는 흑자, 작을 때는 적자로 구분함.

30.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의 상품의 수요 구조에 따라 **수출 상품의 가격 조정이 선행될 수 있다.**
→ (X) 상품의 가격 조정이 선행되더라도,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 ②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국내외 기업은 **환율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관찰한 후** 가격을 조정한다.
→ (X) 상품의 가격 조정이 선행되더라도,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관찰한 후 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수요 구조입니다.
- ③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
→ (O) 뒷글에서는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가 수요 구조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수요 구조인 경우, 경상 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고 추론한 위 선지가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합니다.
- ④ **가격의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국내외 상품 수요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 (X)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건은 뒷글에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 ⑤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지는** 경상 수지의 개선 여부와는 무관하다.
→ (X) 수요 구조가 경상 수지의 개선 및 악화와 관련이 있다고 뒷글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더 읽어볼 이야기》

[Q] 지문을 보면, 환율이 상승 후에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국내외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다면 경상 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A] 먼저, 이 글에는 빠져 있는 내용입니다만, 한 가지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상 수지는 미화(\$)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출량도 \$, 수입량도 \$로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각각 1\$짜리 약과와 초콜릿을 100개씩 수출하고 수입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환율은 1\$에 100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게 수출과 수입의 전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경상 수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도표1] - 환율 상승 전의 상황

개당 가격	수입량 / 수출량	수입액 / 수출액
초콜릿: 1\$ (원화1000₩)	수입량 100개	수입액 100\$
약과: 1\$	수출량 100개	수출액 100\$

[도표1]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빼니 0\$네요. 환율이 1\$에 1000₩일 때 경상 수지는 0입니다. 무역 적자도 흑자도 아닌 상황이네요.

그런데 환율이 올라서 1\$에 1300₩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품의 가격이 조정되겠죠? 초콜릿은 1\$에 수입하면 환율이 1300원에 1\$니까 1300₩은 받아야 외국에 1\$를 지불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약과는 한국에서는 여전히 1000₩에 판매되겠지만, 환율이 올랐으니까 0.8\$에 팔아도 1040₩으로 바꿀 수 있어 이익입니다. (0.8 × 1300 = 1040) 이렇게 수입 초콜릿은 1300₩에 한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수출 약과는 0.8\$에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황이라면, 수출량이 늘어나고 수입량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도표2] - 환율 상승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상황

개당 가격	수입량 / 수출량	수입액 / 수출액
초콜릿: 1\$ (원화1300₩)	수입량 50개 (50개 감소)	수입액 50\$ (-50\$)
약과: 0.8\$	수출량 150개 (50개 증가)	수출액 120\$ (+20\$)

이렇게 되면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빼니 70\$가 남습니다. 경상 수지가 70\$ 흑자겠군요!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은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입량과 수출량의 변화가 큰 경우입니다. 만약,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다면, 수입량과 수출량

의 변화가 작아서 경상 수지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수입 초콜릿이 1000₩에서 1300₩으로 올랐지만, 초콜릿을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입량이 조금밖에 줄어들지 않고, 미국에서 약과가 예전보다 0.2\$나 싸게 팔리지만 그다지 소비량이 늘어나지 않아 105개로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면 다음과 같이 경상 수지에 적자가 납니다.

[도표3] - 국내외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상황

개당 가격	수입량 / 수출량	수입액 / 수출액
초콜릿: 1\$ (원화1300₩)	수입량 95개 (5개 감소)	수입액 95\$ (-5\$)
약과: 0.8\$	수출량 105개 (5개 증가)	수출액 84\$ (-16\$)

[도표 3]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빼 보니 -11\$ 적자가 났습니다. 환율이 오르기 전에는 0\$였는데, 가격 조정도 이루어졌고, 수입량이 줄었고 수출량은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경상 수지는 악화된 것이죠.

위의 [도표3]과 같은 장기적인 현상과, J커브 현상에서 일어나는 단기적 경상 수지의 악화 현상의 차이점은 무엇 일까요? 먼저, [도표3]이 보여주는 문제는 **수요 구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수입량이 더 줄어들거나 수출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즉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장기적인 현상입니다. 반면 J커브 현상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장의 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현상이지요.

또한 [도표3]은 가격 및 물량 조정이 모두 끝난 결과적 상황인 것에 비해, J커브 현상은 가격 및 물량 조정이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과정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표3]에서는 환율이 상승한 만큼 초콜릿의 원화표시가격도 1300₩으로 상승되어 있는데도, J커브 현상이 일어나는 가격조정기에는 환율이 상승했음에도 초콜릿이 여전히 1000₩으로 표시되어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것을 상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국내 기업은 수출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동시에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품을 덜 소비하므로 수입액은 감소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 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 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J자 형태가 되므로 'J커브 현상'이라 한다. J커브 현상에서 경상 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환율 상승 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국 기업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수입 상품 소비가 가격 변화에 따라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J커브의 형태가 보여 주듯이,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 수지가 개선된다.

한편, J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환율 상승 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상 수지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첫째,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 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는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다.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 경상 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의존하여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잃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나, 정책 당국이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환율 정책을 구사한다. 경상 수지가 적자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고환율 정책이 선호된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환율과 경상 수지 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환율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 * 환율 :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
- * 경상 수지 : 상품(재화와 서비스 포함)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결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클 때는 흑자, 작을 때는 적자로 구분함.

31. ㉠에 대해 <보기>처럼 이해한다고 할 때,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_____더니,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만 믿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말이군.

- ① 감나무 밑에 누워 흥시 떨어지기를 바란다
→ (O)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이익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뜻하는 관용구이죠. 평가원에서는 2016학년도 이후부터 속담이나 한자성어를 선지로 구성하는 문제는 더 이상 출제하고 있지 않으나, 기출에 나온 속담이나 한자성어는 한국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②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 (X) 언덕이 있어야 소도 가려운 곳을 긁을 수 있다는 뜻으로, 누구나 의지할 곳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 시작하거나 이를 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어렵다
→ (X)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란 끝이 없는 일이어서 개인은 물론 나라의 힘으로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
- ④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 (X) 아무리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이라도 간혹 실수할 때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 (X) 사람의 욕심이란 한이 없다는 말.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체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이익의 크기를 따진다.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다. 가령 금리가 연 10%이고,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즉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 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만기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크다.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는 만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이익을 기대하므로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한다.

또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한편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가령 주식 시장이 호황이어서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44. 위 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O)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마다 한 문단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② 채권의 지급 불능 위험과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고 있다.
→ (O) '예를 들어~'로 시작하고 있으니 예를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③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빗대어 채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X)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은 '유추'인데, 이 글에는 유추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에 기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④ 금리가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O) 금리 상승(원인) → 채권의 현재가치 하락(결과) / 채권의 현재가치 하락(인) → 채권 가격 하락(과)
- ⑤ 채권의 의미를 밝히고 그 종류를 들고 있다.
→ (O) 채권의 의미와 종류가 모두 나타납니다.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체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익의 크기를 따진다.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다. 가령 금리가 연 10%이고,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즉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 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만기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크다.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는 만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므로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한다.

또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한편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가령 주식 시장이 호황이어서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45.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①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지는 액면 금액은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것이다.

→ (X) 채권의 현재 가치는 만기일에 받을 '액면 금액'을 현재의 시점에서 평가한 값과, 만기일까지 받을 모든 '이자액'을 현재의 시점에서 평가한 값을 합한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이자액'을 빼버린다면 이도 저도 아닌 아무말 대잔치가 됩니다.

② 채권의 순수익은 정기적으로 지급될 이자액을 합산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 (X) $\text{순수익} = \text{현재 가치}(\text{정기적으로 지급될 이자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 + \text{액면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 - \text{매입 가격}$

③ 다른 지급 조건이 같다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 (X)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도 하락한다고 했으니, 반대로 채권의 현재 가치가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도 상승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급 조건이 같다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의 현재 가치는 높아요. 따라서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옳은 추론입니다.

④ 지급 불능 위험이 커진 채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는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

→ (O) 위험한 채권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치'가 100만 원인 두 채권 A와 B가 있다고 하고, A 발행 기업의 지급 불능 위험이 높아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럼 A의 매입 가격은 상대적으로 B보다 낮게 형성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A는 매입가 50만 원, B는 매입가 90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순수익'은 '현재 가치'에서 '매입 가격'을 뺀 것입니다. 물론 현실화되지 않은 이익이긴 하지만요. 그럼 계산해 봅시다. A는 순수익이 50만원인데 B는 순수익이 10만원이겠네요. 위험을 감수하고 A를 투자하는 이유는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이겠죠? 적절한 선지입니다.

⑤ 일반적으로 지급 불능 위험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액면 이자율이 높다.

→ (X) 아무말 대잔치입니다. 지급 불능 위험이 낮고 높음은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액면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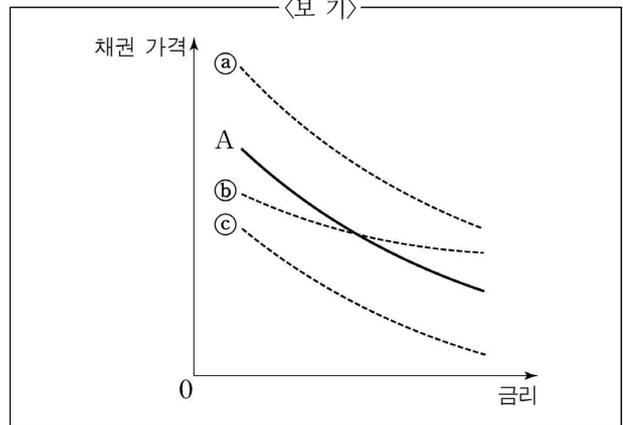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체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이익의 크기를 따진다.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다. 가령 금리가 연 10%이고,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즉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 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만기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크다.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는 만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이익을 기대하므로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한다.

또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한편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가령 주식 시장이 호황이어서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46. <보기>의 A는 어떤 채권의 가격과 금리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위 글의 ㉠과 ㉡에 따른 A의 변화 결과를 바르게 예측한 것은?



→ ㉠ :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금리가 오르고 내려도 채권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게 덜하다는 것이겠죠.

<보기>의 그래프는 금리의 높고 낮음에 따른 채권 가격의 높고 낮음에 대한 그래프네요. 원래 채권 A는 <보기>의 그래프와 같이 금리가 오름에 따라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우하향의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 따른 A의 변화 결과는 금리 변화에 다른 채권 가격 변화의 폭이 A보다 작은 곡선-㉢가 적절하겠습니다.

→ ㉡ : 주식 시장이 호황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권 상품은 많은데 구매자들이 주식 시장으로 많이 가버렸으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는 게 상식적이겠네요.

따라서 ㉡에 따른 A의 변화 결과는 A보다 전반적으로 채권 가격이 낮게 형성된 곡선-㉣가 적절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a | c |
| ① | a | c |
| → (X) | | |
| ② | b | a |
| → (X) | | |
| ③ | b | c |
| → (O) | | |
| ④ | c | a |
| → (X) | | |
| ⑤ | c | b |
| → (X) | | |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할 때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본다. ‘한계 비용’이란 재화의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재화의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이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가장 커진다.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따라 줄고,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감소한다. 이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위에서 설명한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수도, 전기, 철도와 같은 공익 서비스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한계 비용 수준으로 가격(=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공익 서비스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은 막대한 반면 한계 비용은 매우 적다. 이러한 경우, 한계 비용으로 공공요금을 결정하면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6억 달러이고, 톤당 1달러의 한계 비용으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수도도 서비스를 가정해 보자. 이때 수돗물 생산량을 ‘1톤, 2톤, 3톤, ...’으로 늘리면 총비용은 ‘6억 1달러, 6억 2달러, 6억 3달러, ...’로 늘어나고, 톤당 평균

[A] 비용은 ‘6억 1달러, 3억 1달러, 2억 1달러, ...’로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그렇지만 평균 비용이 계속 줄어들더라도 한계 비용 아래로는 결코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한계 비용으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총비용보다 총수입이 적으므로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공익 서비스 제공 기업에 손실분만큼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보조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다른 부문에 들어갈 자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평균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요금을 정하는 후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져 기업이 손실을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요금이 한계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

3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극대화된다.
 - (O)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이 시점이 바로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가장 커지는 때라고 하네요.
- ②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은 경우에는 한계 비용과 같은 경우에 비해 결국 그 재화의 생산량이 줄어든다.
 - (O)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써봤네요.
- ③ 공익 서비스와 일반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건은 서로 같다.
 - (O) 문장의 앞뒤를 바꿔 보면 더 쉽습니다. ‘공익 서비스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한계 비용 수준으로~’라고 재구성할 수 있겠네요. 공익 서비스나 일반 재화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목표로 한다면, 가격을 한계 비용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같다는 것이죠.
- ④ 정부는 공공요금을 한계 비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정책을 펼 수 있다.
 - (O) 한계 비용으로 공공요금을 결정하면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러한 손실분만큼 보조금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공공요금을 한계 비용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공익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 ⑤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에서 결정하면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 (X) 본문에서는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에서 결정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으니 틀린 말입니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았을 뿐, 낭비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함정에 빠진 겁니다. 제일 첫 문단에서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 다시 보세요.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원의 낭비가 없다’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가 서로 엮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었다면 자원의 낭비가 일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할 때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본다. ‘한계 비용’이란 재화의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재화의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이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가장 커진다.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따라 줄고,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감소한다. 이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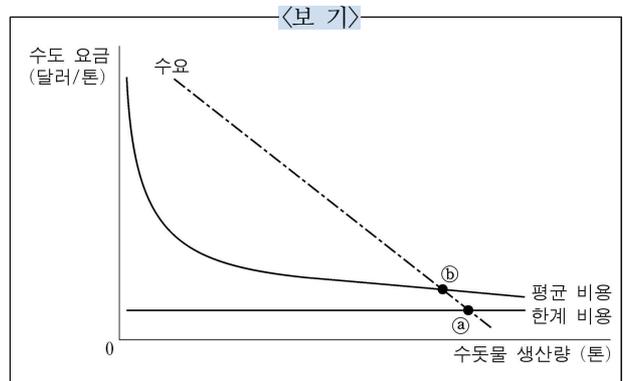
위에서 설명한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수도, 전기, 철도와 같은 공익 서비스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한계 비용 수준으로 가격(=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공익 서비스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은 막대한 반면 한계 비용은 매우 적다. 이러한 경우, 한계 비용으로 공공요금을 결정하면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6억 달러이고, 톤당 1달러의 한계 비용으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상수도 서비스를 가정해 보자. 이때 수돗물 생산량을 ‘1톤, 2톤, 3톤, ...’으로 늘리면 총비용은 ‘6억 1달러, 6억 2달러, 6억 3달러, ...’로 늘어나고, 톤당 평균

[A] 비용은 ‘6억 1달러, 3억 1달러, 2억 1달러, ...’로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그렇지만 평균 비용이 계속 줄어들더라도 한계 비용 아래로는 결코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한계 비용으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총비용보다 총수입이 적으므로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공익 서비스 제공 기업에 손실분만큼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보조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다른 부문에 들어갈 자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평균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요금을 정하는 후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져 기업이 손실을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요금이 한계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

36. <보기>는 [A]의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위 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본다.
 - (O) a는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요금 즉, 가격이 결정되면 생산량에 따른 생산 비용만 회수되기 때문에 초기 시설 투자 비용 6억 달러가 회수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몇 톤을 생산해서 팔든, a로 가격이 정해지면 수도 사업자는 6억 달러의 손실을 입습니다.
- ② ㉡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요금은 톤당 1달러이다.
 - (O) a는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톤당 1달러의 한계 비용으로 수돗물을 생산한다고 하였으니, 그래프에서 한계 비용은 항상 1달러라고 보면 되겠군요.
- ③ ㉢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사업자의 총수입과 총비용은 같다.
 - (O) b는 평균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경우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서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입지 않지요. 그 말은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다는 뜻입니다.
- ④ 수돗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의 격차가 줄어든다.
 - (O) <보기>의 그래프의 원점에서 x축을 따라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돗물의 생산량(톤)이 증가하죠?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 곡선의 차이는 어떤가요? 계속 줄어들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량이 1t일 때 평균 비용은 6억 1\$, 한계 비용은 1\$이니 격차는 6억\$입니다.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생산량이 6억t이라고 한다면, 평균 비용은 2\$가 되겠죠. 계속 줄어드네요. 10억t을 생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6\$(1달러60센트)로 더욱 줄어드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네요.
- ⑤ 요금 결정 지점이 ㉠에서 ㉢로 이동하면 사회 전체의 만족도는 증가한다.
 - (X) 사회 전체의 만족도는 하락합니다.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최대값인 상황은 요금이 a일 때, 즉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될 때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할 때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본다. ‘한계 비용’이란 재화의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재화의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이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가장 커진다.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따라 줄고,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감소한다. 이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위에서 설명한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수도, 전기, 철도와 같은 공익 서비스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한계 비용 수준으로 가격(=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공익 서비스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은 막대한 반면 한계 비용은 매우 적다. 이러한 경우, 한계 비용으로 공공요금을 결정하면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6억 달러이고, 톤당 1달러의 한계 비용으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상수도 서비스를 가정해 보자. 이때 수돗물 생산량을 ‘1톤, 2톤, 3톤, ...’으로 늘리면 총비용은 ‘6억 1달러, 6억 2달러, 6억 3달러, ...’로 늘어나고, 톤당 평균

[A] 비용은 ‘6억 1달러, 3억 1달러, 2억 1달러, ...’로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그렇지만 평균 비용이 계속 줄어들더라도 한계 비용 아래로는 결코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한계 비용으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총비용보다 총수입이 적으므로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공익 서비스 제공 기업에 손실분만큼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보조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다른 부문에 들어갈 자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평균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요금을 정하는 후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져 기업이 손실을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요금이 한계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

37. 문맥상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투입(投入)되는

→ (O) 「동사」【...에】

「1」 던져져 놓여지다.

「2」 사람이나 물자, 자본 따위가 필요한 곳에 놓여지다.

② ㉡ : 초래(招來)한다

→ (O) 「동사」【...을】

「1」 일의 결과로서 어떤 현상을 생겨나게 하다.

「2」 불러서 오게 하다.

③ ㉢ : 추정(推定)하면

→ (X) 「동사」

1 【...을 ...으로】【...을 -고】【...으로】【-고】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하다.

2 【...을】

「1」 『법률』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다.

「2」 『수학』 통계에서, 어떤 모집단(母集團)으로부터 뽑아낸 표본을 바탕으로 하여 그 모집단의 평균·분산 따위를 헤아리다.

④ ㉣ : 지급(支給)하는

→ (O) 「동사」【...에/에게 ...을】

「1」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준다. ≒방지하다. 「반대말」 수취하다(受取하다)

「2」 『법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어음 따위를 채권자에게 주다.

⑤ ㉤ : 감소(減少)하는

→ (O) 「동사」【(...을)】

양이나 수치가 줄다. 또는 양이나 수치를 줄이다.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외부성'이라 한다. 과수원의 과일 생산이 인접한 양봉업자에게 벌꿀 생산과 관련한 이익을 준다든지, ㉠공장의 제품 생산이 강물을 오염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부성은 사회 전체로 보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개별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까지 고려하여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수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Q_a 라고 할 때,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리면 과수원의 이윤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과수원의 이윤 감소보다 양봉업자의 이윤 증가가 더 크다면,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수원이 자발적으로 양봉업자의 이익까지 고려하여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릴 이유는 없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러한 비효율성의 해결책이 보조금이나 벌금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라고 생각한다. 보조금을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되면 제3자에게 주는 이익이나 손해가 더 이상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게 되므로,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선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제학은 모든 시장 거래와 정부 개입에 시간과 노력, 즉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외부성은 이익이나 손해에 관한 협상이 너무 어려워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보조금이나 벌금뿐만 아니라 협상을 쉽게 해 주는 법과 규제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정부 개입은 비효율성을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개입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비효율성을 늘리는 측면도 있다.

29. 위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별 경제 주체는 사회 전체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행동한다.

→ (O) 개별 경제 주체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까지'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손해'만' 고려한다는 뜻이겠군요.

②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외부성은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는다.

→ (X) [A]에 예로 든 외부성 사례는 과수원 운영자가 제3자(양봉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비효율성이 초래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③ 전통적인 경제학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 (O) 전통적인 경제학은 외부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사회 전체의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정부 개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정부 개입에 드는 비용을 '간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아서 사용하는 해결책에 또 비용이 들어간다는 문제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정부 개입에 따른 비용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비효율성의 해결책으로, 또다시 비효율을 일으키는, 정부 개입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간과하다: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다.

④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이익을 더 늘릴 여지가 있다면 그 사회는 사회적 효율성이 충족된 것이 아니다.

→ (O) 여지가 있다는 것은 아직 극대화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것을 본문에서는 '비효율성'이 초래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효율성이 충족된 것은 더 이상 이익을 실현할 여지가 없는, 이익이 극대화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⑤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받는 당사자들 사이에 그 손익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외부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 (O) '거래'가 키워드입니다. 본문의 제일 처음 문장을 다시 읽어 봅시다.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이라는 문구 보이시죠? 따라서 이익이나 손해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지면 외부성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외부성’이라 한다. 과수원의 과일 생산이 인접한 양봉업자에게 벌꿀 생산과 관련한 이익을 준다든지, ㉠공장의 제품 생산이 강물을 오염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부성은 사회 전체로 보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개별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까지 고려하여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수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_a 라고 할 때,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리면 과수원의 이윤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과수원의 이윤 감소보다 양봉업자의 이윤 증가가 더 크다면,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수원이 자발적으로 양봉업자의 이익까지 고려하여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릴 이유는 없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러한 비효율성의 해결책이 보조금이나 벌금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라고 생각한다. 보조금을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되면 제3자에게 주는 이익이나 손해가 더 이상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게 되므로,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선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제학은 모든 시장 거래와 정부 개입에 시간과 노력, 즉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외부성은 이익이나 손해에 관한 협상이 너무 어려워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보조금이나 벌금뿐만 아니라 협상을 쉽게 해 주는 법과 규제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정부 개입은 비효율성을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개입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비효율성을 늘리는 측면도 있다.

30. ㉠의 사례를 [A]처럼 설명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보 기>

공장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_b 라고 할 때, 생산량을 Q_b 보다 (㉡) 공장의 이윤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공장의 이윤 감소보다 주민들의 피해 감소가 더 (㉢), 생산량을 Q_b 보다 (㉣)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 ㉡ ㉣ ㉤
- ① 줄이면 크다면 줄이는

→ (O) ㉠의 사례를 [A]처럼 설명한다는 것은, ㉠에 나타난 공장주와 주민 간의 문제를, 공장주와 주민들의 이윤 및 사회 전체의 이윤과 관련하여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기>를 보겠습니다. ‘공장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_b 라고 할 때, 생산량을 Q_b 보다’ 줄이든 늘리든 공장의 이윤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금 ㉠의 맥락을 보면 제품 생산이 강물을 오염시킨다고 했으니 (줄이면)이 들어가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와 (다)는 쉽게 추론할 수 있죠. 생산량 감소로 인한 공장의 이윤 감소보다 주민들의 피해 감소가 더 (크다면), 생산량을 Q_b 보다 (줄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 ② 줄이면 크다면 늘리는
- ③ 줄이면 작다면 줄이는
- ④ 늘리면 작다면 줄이는
- ⑤ 늘리면 작다면 늘리는

연금 제도의 목적은 나이가 많아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㉔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 회사의 사적 연금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부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 제도들과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가 낳는 부작용 때문이다. 사적 연금에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하므로,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자꾸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 회사는 계속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한 사적 연금을 유지할 수 없다. 한편 공공 부조는 도덕적 해이를 ㉕야기할 수 있다. 무상으로 부조가 이루어지므로, 젊은 시절에는 소득을 모두 써 버리고 노년에는 공공 부조에 의존하려는 ㉖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를 징수한 뒤, 적립된 연금 기금을 국가의 책임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은퇴한 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적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는 ㉗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㉘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이 제도를 계층 간,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에게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과 비슷한 연금을 지급하고, 자녀 세대의 보험료로 부모 세대의 연금을 충당하는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후자는 이처럼 사회 구성원 일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소득 재분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자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이 비판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두 입장은 요사이 연금 기금의 투자 방향에 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원래 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가입자들이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맡긴 신탁 기금으로 보고,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대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㉙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보고, 이를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연금 기금을 일종의 신탁 기금으로 규정해 온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㉚확충하는 데 이 막대한 돈을 직접 활용하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 공공 부조 :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사회적 최저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거나 무료 혜택을 주는 제도.

3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은 다양하다.
 - (O) 윗글에 직접적으로 제시된 연금 제도의 목적 달성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1.사적 연금, 2.공공 부조, 3.공적 연금, 세 가지네요. 세 가지면 다양한 것일까요? 세 가지는 조금 단조롭나요? 애매하죠? 하지만 평가원에서는 1번 선지를 적절한 선지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세 가지 이상이 제시된다면 '다양하다'라는 말과 어울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② 공적 연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여 사적 연금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O) 그렇습니다. '국가가 이 제도와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했으니, 사적 연금과 공적 연금 제도는 함께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 ③ 공적 연금 제도를 시행한 뒤에는 공공 부조를 폐지해야 한다.
 - (X) 공적 연금 제도 자체가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 부조의 부작용에 대응한다는 말에는, 공공 부조가 유지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 ④ 공공 부조가 낳는 도덕적 해이는 국민들의 납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 (O) 공공 부조는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젊을 때 흥청망청 쓰고, 늙어서 세금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그렇지 않은 국민들은 이 부도덕한 사람들을 공공 부조로 먹여 살리느라 납세 부담이 증가되겠군요.
- ⑤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 재분배의 수단이 될 수 있다.
 - (O)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득이 매우 높아서 총 보험료 1억 원을 납부한 A와 소득이 적어서 총 보험료 5천만 원을 납부한 B가 서로 비슷한 연금을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고소득자 A의 보험료가 창출한 이익의 일부를 B에게 재분배한 셈이 됩니다.

연금 제도의 목적은 나이가 많아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㉔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 회사의 사적 연금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부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 제도들과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가 낳는 부작용 때문이다. 사적 연금에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하므로,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자꾸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 회사는 계속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한 사적 연금을 유지할 수 없다. 한편 공공 부조는 도덕적 해이를 ㉕야기할 수 있다. 무상으로 부조가 이루어지므로, 젊은 시절에는 소득을 모두 써 버리고 노년에는 공공 부조에 의존하려는 ㉖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를 징수한 뒤, 적립된 연금 기금을 국가의 책임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은퇴한 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적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는 ㉗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㉘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이 제도를 계층 간,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에게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과 비슷한 연금을 지급하고, 자녀 세대의 보험료로 부모 세대의 연금을 충당하는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후자는 이처럼 사회 구성원 일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소득 재분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자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이 비판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두 입장은 요사이 연금 기금의 투자 방향에 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원래 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가입자들이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맡긴 신탁 기금으로 보고,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대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㉙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보고, 이를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연금 기금을 일종의 신탁 기금으로 규정해 온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㉚확충하는 데 이 막대한 돈을 직접 활용하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 공공 부조 :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사회적 최저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거나 무료 혜택을 주는 제도.

40. ㉑과 ㉒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㉑에서는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본다.
→ (O) 그렇습니다. (㉑이 전자이고 ㉒이 후자입니다. 여기서 '전자'는 삼성전자의 전자가 아니라 '앞의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 ② ㉑에서는 연금 기금을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수익률이 높은 대기업에 투자하려고 한다.
→ (X) ㉑이 아니라 ㉒의 주장입니다.
- ③ ㉑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연금 기금의 법적 성격을 바꾸는 데 반대한다.
→ (X) ㉑은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
- ④ ㉒에서는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공적 연금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더욱 강하게 요구한다.
→ (X) 후자인 ㉒은 이러한 소득 재분배를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 ⑤ ㉒에서는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확충하는 데 연금 기금을 직접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 (X) 전자인 ㉑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연금 제도의 목적은 나이가 많아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 회사의 사적 연금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부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 제도들과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가 낳는 부작용 때문이다. 사적 연금에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하므로,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자꾸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 회사는 계속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한 사적 연금을 유지할 수 없다. 한편 공공 부조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 무상으로 부조가 이루어지므로, 젊은 시절에는 소득을 모두 써 버리고 노년에는 공공 부조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를 징수한 뒤, 적립된 연금 기금을 국가의 책임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은퇴한 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적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는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이 제도를 계층 간,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에게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과 비슷한 연금을 지급하고, 자녀 세대의 보험료로 부모 세대의 연금을 충당하는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후자는 이처럼 사회 구성원 일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소득 재분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자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이 비판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두 입장은 요사이 연금 기금의 투자 방향에 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원래 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가입자들이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맡긴 신탁 기금으로 보고,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대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정된 투자 자금으로 보고, 이를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연금 기금을 일종의 신탁 기금으로 규정해 온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확충하는 데 이 막대한 돈을 직접 활용하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 공공 부조 :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사회적 최저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거나 무료 혜택을 주는 제도.

4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공적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그중 상당수가 고용이 불안정한 30~4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 공적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자도 상당히 많아 누적 체납액이 2,000억 원을 넘어섰다.

① (가)를 보니, 공적 연금 기금을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겠군.

→ (O) (가)에서는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이유는 고용 불안정 때문이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보험료 체납이 늘어나면 연금이 불안정해지겠죠. 그런데 만약 공적 연금 기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게 된다면, 가입자의 고용이 안정화될 수 있고, 이는 곧 연금 보험료의 체납 감소로 이어져 결국 연금 제도가 안정화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납득할 만한 선지입니다.

*체납하다: 「동사」【…을】 세금 따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고 미루다.

② (나)를 보니, 공적 연금 제도에서는 국가가 보험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철저히 집행해야 하겠군.

→ (O) 본문에 나타나듯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강제 가입됩니다. 그런데 (나)에서는 소득이 높아 연금 보험료를 충분히 낼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체납하는 고소득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적 연금의 역선택 현상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체납을 방지한다면 공적 연금 제도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철저히 징수해야 공적 연금제도가 유지될 수 있겠네요.

③ (나)를 보니, 고의 체납으로 인해 공적 연금 제도에도 역선택과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군.

→ (O) 고소득자의 입장에서는 공적 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죠. 만약 선택권을 준다면 가입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역선택 현상입니다. 그런데 공적 연금은 가입이 의무죠. 따라서 역선택 현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체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입하지 않은 것과 유사한 효과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이를 두고 선지에서는 '역선택과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군.'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④ (가)와 (나)를 보니, 적립된 공적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군.

→ (O) 고소득자는 고의로 체납하고, 저소득자는 부득이 체납하면 결국 연금 기금이 고갈되겠죠.

⑤ (가)와 (나)를 보니,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공적 연금에 강제 가입시키는 제도를 완화해야 하겠군.

→ (X) (가)와 (나)를 보면, 가입 강제 제도를 완화할 경우 연금 제도 유지가 쉽지 않겠죠?

연금 제도의 목적은 나이가 많아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㉔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 회사의 사적 연금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부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 제도들과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가 낳는 부작용 때문이다. 사적 연금에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하므로,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자꾸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 회사는 계속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한 사적 연금을 유지할 수 없다. 한편 공공 부조는 도덕적 해이를 ㉕야기할 수 있다. 무상으로 부조가 이루어지므로, 젊은 시절에는 소득을 모두 써 버리고 노년에는 공공 부조에 의존하려는 ㉖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를 징수한 뒤, 적립된 연금 기금을 국가의 책임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은퇴한 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적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는 ㉗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㉘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이 제도를 계층 간,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에게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과 비슷한 연금을 지급하고, 자녀 세대의 보험료로 부모 세대의 연금을 충당하는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후자는 이처럼 사회 구성원 일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소득 재분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자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이 비판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두 입장은 요사이 연금 기금의 투자 방향에 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원래 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가입자들이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맡긴 신탁 기금으로 보고,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대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㉙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보고, 이를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연금 기금을 일종의 신탁 기금으로 규정해 온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㉚확충하는 데 이 막대한 돈을 직접 활용하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 공공 부조 :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사회적 최저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거나 무료 혜택을 주는 제도.

42. ㉔~㉚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1점]

① ㉔ :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 움.

→ (X) 도모: 「명사」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움.

② ㉕ : 일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킴.

→ (O)

③ ㉖ :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

→ (O)

④ ㉗ : 무엇을 만들어서 이룸.

→ (O)

⑤ ㉘ : 늘리고 넓혀 충실하게 함.

→ (O)

사회 계층은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상·중·하의 세 층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중간층은 상·하층 사이의 완충지대로서, 사회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개인이 느끼는 계층적 소속감을 계층 귀속 의식이라고 하는데, 중간층 귀속 의식이 하층으로 확산될수록 사회는 그만큼 안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중간층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산업 자본주의 이전에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가를 중심으로 중간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산업 자본가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중간층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층으로 몰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사회 안정이 위협 받게 되자,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 보장 제도를 도입하여 위기에 대처하려고 하였다.

20세기에 접어들어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급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중간 관리자나 사무직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중간층의 주축으로 성장하였다. 물론 대량 생산되던 내구성 상품에 대한 소비가 급감하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대량 실업에 의한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여 중간층이 위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대규모 공공 투자 정책으로 실업이 완화되면서 위기는 해소되었다. 또한 최저 임금제의 실시를 따라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대량 소비 체제가 구축되었다. 그 결과 중간층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체제를 이끌며 20세기 중반까지 사회 안정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면서 사회는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기업은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 자동화와 자동화된 생산 시설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지 못한 노동자와 중간층은 위기 상황으로 내몰렸고 이로 인해 다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기대 수준과 현실의 괴리가 빚어내는 상대적 박탈감이 중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하층에서의 중간층 귀속 의식도 약화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 위기의 해법을 찾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각 사회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과 사회 안전망을 보강할 대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양극화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유연한 상황 적응력을 갖추면서도 강자의 양보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추구해야 한다는 ‘자본주의 4.0’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22.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사회 계층과 관련된 문헌을 근거로 중간층의 사회적 기능을 논증하였다.
 - (X) 사회 계층과 관련된 문헌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층의 사회적 기능을 논증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논증이란 근거를 들어 옳고 그름을 밝히는 일인데, 이 글은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밝히는 내용이 아니죠.
- ② 중간층의 기능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반박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 (X) 기존의 관점과 새로운 관점의 대립 같은 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옛날엔 어땠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등과 같은 것이 없네요.
- ③ 중간층의 심리적 특성을 도출하여 중간층 귀속 의식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 (X) 중간층의 ‘심리적 특성’을 도출했다고 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 ④ 자본주의의 흐름에 따른 중간층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 (O) 자본주의의 흐름, 즉 역사적 전개에 맞추어 중간층이 변화되는 모습을 중심으로 글이 전개되고 있네요. 산업 자본주의 이전에는 자영업자들이 중간층이었는데,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중간층은 위축되며...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 ⑤ 객관적 사례를 제시하여 중간층과 관련된 이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 (X) 중간층 이론이 제시되지도 않았으니, 당연히 이를 객관적 사례로 검증한다는 말도 성립될 수 없겠죠.

사회 계층은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상·중·하의 세 층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중간층은 상·하층 사이의 완충지대로서, 사회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개인이 느끼는 계층적 소속감을 계층 귀속 의식이라고 하는데, 중간층 귀속 의식이 하층으로 확산될수록 사회는 그만큼 안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중간층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산업 자본주의 이전에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가를 중심으로 중간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산업 자본가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중간층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층으로 몰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사회 안정이 위협 받게 되자,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 보장 제도를 도입하여 위기에 대처하려고 하였다.

20세기에 접어들어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급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중간 관리자나 사무직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중간층의 주축으로 성장하였다. 물론 대량 생산되던 내구성 상품에 대한 소비가 급감하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대량 실업에 의한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여 중간층이 위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대규모 공공 투자 정책으로 실업이 완화되면서 위기는 해소되었다. 또한 최저 임금제의 실시를 따라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대량 소비 체제가 구축되었다. 그 결과 중간층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체제를 이끌며 20세기 중반까지 사회 안정의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면서 사회는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기업은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 자동화와 자동화된 생산 시설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지 못한 노동자와 중간층은 위기 상황으로 내몰렸고 이로 인해 다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기대 수준과 현실의 괴리가 빚어내는 상대적 박탈감이 중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하층에서의 중간층 귀속 의식도 약화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 위기의 해법을 찾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각 사회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과 사회 안전망을 보강할 대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양극화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유연한 상황 적응력을 갖추면서도 강자의 양보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추구해야 한다는 '자본주의 4.0'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23. 위 글에서 설명한 '양극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중반 이후 일부 국가에서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 (O) 경제 시스템이 산업 자본주의 단계로 발전하면서 중간층이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몰락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 보장 제도를 도입했다고 나타납니다.

② 19세기 중반 이후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 (X) 위 글에서 '양극화 현상'을 수식하는 말을 살펴봅시다. '중간층은 ~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층으로 몰락하는'이었습니다. 즉 위 글에서 말하는 '양극화 현상'은 중간층이 하층으로 몰락하여, 중간층은 얇고 상층과 하층으로 몰린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중간층이 두꺼워진다면 양극화 현상은 해소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시대 흐름에 따른 중간층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19세기 중반: 양극화 현상 발생
- 20세기 초: 양극화 현상 해소(중간층 성장)
- 세계 대공황: 양극화 현상 발생(중간층 위축)
- 20세기 중반: 양극화 현상 해소(중간층 성장)
- 20세기 후반: 양극화 현상 발생(중간층 위기)

③ 19세기 후반에는 산업 자본가에 대한 중간층의 경쟁력 약화 때문에 나타났다.

→ (O) 당시에 산업 자본가들이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중간층은 '경쟁에서 밀려'났다고 하네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으니 밀려났다고 봐야겠지요.

④ 20세기 후반에는 19세기 후반의 경우와는 다른 직업군에서 나타났다.

→ (O) 19세기 후반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중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는 중간 관리자나 사무직이 중간층이었고, 이들 중 기술 발전에 대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경쟁력을 잃고 위기 상황에 몰렸겠네요.

⑤ 20세기 후반에는 생산 및 사무 자동화의 확대에 대처하지 못해서 나타났다.

→ (O)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급속한 기술 발전, 즉 기존에는 사람이 해야 했던 일들이 기계에 의해 자동화되는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동화는 필연적으로 사무직이나 관리자에 대한 시장 수요를 줄어든게 만들겠죠. 그 결과 다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회 계층은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상·중·하의 세 층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중간층은 상·하층 사이의 완충지대로서, 사회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개인이 느끼는 계층적 소속감을 계층 귀속 의식이라고 하는데, **중간층 귀속 의식이 하층으로 확산될수록 사회는 그만큼 안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중간층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산업 자본주의 이전에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가를 중심으로 중간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산업 자본가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중간층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층으로 몰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사회 안정이 위협 받게 되자,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 보장 제도를 도입하여 위기에 대처하려고 하였다.

20세기에 접어들어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급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중간 관리자나 사무직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중간층의 주축으로 성장하였다. 물론 대량 생산되던 내구성 상품에 대한 소비가 급감하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대량 실업에 의한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여 중간층이 위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대규모 공공 투자 정책으로 실업이 완화되면서 위기는 해소되었다. 또한 최저 임금제의 실시를 따라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대량 소비 체제가 구축되었다. 그 결과 중간층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체제를 이끌며 20세기 중반까지 사회 안정의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면서 사회는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기업은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 자동화와 자동화된 생산 시설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지 못한 노동자와 중간층은 위기 상황으로 내몰렸고 이로 인해 다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기대 수준과 현실의 괴리가 빚어내는 상대적 박탈감이 중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하층에서의 중간층 귀속 의식도 약화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 위기의 해법을 찾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각 사회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과 사회 안전망을 보강할 대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양극화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유연한 상황 적응력을 갖추면서도 강자의 양보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추구해야 한다는 ‘자본주의 4.0’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24. 위 글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중간층을 확대하고 중간층 귀속 의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 (O) 위 글은 중간층과 중간층 귀속 의식이 무엇이며, 그것이 확대되고 축소됨에 따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선지의 주장은 이러한 글의 내용으로부터 충분히 도출할 수 있겠네요.

②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중간층과 하층의 기대 수준을 다소 낮추도록 해야 한다.

→ (X) ‘기대 수준’이라는 말은 본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근거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은 도출될 수 없죠. 왜냐하면 ‘위기’는 ‘기대 수준’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니까요.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는데 이에 속도를 맞추지 못한 노동자와 중간층이 위기에 몰렸다고 나타납니다. 이들이 기대 수준을 낮추더라도 상대적 박탈감만 해소될 수 있겠네요.

③ 중간층과 하층이 보다 상위의 계층 귀속 의식을 갖도록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

→ (X) 본문에서는 중간층 귀속 의식이 하층으로 확산될수록 사회는 안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하층이 보다 상위의 계층 귀속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중간층이 상층의 계층 귀속 의식을 갖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 중간층의 위기 현상은 어쩔 수 없지만 중간층 귀속 의식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 (X) 어쩔 수 없다? 세계 각국에서 중간층의 위기 현상을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놔두자? 그런 주장은 도출될 수 없겠죠.

⑤ 사회의 각 구성원이 계층적 지위와 계층 귀속 의식을 일치시키며 본분을 지켜야 한다.

→ (X) 군근신신부부자자 공자님 말씀인가요? 얼핏 맞는 말 같겠지만, 본문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중간층 귀속 의식이 하층으로 확산될수록 사회는 안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반대로 하층이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사회는 불안정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기업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에 비해 근로자가 더 많이 노력하기를 바라는 반면, 근로자는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해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이처럼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보상에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약속이 인센티브 계약이다. 인센티브 계약에는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명시적 계약은 법원과 같은 제3자에 의해 강제되는 약속이므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 근로자의 노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 대신에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약속이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다. 이 계약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가령, 근로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고정급+ $\alpha \times$ 성과'(0 $\leq \alpha \leq 1$)라고 할 때, 인센티브 강도를 나타내는 α 가 커질수록 근로자는 고정급에 따른 기본 노력 외에도 성과급에 따른 추가적인 노력을 더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 노력과 달리 추가적인 노력에 따른 성과는 α 가 커질수록 더 많은 몫을 자신이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α 를 늘리면 근로자의 노력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가 더욱 늘어나, 추가적인 성과 가운데 많은 몫을 근로자에게 주더라도 기업의 이윤은 늘어난다.

그러나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α 가 커짐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기도 한다. 첫째,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의 소득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성과는 근로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작업 상황이나 여건, 운 등과 같은 우연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득이 불확실해지는 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위험 프리미엄* 성격의 추가적인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α 가 커지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이 늘어나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한다. 둘째,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들이 보상을 잘 받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왜곡 문제를 발생시킨다. 성과 가운데에는 측정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하지만 성과 측정이 어려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업무를 근로자들이 등한시하게 되면 기업 전체의 성과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α 가 커지면 인센티브를 왜곡하는 문제가 악화되어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하는 것이다.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고 인센티브 왜곡의 문제가 중요한 경우에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성과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보너스, 복지 혜택, 승진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암묵적 계약은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실제로 맺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르면 상대방과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일 경우에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계약의 이행으로 본다. 물론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여 협력 관계를 끊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못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에 의존할 때에는 기업의 평가와 보상이 공정하다고 근로자가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8.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이해 상충은 근로자의 노력을 반영하는 보상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 문제이다.
 - (O) 첫 문단에서 인센티브 계약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조금 바꿔서 풀어 놓았네요.
- ②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인센티브 계약에 의해 근로자의 노력을 늘리려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 (O)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인센티브 계약은 명시적 계약입니다. 그런데 명시적 계약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근로자들이 보상과 관련된 성과에만 노력을 늘리게 된다는 것이었죠. 중요하더라도 보상받지 못하는 업무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면서 기업 전체의 성과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 ③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에서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는 것은 노력 자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 (O) 노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에 기초한다는 말을 조금 다르게 풀어 서술하였네요.
- ④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 경우에는 객관적 평가보다 주관적 평가에 기초한 보상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 (O)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든 경우인데 역지로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을 이용하면 인센티브 왜곡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죠.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사용자-기업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합니다.
- ⑤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서는 명시적인 인센티브의 강도가 높은 것이 효과적이다.
 - (X)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에서 자신들의 노력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인센티브 강도가 높다면, 인센티브 왜곡 문제가 더욱 악화되겠지요.

기업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에 비해 근로자가 더 많이 노력하기를 바라는 반면, 근로자는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해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이처럼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보상에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약속이 인센티브 계약이다. 인센티브 계약에는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명시적 계약은 법원과 같은 제3자에 의해 강제되는 약속이므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 근로자의 노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 대신에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약속이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다. 이 계약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가령, 근로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고정급+ α ×성과'(0 \leq α \leq 1)라고 할 때, 인센티브 강도를 나타내는 α 가 커질수록 근로자는 고정급에 따른 기본 노력 외에도 성과급에 따른 추가적인 노력을 더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 노력과 달리 추가적인 노력에 따른 성과는 α 가 커질수록 더 많은 몫을 자신이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α 를 늘리면 근로자의 노력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가 더욱 늘어나, 추가적인 성과 가운데 많은 몫을 근로자에게 주더라도 기업의 이윤은 늘어난다.

그러나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α 가 커짐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기도 한다. 첫째,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의 소득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성과는 근로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작업 상황이나 여건, 운 등과 같은 우연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득이 불확실해지는 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위험 프리미엄* 성격의 추가적인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α 가 커지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이 늘어나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한다. 둘째,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들이 보상을 잘 받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왜곡 문제를 발생시킨다. 성과 가운데에는 측정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하지만 성과 측정이 어려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업무를 근로자들이 등한시하게 되면 기업 전체의 성과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α 가 커지면 인센티브를 왜곡하는 문제가 악화되어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하는 것이다.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고 인센티브 왜곡의 문제가 중요한 경우에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성과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보너스, 복지 혜택, 승진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암묵적 계약은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실제로 맺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르면 상대방과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일 경우에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계약의 이행으로 본다. 물론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여 협력 관계를 끊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못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에 의존할 때에는 기업의 평가와 보상이 공정하다고 근로자가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법원과 같은 제3자가 강제할 수 없는 약속이다.

→ (O) 그렇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행되는 계약입니다.

②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한 약속이다.

→ (X) 이건 명시적 계약과 관련된 설명이죠.

③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약속이다.

→ (O) 암묵적 계약은 각자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계약입니다.

④ 상대방의 신뢰를 잃음으로써 초래되는 장기적 손실이 클수록 더 잘 지켜지는 약속이다.

→ (O) 신뢰를 잃고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이익보다, 신뢰를 잃음으로써 초래되는 장기적 손실이 훨씬 더 크다면 다들 암묵적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죠.

⑤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작을수록 더 잘 지켜지는 약속이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에 비해 근로자가 더 많이 노력하기를 바라는 반면, 근로자는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해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이처럼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보상에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약속이 인센티브 계약이다. 인센티브 계약에는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명시적 계약은 법원과 같은 제3자에 의해 강제되는 약속이므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 근로자의 노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 대신에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약속이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다. 이 계약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가령, 근로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고정급+ $\alpha \times$ 성과'(0 \leq α \leq 1)라고 할 때, 인센티브 강도를 나타내는 α 가 커질수록 근로자는 고정급에 따른 기본 노력 외에도 성과급에 따른 추가적인 노력을 더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 노력과 달리 추가적인 노력에 따른 성과는 α 가 커질수록 더 많은 몫을 자신이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α 를 늘리면 근로자의 노력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가 더욱 늘어나, 추가적인 성과 가운데 많은 몫을 근로자에게 주더라도 기업의 이윤은 늘어난다.

그러나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α 가 커짐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기도 한다. 첫째,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의 소득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성과는 근로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작업 상황이나 여건, 운 등과 같은 우연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득이 불확실해지는 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위험 프리미엄* 성격의 추가적인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α 가 커지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이 늘어나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한다. 둘째,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들이 보상을 잘 받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왜곡 문제를 발생시킨다. 성과 가운데에는 측정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하지만 성과 측정이 어려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업무를 근로자들이 등한시하게 되면 기업 전체의 성과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α 가 커지면 인센티브를 왜곡하는 문제가 악화되어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하는 것이다.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고 인센티브 왜곡의 문제가 중요한 경우에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성과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보너스, 복지 혜택, 승진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암묵적 계약은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실제로 맺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르면 상대방과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일 경우에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계약의 이행으로 본다. 물론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여 협력 관계를 끊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못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에 의존할 때에는 기업의 평가와 보상이 공정하다고 근로자가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위험 프리미엄 : 소득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근로자는 사실상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느끼게 되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보상.

30. 밑글에 근거할 때, <보기>의 ㉠,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가.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성과를 늘리기 위한 근로자의 노력을 더욱 늘어나게 하는 효과만 생각한다면, α 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한다.
 나.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근로자의 소득을 더욱 불확실하게 하는 효과만 생각한다면, α 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한다.
 다.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근로자의 인센티브 왜곡을 더욱 커지게 하는 효과만 생각한다면, α 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한다.

㉠ 증가 ㉡ 감소 ㉢ 감소

→ (0) α 가 커질수록 추가적인 노력을 더 기울이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증가한 추가적인 성과 중 많은 몫을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로 주더라도 남는 장사라고 본문에서는 설명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꼼꼼한 친구들 중 일부는 α 가 점점 커지다가 본문에 제시된 최댓값인 1이 되면($\alpha=1$) 추가적인 노력으로 얻은 성과에 대해 기업이 얻는 이윤이 0이 되므로 '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증가한다'는 거짓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감소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증가' 또는 '감소' 중 하나를 꼽아야 하는데, '증가'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이네요.

그리고 α 가 1일지라도 기업의 이윤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본문에 나타납니다. 첫 문단에서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노력한 것에 비해 더 많은 보상을 바란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기본급'만큼의 노력도 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추가적인 성과의 100%($\alpha=1$)를 주더라도, 인센티브가 없을 때보다 기업의 이윤은 증가합니다. 적어도 '기본급'만큼의 노력은 꼭 채웠을 것이기 때문이죠.

㉡ 증가 증가 감소
 ㉢ 증가 감소 증가
 ㉣ 감소 증가 증가
 ㉤ 감소 증가 감소

상업 광고는 기업은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요긴하다. 기업은 마케팅 활동의 주요한 수단으로 광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기업과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려 한다. 소비자는 소비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성능, 가격, 판매 조건 등의 정보를 광고에서 얻으려 한다. 광고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다면 이를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광고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광고가 사회 전체에 피해를 낳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되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과연 광고로 인한 피해를 책임질 당사자로서 누구를 상정할 것인가였다. 초기에는 ㉠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에 따라 광고 정보를 활용한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광고 정보가 정직한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소비자는 이성적으로 이를 판단하여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그래서 기업은 광고에 의존하여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았고, 광고의 기만성에 대한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게 있었다.

책임 주체로 기업을 상정하여 ㉡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부상하게 된 배경은 복잡적이다.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광범위해지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워졌고, 상품에 응용된 과학 기술이 복잡해지고 첨단화되면서 상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다른 상품 광고와의 차별화를 위해 통념에 어긋나는 표현이나 장면도 자주 활용되었다. 그리하여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기업이 광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여러 광고 규제는 이런 공감대 속에서 나온 것인데, 이는 크게 보아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법 조항을 통해 광고를 규제하는 법적 규제는 광고 또한 사회적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사실에 반하는 광고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 규제는 허위 광고나 기만 광고 등을 불공정 경쟁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정부 기관이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으로 등장했다. 법적 규제가 광고의 역기능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강제적 조치라면, 자율 규제는 광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적 조치이다. 여기서 광고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으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의 가치와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광고주, 광고업계, 광고 매체사 등이 광고 집행 기준이나 윤리 강령 등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고자 한다. 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27. 앞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광고 규제의 배경과 유형

— 피해 책임의 주체와 규제의 주체를 중심으로

→ (O) 이 글은 상업 광고에 대한 규제가 어떤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유형(종류)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② 광고 규제의 사회적 영향

— 규제의 도입 배경과 원인을 중심으로

→ (X) 규제의 도입 배경과 원인이 나타납니다만, 그것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이 글의 핵심은 아닙니다.

③ 광고 규제의 필요성과 의의

— 시대에 따른 소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 (X) 광고 규제의 의의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④ 광고 규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 문제점의 진단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X) 이 글은 '순기능에는 이런 게 있고, '한편' 역기능은 이런 게 있고'식으로 전개되는 글이 아니었죠.

⑤ 광고 규제에 대한 대립적 시각

—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 극대화 방안을 중심으로

→ (X) 규제에 대한 대립적 시각이라... 크게 보면 뭐 책임 주체를 기준으로 대립적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는 강제와 자율의 대립 구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 극대화 방안이 이 글의 핵심 요소는 아니죠. 책임 주체와 규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분류되는 광고의 규제 유형에 대한 설명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상업 광고는 기업은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요긴하다. 기업은 마케팅 활동의 주요한 수단으로 광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기업과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려 한다. 소비자는 소비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성능, 가격, 판매 조건 등의 정보를 광고에서 얻으려 한다. 광고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다면 이를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광고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광고가 사회 전체에 피해를 낳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되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과연 광고로 인한 피해를 책임질 당사자로서 누구를 상정할 것인가였다. 초기에는 ㉠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에 따라 광고 정보를 활용한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광고 정보가 정직한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소비자는 이성적으로 이를 판단하여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그래서 기업은 광고에 의존하여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았고, 광고의 기만성에 대한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게 있었다.

책임 주체로 기업을 상정하여 ㉡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부상하게 된 배경은 복잡적이다.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광범위해지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워졌고, 상품에 응용된 과학 기술이 복잡해지고 첨단화되면서 상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다른 상품 광고와의 차별화를 위해 통념에 어긋나는 표현이나 장면도 자주 활용되었다. 그리하여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기업이 광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여러 광고 규제는 이런 공감대 속에서 나온 것인데, 이는 크게 보아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법 조항을 통해 광고를 규제하는 법적 규제는 광고 또한 사회적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사실에 반하는 광고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 규제는 허위 광고나 기만 광고 등을 불공정 경쟁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정부 기관이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으로 등장했다. 법적 규제가 광고의 역기능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강제적 조치라면, 자율 규제는 광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적 조치이다. 여기서 광고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으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의 가치와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광고주, 광고업계, 광고 매체사 등이 광고 집행 기준이나 윤리 강령 등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고자 한다. 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28.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광고 주체의 자율 규제가 잘 작동될수록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의 역할도 커진다.

→ (X)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를 '보완'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율 규제가 잘 작동된다면 법적 규제의 역할이 커질 필요가 없겠지요.

②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정도가 클수록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필요성이 약화된다.

→ (X) 광고에서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위기에 처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상충되는 정도가 클수록 규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네요.

③ 시장 독과점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약화되고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이 부각되었다.

→ (X) 독과점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부상하게 된 배경입니다.

④ 첨단 기술을 강조한 상품의 광고일수록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진다.

→ (O) 본문에 있는 그대로 서술되었습니다.

⑤ 광고의 기만성을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경우, 그 이유는 소비자에게 이성적 판단 능력이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 (X) 광고의 기만성을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경우, 그 이유는 '소비자는 (광고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해당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업 광고는 기업은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요긴하다. 기업은 마케팅 활동의 주요한 수단으로 광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기업과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려 한다. 소비자는 소비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성능, 가격, 판매 조건 등의 정보를 광고에서 얻으려 한다. 광고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다면 이를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광고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광고가 사회 전체에 피해를 낳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되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과연 광고로 인한 피해를 책임질 당사자로서 누구를 상정할 것인가였다. 초기에는 ㉠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에 따라 광고 정보를 활용한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광고 정보가 정직한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소비자는 이성적으로 이를 판단하여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그래서 기업은 광고에 의존하여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았고, 광고의 기만성에 대한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게 있었다.

책임 주체로 기업을 상정하여 ㉡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부상하게 된 배경은 복잡적이다.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광범위해지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워졌고, 상품에 응용된 과학 기술이 복잡해지고 첨단화되면서 상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다른 상품 광고와의 차별화를 위해 통념에 어긋나는 표현이나 장면도 자주 활용되었다. 그리하여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기업이 광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여러 광고 규제는 이런 공감대 속에서 나온 것인데, 이는 크게 보아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법 조항을 통해 광고를 규제하는 법적 규제는 광고 또한 사회적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사실에 반하는 광고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 규제는 허위 광고나 기만 광고 등을 불공정 경쟁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정부 기관이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으로 등장했다. 법적 규제가 광고의 역기능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강제적 조치라면, 자율 규제는 광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적 조치이다. 여기서 광고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으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의 가치와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광고주, 광고업계, 광고 매체사 등이 광고 집행 기준이나 윤리 강령 등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고자 한다. 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다 ㉡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

→ (O) 기업이 책임을 진다는 거니까 소비자에게 유리하겠네요. 당연한 말입니다.

② ㉠보다 ㉡이 광고의 사회적 책임을 더 중시한다.

→ (O) ㉡은 '기업'이 책임을 지는 건데 그걸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책임의 주체는 '기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지는 '책임'이라는 것이 바로 광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겁니다. 본문에도 '사회적 측면'에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서술이 있네요.

③ ㉡보다 ㉠을 따를 때 광고 표현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 (O) 혹시나 광고 표현을 잘못 이해한 소비자들이 있어, 피해를 입는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규제 없음) 훨씬 더 자유롭게 광고를 제작할 수 있겠네요. ㉡을 따르게 되면 '여러 광고 규제'를 준수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되면 광고에 대한 자율성은 축소됩니다.

④ ㉡보다 ㉠을 따를 때 정부가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더 크다.

→ (X) 정부가 법적 규제를 가하는 법적 규제는 ㉡을 따르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을 따른다면 정부가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오롯이 소비자 개인이 광고의 기만성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⑤ ㉠과 ㉡은 모두 광고의 역기능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다.

→ (O) 광고로 인한 피해가 있는데 이를 누가 책임질지에 관해 ㉠과 ㉡이 서로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과 ㉡ 모두 광고의 역기능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업 광고는 기업은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요긴하다. 기업은 마케팅 활동의 주요한 수단으로 광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기업과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려 한다. 소비자는 소비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성능, 가격, 판매 조건 등의 정보를 광고에서 얻으려 한다. 광고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다면 이를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광고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광고가 사회 전체에 피해를 낳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되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과연 광고로 인한 피해를 책임질 당사자로서 누구를 상정할 것인가였다. 초기에는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에 따라 광고 정보를 활용한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광고 정보가 정직한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소비자는 이성적으로 이를 판단하여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그래서 기업은 광고에 의존하여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았고, 광고의 기만성에 대한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게 있었다.

책임 주체로 기업을 상정하여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부상하게 된 배경은 복잡적이다.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광범위해지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워졌고, 상품에 응용된 과학 기술이 복잡해지고 첨단화되면서 상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다른 상품 광고와의 차별화를 위해 통념에 어긋나는 표현이나 장면도 자주 활용되었다. 그리하여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기업이 광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여러 광고 규제는 이런 공감대 속에서 나온 것인데, 이는 크게 보아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법 조항을 통해 광고를 규제하는 법적 규제는 광고 또한 사회적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사실에 반하는 광고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 규제는 허위 광고나 기만 광고 등을 불공정 경쟁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정부 기관이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으로 등장했다. 법적 규제가 광고의 역기능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강제적 조치라면, 자율 규제는 광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적 조치이다. 여기서 광고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으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의 가치와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광고주, 광고업계, 광고 매체사 등이 광고 집행 기준이나 윤리 강령 등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고자 한다. 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광고 규제 중에는 소비자가 광고의 피해에 직접 대응하는 소비자 규제가 있다. 이는 소비자야말로 불공정하거나 불건전한 광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점에 근거한다. 이러한 광고들은 사회 전체에도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소비자 규제는 발생한 피해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그릇된 정보의 유통 자체를 문제 삼기도 한다. 이때 규제의 주체로서 집단적 성격을 지니는 소비자는 법적 규제를 입안하거나 실행하는 주체는 아니다. 그래서 소비자 규제는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며, 소비자의 권리 행사는 소비자 보호 운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 ① 소비자 규제는 소비자들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을 지지하겠군.
→ (X) 소비자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책임'이나 '부담'을 줄이고 '권리'를 늘려야 합니다.
- ② 소비자 규제는 광고 규제의 효과 면에서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보완한다는 의의가 있군.
→ (O) 원래 피해 당사자가 아니면 대응이 시큰둥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정부 기관이 적극적인 경우는 참 보기 어렵죠. 광고 업계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 규제는 두 규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도록 압박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보기>에 나타나 있네요.
- ③ 소비자 규제의 주체는 광고의 피해에 직접 대응하기 때문에 자율 규제의 주체와 긴장하는 관계에 있겠군.
→ (O) 자율 규제의 주체는 광고주(기업), 광고업계 등으로 소비자와 긴장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④ 소비자 규제는 광고 주체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규제와 공통점이 있군.
→ (O) '견제하다'는 '일정한 작용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이 지나치게 세력을 펴거나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억누른다.'라는 뜻입니다. 소비자 보호 운동 등으로 피해에 직접 대응한다는 소비자 규제는 충분히 견제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⑤ 소비자 규제는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광고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겠군.
→ (O) 불공정하거나 불건전한 광고는 사회 전체에도 피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경제적 측면, 즉 금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저급하고 타락한 문화가 퍼지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피해를 미리 예상하고 대응하여 규제할 수 있게 된다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 수행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생산물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 공공 서비스의 특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성질을 말하며, 경합성은 한 사람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A] 따라 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치안은 사용자가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다. 이에 비해 배제성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경합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많아 도서 열람이나 대출이 제한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공공 서비스가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약한 사회 기반 시설 공급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이런 경우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은 주로 세금을 비롯한 공적 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하지만 복지와의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관련 조직이 늘어나고 행정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정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 위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민간 위탁이란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결정권과 서비스 관리의 책임을 정부가 갖되, 서비스 생산은 민간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다.

민간 위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경쟁 입찰 방식'이다. 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 간 경쟁 입찰을 거쳐 서비스 생산자를 선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공원과 같은 공공 시설물 관리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정부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경감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면허 발급 방식'이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과 시설이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에게 정부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공 서비스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공급을 민간의 자율에 맡겨 공공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절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있는데, 이는 민간이 운영하는 종합 복지관과 같이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기관에 보조금을 주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위탁 업체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 위탁 업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성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평가와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위탁 제도의 도입을 결정할 때에는 서비스의 성격과 정부의 관리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23. 밑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공공 서비스의 제공 목적

→ (O) 공공 서비스의 제공(공급)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시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② 공공 서비스 공급의 주체

→ (O) "정부는"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역시 제시문 첫째 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③ 공공 서비스 범위의 확대 배경

→ (O) 복지와 같은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④ 공공 서비스의 수익 산정 방식

→ (X) 수익을 산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산정(算定)은 셈하여(계산하여) 정한다는 뜻입니다. 매출과 투입 비용, 시간 등을 바탕으로 '수익'이라는 것을 계산해 낸다는 것이죠. 밑글에서 공공 서비스의 수익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 읽은 것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⑤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 방식

→ (O) 경쟁 입찰 방식, 면허 발급 방식, 보조금 지급 방식 세 가지가 있다고 나타나네요.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 수행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생산물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 공공 서비스의 특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성질을 말하며, 경합성은 한 사람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A] 따라 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치안은 사용자가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다. 이에 비해 배제성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경합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많아 도서 열람이나 대출이 제한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공공 서비스가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약한 사회 기반 시설 공급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이런 경우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은 주로 세금을 비롯한 공적 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하지만 복지와 같은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관련 조직이 늘어나고 행정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정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 위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민간 위탁이란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결정권과 서비스 관리의 책임을 정부가 갖되, 서비스 생산은 민간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다.

민간 위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경쟁 입찰 방식'이다. 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 간 경쟁 입찰을 거쳐 서비스 생산자를 선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공원과 같은 공공 시설물 관리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정부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경감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면허 발급 방식'이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과 시설이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에게 정부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공 서비스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공급을 민간의 자율에 맡겨 공공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절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있는데, 이는 민간이 운영하는 종합 복지관과 같이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기관에 보조금을 주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위탁 업체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 위탁 업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성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평가와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위탁 제도의 도입을 결정할 때에는 서비스의 성격과 정부의 관리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24. [A]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특성이 변화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 (X) 특성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② 대상의 특성을 사례와 더불어 설명하고 있다.
→ (O) '공공 서비스'라는 대상의 특성을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③ 대상의 가치와 효용을 비유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X) 공공 서비스의 가치나 효용(보람이나 쓸모)은 아주 짧게 나타나긴 하지만 비유적인 서술 방식은 없네요.
- ④ 대상이 지닌 문제점의 원인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 (X)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⑤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 (X) 인식의 변화, 예전에는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을 이제는 이렇게 받아들임과 같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 수행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생산물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 공공 서비스의 특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성질을 말하며, 경합성은 한 사람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A] 따라 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치안은 사용자가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다. 이에 비해 배제성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경합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많아 도서 ③열람이나 대출이 제한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공공 서비스가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약한 사회 기반 시설 공급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이런 경우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은 주로 세금을 비롯한 공적 재원으로 ⑥충당을 한다. 하지만 복지와 같은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관련 조직이 늘어나고 행정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정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 위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민간 위탁이란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결정권과 서비스 관리의 책임을 정부가 갖되, 서비스 생산은 민간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다.

민간 위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경쟁 입찰 방식'이다. 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 간 경쟁 입찰을 거쳐 서비스 생산자를 선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공원과 같은 공공 시설물 관리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정부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②경감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면허 발급 방식'이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과 시설이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에게 정부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공 서비스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공급을 민간의 자율에 맡겨 공공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절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있는데, 이는 민간이 운영하는 종합 복지관과 같이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기관에 보조금을 주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위탁 업체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 위탁 업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성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평가와 ④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을 ③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①민간 위탁 제도의 도입을 결정할 때에는 서비스의 성격과 정부의 관리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25. 윗글의 내용상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공공 서비스가 사회 기반 시설의 공급에 집중되어 공공 서비스의 수익이 제한되기 때문
 - (X) 윗글에서는 민간 위탁 자체가 사회 기반 시설 공급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 ②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는 공공 서비스의 공익성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
 - (O) 어떤 위험 요인이 있을까요? 먼저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점점 서비스 질이 떨어지겠죠? 어디까지? 수익이 충분히 발생할 때까지 떨어질 겁니다.

다음으로 '평가와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 업체에 맡겨 두고서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태만을 부릴 가능성도 없지 않겠네요.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민간 위탁 공공 서비스는 공익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 ③ 민간 위탁은 대부분 면허 발급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정부의 관리 비용과 공공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
 - (X) 일단 가장 일반적인 것, '대부분'이라고 할 만한 것은 면허 발급 방식이 아니라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그리고 면허 발급 방식에서 관리 비용이나 생산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추론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 ④ 민간 위탁에 의해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면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필수적으로 요청되어 수요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
 - (X) 보조금 지급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민간 위탁 방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수요자(시민)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추론하는 것도 잘못된 이해입니다.
 - ⑤ 공공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민간 위탁 방식이 단일화되어 있어서 공공 서비스의 생산과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
 - (X) 민간 위탁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 발급 방식의 경우에는 공공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절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나타나 있네요.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 수행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생산물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 공공 서비스의 특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성질을 말하며, 경합성은 한 사람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A] 따라 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치안은 사용자가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다. 이에 비해 배제성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경합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많아 도서 ㉔열람이나 대출이 제한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공공 서비스가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약한 사회 기반 시설 공급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이런 경우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은 주로 세금을 비롯한 공적 재원으로 ㉕충당을 한다. 하지만 복지와 같은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관련 조직이 늘어나고 행정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정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 위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민간 위탁이란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결정권과 서비스 관리의 책임을 정부가 갖되, 서비스 생산은 민간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다.

민간 위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경쟁 입찰 방식'이다. 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 간 경쟁 입찰을 거쳐 서비스 생산자를 선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공원과 같은 공공 시설물 관리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정부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㉖경감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면허 발급 방식'이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과 시설이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에게 정부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공 서비스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공급을 민간의 자율에 맡겨 공공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절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있는데, 이는 민간이 운영하는 종합 복지관과 같이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기관에 보조금을 주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위탁 업체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 위탁 업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성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평가와 ㉗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을 ㉘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㉙민간 위탁 제도의 도입을 결정할 때에는 서비스의 성격과 정부의 관리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26. ㉔~㉘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㉔ : 그는 행사 관련 서류의 열람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 (O) 도서 열람, 서류의 열람, 도서관 서류나 비슷하니까 충분히 같은 말이 쓰인 것으로 봐도 좋겠습니다.
 *열람: 책이나 문서 따위를 죽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봄.

② ㉕ : 그는 회사의 자금 충당 방안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했다.
 → (O) ~에 드는 비용을 세금 등의 공적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했습니다. 돈구멍을 메우는 느낌이 나죠? 선지의 회사의 자금 충당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어디서 구해다 돈구멍을 메우는 느낌이 나네요.
 *재원: 재화나 자금이 나올 원천.
 *충당: 모자라는 것을 채워 메움.

③ ㉖ : 직원들의 노력에도 회사의 손익이 계속 경감될 뿐이다.
 → (X) 정부의 재정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선지의 문장은 조금 이상합니다. 회사의 손익이 경감된다고 합니다. 손익은 손해와 이익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손해와 이익이 경감된다는 것은 대체 무슨 말일까요? 진정한 아무말입니다. 이익이 경감된다는 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감되는 것의 주어는 부담이나 고통처럼 부정적인 어휘가 와야 적절합니다.
 *경감되다: 부담이나 고통 따위가 줄어서 가볍게 되다.

④ ㉗ : 정부는 무역 수지 개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 (O) 민간 업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개선된다는 것은 서비스의 수준이 더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무역 수지는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의 수출입 거래로 생기는 국제 수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개선된다는 것은 적자가 줄어들거나 흑자가 늘어나거나 하는 것이므로, 더 나은 상태로 변화한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개선: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들. / 입시 제도 개선. / 유통 구조 개선

⑤ ㉘ : 집단 이기심은 사회 발전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한다.
 → (O) 공익을 저해한다는 것은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선지의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사회 발전을 해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공통점이 있네요.
 *저해하다: 막아서 못 하도록 해치다.

사회 이론은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을 통칭한다.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19세기의 시민 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시민 사회라는 용어는 17세기에 등장했지만, 19세기 초에 이를 국가와 구분하여 개념적으로 정교화한 인물이 헤겔이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럽의 후진국인 프러시아에는 절대주의 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다. 산업 자본주의도 미성숙했던 때여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자본가들을 육성하며 심각한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다. 그는 사익의 극대화가 국부(國富)를 증대해 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를 긍정했으나, 그것이 시민 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무한한 사익 추구가 일으키는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시민 사회가 개인들이 사적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활 영역이자 그 욕구를 사회적 의존 관계 속에서 추구하게 하는 공동체적 윤리성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빈곤과 계급 갈등은 시민 사회 내에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국가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질서를 확립할 최종 주체로 설정하면서 시민 사회가 국가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혁명을 이끌었던 계몽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고 빈부 격차와 계급 갈등은 격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단체와 고용주 단체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한 르 샤플리에 법이 1791년부터 약 90년간 시행되었으나, 이 법은 분출되는 사익의 추구를 억제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프랑스 시민 사회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뒤르켐은 이러한 상황을 아노미, 곧 무규범 상태로 파악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공리주의가 사실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과 공동체적 연대를 실현할 도덕적 개인주의의 규범에 주목하면서, 이를 수행할 주체로서 ㉡직업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헤겔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르켐은 직업 단체가 정치적 중간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국가에 전달하는 한편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헤겔과 뒤르켐은 시민 사회를 배경으로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직업 단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두 학자의 시민 사회론이 철저히 시대의 산물이

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들의 이론은 과학적 연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론이 갖는 객관적 속성은 그 이론이 마주 선 현실의 문제 상황이나 이론가의 주관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2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논지를 제시한 후, 대표적인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명료화하고 있다.

→ (O) 글의 첫머리에서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지만, 과학과 달리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고 논지를 밝혔습니다. 그 이후, 같은 19세기 시민 사회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은 헤겔과 뒤르켐의 사례를 검토하며, 사회 이론이 역사적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② 화제를 소개한 후, 예외적인 사례를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일반화하고 있다.

→ (X) 예외적인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주장을 제시한 후, 예상되는 반증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X) 예상되는 반증*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반증: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함. 또는 그런 증거.

④ 쟁점을 도출한 후, 각 주장의 근거 사례를 비교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 (X) 쟁점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주장도 없습니다.

⑤ 주제를 제시한 후, 동일한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초점화하고 있다.

→ (X) '동일한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동일한 사례'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사례가 아닙니다. 일종의 연구 주제, 연구 분야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동일한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말은,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무규범 상태에 대해 뒤르켐은 이렇게 분석했고, 000은 이렇게 분석했다는 식의 전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 이론은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을 통칭한다.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19세기의 시민 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시민 사회라는 용어는 17세기에 등장했지만, 19세기 초에 이를 국가와 구분하여 개념적으로 정교화한 인물이 헤겔이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럽의 후진국인 프러시아에는 절대주의 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다. 산업 자본주의도 미성숙했던 때여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자본가들을 육성하며 심각한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다. 그는 사익의 극대화가 국부(國富)를 증대해 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를 긍정했으나, 그것이 시민 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무한한 사익 추구가 일으키는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시민 사회가 개인들이 사적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활 영역이자 그 욕구를 사회적 의존 관계 속에서 추구하게 하는 공동체적 윤리성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빈곤과 계급 갈등은 시민 사회 내에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국가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질서를 확립할 최종 주체로 설정하면서 시민 사회가 국가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혁명을 이끌었던 계몽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고 빈부 격차와 계급 갈등은 격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단체와 고용주 단체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한 르 샤플리에 법이 1791년부터 약 90년간 시행되었으나, 이 법은 분출되는 사익의 추구를 억제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프랑스 시민 사회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뒤르켐은 이러한 상황을 아노미, 곧 무규범 상태로 파악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공리주의가 사실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과 공동체적 연대를 실현할 도덕적 개인주의의 규범에 주목하면서, 이를 수행할 주체로서 ㉡직업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헤겔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르켐은 직업 단체가 정치적 중간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국가에 전달하는 한편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헤겔과 뒤르켐은 시민 사회를 배경으로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직업 단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두 학자의 시민 사회론이 철저하게 시대의 산물이

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들의 이론은 과학적 연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론이 갖는 객관적 속성은 그 이론이 마주 선 현실의 문제 상황이나 이론가의 주관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2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초 프러시아에는 절대주의의 잔재와 미성숙한 산업 자본주의가 혼재하였다.

→ (O) 그냥 그대로 그렇게 서술되어 있네요.

② 프랑스 혁명 후 수십 년간 프랑스는 개인들의 사익 추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X) 혁명 이후 프랑스는 계급 갈등과 빈부 격차가 만연해 있는,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전쟁터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는 '르 샤플리에' 법을 통해 노동자나 자본가(고용주) 모두가 단체를 결성하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단체를 결성하면 때싸움이 되고 갈등과 혼란이 더 커지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법은 90년간 시행되었음에도 전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개인들의 사익 추구를 억제하는 데 실패했고 오히려 시민 사회를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낳았다고 나오네요. 따라서 '사익 추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선지 내용은 틀렸습니다. 사익 추구를 위해 단체를 결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는 할 수 있겠네요.

③ 헤겔은 국가를 빈곤 문제나 계급 갈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최종 주체라고 생각하였다.

→ (O) 그냥 그대로 그렇게 서술되어 있네요.

④ 뒤르켐은 혁명 이후의 프랑스 사회를 이기적 욕망이 조정되지 않은 아노미 상태로 보았다.

→ (O) 사익 추구가 건전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공동체 지향적이었다면 그러한 상황을 '혼란'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겠죠? '각축장', 즉 서로 이기려고 싸우는 싸움터와 같은 혼란한 상황, 이기적 욕망이 조정되지 않아 싸움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인식했다고 봐야겠습니다.

⑤ 헤겔과 뒤르켐은 공리주의가 시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 (O) 헤겔은 공리주의가 국부를 증대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개인들의 무분별한 사익 추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네요. 뒤르켐은 공리주의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므로 사회 문제를 조장한다고까지 보았습니다.

※참고※ 공리주의의 공리는 公利, 즉 공공의 이익을 뜻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功利, 즉 공명과 이익을 뜻하는 말입니다. utilitarianism을 번역한 말인데요, '유용주의'나 '이득주의'라고 번역했다면 더 직관적이었을 것 같네요. '무엇이 선한가?'란 질문에 '유용한 것이 선이다.'라고 대답하며 사익 추구를 정당화하는 주장입니다.

사회 이론은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을 통칭한다.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19세기의 시민 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시민 사회라는 용어는 17세기에 등장했지만, 19세기 초에 이를 국가와 구분하여 개념적으로 정교화한 인물이 헤겔이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럽의 후진국인 러시아에는 절대주의 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다. 산업 자본주의도 미성숙했던 때여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자본가들을 육성하며 심각한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다. 그는 사익의 극대화가 국부(國富)를 증대해 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를 긍정했으나, 그것이 시민 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무한한 사익 추구가 일으키는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시민 사회가 개인들이 사적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활 영역이자 그 욕구를 사회적 의존 관계 속에서 추구하게 하는 공동체적 윤리성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빈곤과 계급 갈등은 시민 사회 내에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국가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질서를 확립할 최종 주체로 설정하면서 시민 사회가 국가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혁명을 이끌었던 계몽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고 빈부 격차와 계급 갈등은 격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단체와 고용주 단체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한 르 샤플리에 법이 1791년부터 약 90년간 시행되었으나, 이 법은 분출되는 사익의 추구를 억제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프랑스 시민 사회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뒤르켐은 이러한 상황을 아노미, 곧 무규범 상태로 파악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공리주의가 사실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과 공동체적 연대를 실현할 도덕적 개인주의의 규범에 주목하면서, 이를 수행할 주체로서 ㉡직업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헤겔의 영향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르켐은 **직업 단체가 정치적 중간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국가에 전달하는 한편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헤겔과 뒤르켐은 시민 사회를 배경으로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직업 단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두 학자의 시민 사회론이 철저하게 시대의 산물이

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들의 이론은 과학적 연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론이 갖는 객관적 속성은 그 이론이 마주 선 현실의 문제 상황이나 이론가의 주관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23.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 실현을 추구한다.

→ (O) 그냥 그대로 그렇게 서술되어 있네요.

② 국가를 견제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 (X) 뒤르켐의 주장입니다.

③ 치안 및 복지 문제 해결의 기능을 담당한다.

→ (X) 둘 다 아니고요, 헤겔의 시민 사회론에서 '복지 행정 조직'이 해야 할 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④ 공리주의를 억제하고 도덕적 개인주의를 수용한다.

→ (X) 공리주의를 억제한다는 말은 헤겔이나 뒤르켐이나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도덕적 개인주의를 수행할 주체로서의 직업 단체는 뒤르켐만 해당합니다.

⑤ 시민 사회 외부에서 국가와의 연결 고리로 작용한다.

→ (X) 헤겔이든 뒤르켐이든 직업 단체는 시민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헤겔의 경우, 본문에 '연결 고리'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쓰이긴 했지만, 맥락이 전혀 다르게 쓰였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겔 파트에서 직업 단체와 복지 행정 조직이라는 두 기구는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라고 했습니다. 즉 두 기구가 이상 국가로 가는 열쇠라는 뜻이죠. 반면 선지의 '국가와의 연결 고리로 작용한다'는 문장에서 '연결 고리'란 매개체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국가와 시민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체란 뜻이죠. 소통의 창구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뒤르켐의 직업 단체는 국가와의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 사회 내에 위치하는 국가와의 연결 고리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사회 이론은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을 통칭한다.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19세기의 시민 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시민 사회라는 용어는 17세기에 등장했지만, 19세기 초에 이를 국가와 구분하여 개념적으로 정교화한 인물이 헤겔이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럽의 후진국인 러시아에는 절대주의 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다. 산업 자본주의도 미성숙했던 때여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자본가들을 육성하며 심각한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다. 그는 사익의 극대화가 국부(國富)를 증대해 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를 긍정했으나, 그것이 시민 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무한한 사익 추구가 일으키는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시민 사회가 개인들이 사적 욕구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생활 영역이자 그 욕구를 사회적 의존 관계 속에서 추구하게 하는 공동체적 윤리성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빈곤과 계급 갈등은 시민 사회 내에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국가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질서를 확립할 최종 주체로 설정하면서 시민 사회가 국가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혁명을 이끌었던 계몽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고 빈부 격차와 계급 갈등은 격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단체와 고용주 단체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한 르 샤플리에 법이 1791년부터 약 90년간 시행되었으나, 이 법은 분출되는 사익의 추구를 억제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프랑스 시민 사회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뒤르켐은 이러한 상황을 아노미, 곧 무규범 상태로 파악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공리주의가 사실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과 공동체적 연대를 실현할 도덕적 개인주의의 규범에 주목하면서, 이를 수행할 주체로서 ㉡직업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헤겔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르켐은 직업 단체가 정치적 중간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국가에 전달하는 한편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헤겔과 뒤르켐은 시민 사회를 배경으로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직업 단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두 학자의 시민 사회론이 철저하게 시대의 산물이

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들의 이론은 과학적 연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론이 갖는 객관적 속성은 그 이론이 마주 선 현실의 문제 상황이나 이론가의 주관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24. 윗글의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
 - (X) 사회 과학이 왜 사회 과학이겠습니까? 사회 문제를 연구할 때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이겠죠.
- ② 객관적 사회 이론은 이론가의 주관적 문제의식과 무관하다.
 - (X) 그냥 그대로 그렇게 서술되어 있네요.
- ③ 시·공간을 넘어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사회 이론이 성립할 수 있다.
 - (X) 사회 이론은 철저하게 시대의 산물이요, 그 이론이 마주 선 현실의 문제 상황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시 공간을 넘어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물리 법칙처럼) 객관적 사회 이론은 성립할 수 없겠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 ④ 과학적 연구 방법에 의거한 사회 이론은 사회 현실의 문제 상황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
 - (X) 그냥 그대로 그렇게 서술되어 있네요.
- ⑤ 사회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 이론이 만들어진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된다.
 - (O) 사회 이론은 역사적 조건이나 사회 상황, 즉 시대적 배경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회 이론이든 그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함께 살펴보아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네요.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감행하기 쉬운 상황일수록 이를 억제하는 데에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 효과적이다.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행정 기관으로부터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어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 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과징금을 올려도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되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제도이면서도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 안에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된다는 점 때문에 중복 제재의 발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엇갈리며,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의 반대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횡재라고 본다. 또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형사적 제재 수단인 벌금과 함께 부과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가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피해자들이 소송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본다. 따라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도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더라도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7. 밑글에서 다른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내용

→ (O) 이 제도(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을 내용으로 한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내용’이 무엇인지 나오네요.

②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와 관련한 논쟁

→ (O) 그렇습니다. 손해 배상금 속에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중복제재냐 아니냐 찬반양론이 있다고 합니다.

③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의 종류

→ (O) 세 가지가 소개되었습니다.

④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 사례와 문제점

→ (X)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니다. 어디에도 없네요.

*사례: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는 배경

→ (O)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합니다. (자본과 싸울 수 있는 개인은 매우 드물죠. 법원 문턱은 무척이나 높고요.) 그럼 행정 기관이 적발해서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전부인데, 적발 가능성이 낮은 불법 행위는 피해자만 엉영 없고 불법 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면서도(배상금이 크면 금전적 피해가 크니 억제력이 높겠죠)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충실히 해줄 수 있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 것이겠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감행하기 쉬운 상황일수록 이를 억제하는 데에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 효과적이다.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행정 기관으로부터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어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 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과징금을 올려도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되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제도이면서도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 안에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된다는 점 때문에 중복 제재의 발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엇갈리며,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의 반대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횡재라고 본다. 또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형사적 제재 수단인 벌금과 함께 부과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가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피해자들이 소송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본다. 따라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도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더라도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8.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징금은 불법 행위를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수단에 해당된다.
→ (O) 과징금은 행정적 수단이 맞습니다.
- ② 기업이 담합해 제품 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 (O) 담합해서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말은 그 행위가 불법 행위라는 말이겠네요.
- ③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손해 배상으로 구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 (O) 손해 배상은 민사적 수단으로,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구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줌.

- ④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 (O) 세 가지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 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과징금보다 벌금으로 제재하는 사례가 많다.
→ (X) 벌금으로 제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네요. 기업이 형사 고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뜻이겠지요. 대부분 과징금으로 제재한다고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감행하기 쉬운 상황일수록 이를 억제하는 데에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 효과적이다.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행정 기관으로부터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어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 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과징금을 올려도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되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제도이면서도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 안에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된다**는 점 때문에 중복 제재의 발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엇갈리며,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의 반대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회재**라고 본다. 또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형사적 제재 수단인 벌금과 함께 부과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가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피해자들이 소송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본다. 따라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도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더라도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9. 문맥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구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 (O) ‘과징금을 올려도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의 근거가 되는 내용은 벌금이나 과징금은 피해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도움’이란 금전적인 도움, 구제를 말하는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일것네요.

② ㉡은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을 가리킨다.

→ (O)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네요.

③ ㉢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가리킨다.

→ (O) 논의되고 있는 제도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밖에 없어서 너무나 쉽게 확정되네요.

④ ㉣은 행정적 제재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말한다.

→ (X) ‘벌금’은 형사적 수단이지요. 행정적 제재 수단은 과징금입니다.

⑤ ㉤은 배상금 전체에서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 (O)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서 배상금 전체 금액은 다 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배상금 = 피해자 손해액 + 가해자 징벌 성격의 배상금
따라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은 전체 배상금에서 손해액을 뺀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미되다

「1」 음식에 양념이나 식료품이 더 들어가 맛이 나게 되다.

「2」 본래의 것에 다른 요소가 보태어지다.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감행하기 쉬운 상황일수록 이를 억제하는 데에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 효과적이다.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행정 기관으로부터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어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 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과징금을 올려도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되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제도이면서도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 안에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된다는 점 때문에 중복 제재의 발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엇갈리며,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의 반대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횡재라고 본다. 또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형사적 제재 수단인 벌금과 함께 부과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가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피해자들이 소송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본다. 따라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도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더라도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우리나라의 법률 중에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가진 규정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자기의 기술자료를 유용당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손해의 3배까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①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받게 되는 배상금은 국가에 귀속되겠군.
- (X) '이 규정'은 어떤 규정을 말하는 걸까요? 문제를 읽어 봅시다.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보기>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선지에서 말하는 '이 규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는 '손해의 3배까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이니 국가에 귀속된다는 선지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겠네요.
- ② 이 규정의 시행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억제되는 효과가 생기겠군.
- (O) 이 규정이 시행되면, 적발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함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유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징벌적 배상으로 손해의 세 배까지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기술유용이 의심될 경우 하도급업체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 ③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의 3배를 배상받을 경우에는 배상금에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되겠군.
- (O) 그렇습니다. 손해액 이외의 금액은 벌금과 유사한, 즉 징벌적 성격의 배상금입니다.
- ④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를 이용할 때보다 이 규정을 이용할 때에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의 최대한도가 더 커지겠군.
- (O)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이용하면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 ⑤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때,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은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해당되겠군.
- (O) 이 글에서 밝히기를,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손해배상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라고 했습니다. 하도급거래, 즉 하청업체가 기술자료를 유용당하는 경우 적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보기>의 법이 만들어졌겠죠.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한다.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사실 사회 분화와 개체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래로 지속된 현상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벡과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하여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먼저 벡은 과학 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이라고 본다. 벡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이를 ㉠방치(放置)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벡의 관점이다. 그런데 벡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連帶)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벡은 그들이 과학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그 파괴적 결과까지 인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표출(表出)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다. 현대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체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은 유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벡과 달랐다. 바우만은 우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특권 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빈부 격차에 따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등 잉여 인간으로 ㉥전락(轉落)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더 치명적으로 본 것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는 위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은 극복 의지도 없고 공포로부터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 방어 행동에 ㉦몰두(沒頭)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만은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 행위도 개체화의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1.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개체화 현상의 다양한 양상들을 하나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 (X) 개체화 현상의 다양한 양상은 글에 나타나 있죠. 자본과 노동의 이동, 계급적 연대를 잃고 분절화된 노동자들, 가족의 해체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하나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② 개체화 현상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며 그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 (X) 이 글에서는 무언가를 비판하거나 새롭게 규정한 적이 없죠.

*통념: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

③ 개체화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 (O) 개체화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견해, 즉 벡과 바우만의 견해겠네요. 두 학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바로 이 글의 전부입니다.

④ 개체화 현상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의 한계와 의의를 평가하였다.

→ (X) 역사적 기원 같은 건 안 나왔죠. 그에 대한 가설도 없었고요.

⑤ 개체화 현상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사회적 개념들을 비교하였다.

→ (X) 개체화 현상에 대한 정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회적 개념들은 언급된 것이 없죠.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한다.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사실 사회 분화와 개체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래로 지속된 현상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벡과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하여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먼저 벡은 과학 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이라고 본다. 벡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이를 **③방치(放置)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 사회를 **①‘위험 사회’라고** 규정한다. 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벡의 관점이다. 그런데 벡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⑥연대(連帶)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벡은 그들이 과학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그 파괴적 결과까지 인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②표출(表出)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④‘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다. 현대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체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은 유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벡과 달랐다. **바우만은 우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특권 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빈부 격차에 따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등 잉여 인간으로 ④전락(轉落)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더 치명적으로 본 것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는 위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은 극복 의지도 없고 공포로부터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 방어 행동에 **⑤몰두(沒頭)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만은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 행위도 개체화의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2. **현대의 개체화 현상**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노동자들이 계급적 동질성을 갖지 못하게 한다.

→ (O)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 있죠? 이 문장은 노동자들이 예전과 달리 계급적 연대를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급적 동질성을 잃고 정규직, 비정규직 등 다양한 계급으로 분절화되었다는 뜻이죠.

② 국가의 통제력 강화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 약화를 초래한다.

→ (X) 국가의 통제력은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고 본문에 나타나네요. 개인의 자율성과 관련해서는 언급된 부분이 없습니다.

③ 개인의 거주 공간이 가족 공동의 거주 공간에서 분리되는 추세도 포함한다.

→ (O) 가족 해체 현상,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라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선사 시대부터 20세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거주 형태였어요. 대다수는 가족의 형태로 거주했거든요.

④ 벡의 관점에서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의 유대를 모색하게 하는 조건이다.

→ (O) 벡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급과 국가를 초월한 새로운 방식의 연대가 가능하리라고 봤습니다. 참고로 연대와 유대의 뜻 한번 읽고 가세요.

*연대: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유대: 끈과 띠라는 뜻으로, 둘 이상을 서로 연결하거나 결합하게 하는 것. 또는 그런 관계.

⑤ 바우만의 관점에서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서로 연대하기 어렵게 하는 위험 요인이다.

→ (O) 바우만은 현대인이 개체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은 서로 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러니 서로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흐르겠네요.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한다.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사실 사회 분화와 개체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래로 지속된 현상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벡과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하여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먼저 벡은 과학 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이라고 본다. 벡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이를 ㉠방치(放置)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벡의 관점**이다. 그런데 벡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連帶)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벡은 그들이 과학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그 파괴적 결과까지 인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표출(表出)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다. **현대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체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은 유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벡과 달랐다.** 바우만은 우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특권 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빈부 격차에 따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등 잉여 인간으로 **㉥전락(轉落)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더 치명적으로 본 것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는 위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은 극복 의지도 없고 공포로부터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 방어 행동에 **㉦몰두(沒頭)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만은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 행위도 개체화의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3.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위험 요소의 성격이 과거와 달라진 현대 사회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개념이다.

→ (O) 본문에 ‘과거와 달리’라고 명확히 언급되어 있죠.

② ㉡은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물체의 속성에서 유추하여 사회에 적용한 개념이다.

→ (O) 액체의 속성에서 유추하여 현대 사회에 적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엄격하게 따지면 좀 틀린 문장 같기도 한데... 그냥 “물체의 속성에 빗대어 표현한 개념이다.” 정도로 서술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유추하다: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다.

③ ㉠과 ㉡은 모두 인간관계의 유연한 확장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는 개념이다.

→ (X) 인간관계의 유연한 확장 가능성에 대해 ㉠은 낙관적으로 보는 개념이고, ㉡은 비관적으로 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④ ㉠과 ㉡은 모두 재난의 현실화 가능성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 (O) 벡은 핵무기,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우만도 핵 확산, 환경 재앙 등이 항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있죠. 지금 이 해설을 쓰는 순간에도 파키스탄에서는 대홍수가, 유럽에서는 50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⑤ ㉠과 ㉡은 모두 위험의 공간적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어 있음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 (O) “전 지구적 위험”이라는 어휘가 동일하게 쓰였네요.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한다.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사실 사회 분화와 개체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래로 지속된 현상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벡과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해서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먼저 벡은 과학 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이라고 본다. 벡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이를 **㉠방치(放置)**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벡의 관점이다. 그런데 벡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連帶)**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벡은 그들이 과학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그 파괴적 결과까지 인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표출(表出)**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다. 현대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체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은 유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벡과 달랐다. 바우만은 우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특권 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빈부 격차에 따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등 **잉여 인간**으로 **㉥전락(轉落)**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더 치명적으로 본 것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는 위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은 극복 의지도 없고 공포로부터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 방어 행동에 **㉦몰두(沒頭)**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만은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 행위도 개체화의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쫓아내거나 몰아냄.

→ (X) 방치: 내버려 둠.

방치와 비슷한 말로 방관, 좌시 등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방관: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함.

*좌시: 참견하지 아니하고 앉아서 보기만 함.

② ㉡ :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 (O)

③ ㉢ : 곁으로 나타냄.

→ (O)

④ ㉣ :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짐.

→ (O)

⑤ ㉤ :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함.

→ (O)

※ 이 외에도 이번 글에서 알아두면 좋을 단어

현저하다: 뚜렷이 드러나 있다.

계급적: 『사회 일반』 일정한 사회에서 신분, 재산, 직업 따위가 비슷한 사람의 집단이나 그 사회적 지위에 관한.

추세: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

인식: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사뭇: 아주 단판으로.

체계적: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를 이루는 것.

규정하다: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하다.

가변적: 바꿀 수 있거나 바뀔 수 있는 것.

잉여 인간: 남아도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 쓸모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내면화되다: 정신적·심리적으로 깊이 마음속에 자리 잡히다.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으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들 수 있다. 경쟁 정책은 본래 독점이나 담합 등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국가가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경쟁 정책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효한 정책으로 인정된다. 경쟁 정책이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는 모습은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생산적 효율은 주어진 자원으로 낭비 없이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것으로서, 같은 비용이면 더 많이 생산할수록, 같은 생산량이면 비용이 적을수록 생산적 효율이 높아진다. 시장이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같은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창출된 이익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그리하여 경쟁 정책이 유발한 생산적 효율은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물론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는 독점 기업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꼭 이것이 가격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배분적 효율은 사람들의 만족이 더 커지도록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이 독점 상태에 놓이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가격을 올림으로써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에 경쟁이 활발해지면 생산량 증가와 가격 인하가 수반되어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지는 배분적 효율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쟁 정책이 시장의 경쟁을 통하여 유발한 배분적 효율도 소비자의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경쟁 정책은 이처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이것만으로 소비자 권익이 충분히 실현되지는 않는다. 시장을 아무리 경쟁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체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경쟁 정책이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경쟁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의 제품은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 정책 자체를 포기하면 전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국가는 경쟁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교섭력이 약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적으며, 중동구매나 유해 상품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 공개나 유해상품 회수 등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경쟁 정책에서 직접 다루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되었고, 이 요구에 따라 수립된 것이 소비자 정책이다. 소비자 정책은

주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의 마련, 상품 정보 공개의 의무화 등의 조치와 같이 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중동구매나 유해 상품 구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직접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도 경쟁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22.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비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 (X) 소비자 개념은 정의된 바 없으며 유형도 제시된 바 없죠.
- ② 소비자 정책의 문제점을 사례 제시를 통해 부각하고 있다.
 - (X) 소비자 정책의 문제점은 제시된 바 없습니다.
- ③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유사한 사례에 빗대어 기술하고 있다.
 - (X)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가 비유된 바 없습니다.
- ④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한 두 정책에 대해 소개하면서 각각의 기능을 밝히고 있다.
 - (O)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한 두 정책은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입니다. 각 정책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경쟁 정책: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을 유발하여 소비자 권익에 기여한다.
 2. 소비자 정책: 경쟁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여 소비자 권익을 충분히 실현시킨다.
- ⑤ 시장의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을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 (X) 역사적, 통시적 고찰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으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들 수 있다. 경쟁 정책은 본래 독점이나 담합 등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국가가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경쟁 정책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효한 정책으로 인정된다. 경쟁 정책이 소비자 권익에 **④기여하는** 모습은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생산적 효율은 주어진 자원으로 낭비 없이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것으로서, 같은 비용이면 더 많이 생산할수록, 같은 생산량이면 비용이 적을수록 생산적 효율이 높아진다.** 시장이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같은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창출된 **①역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⑥인하**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그리하여 경쟁 정책이 유발한 생산적 효율은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물론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는 독점 기업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꼭 이것이 가격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배분적 효율은 사람들의 만족이 더 커지도록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이 독점 상태에 놓이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가격을 올림으로써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에 경쟁이 활발해지면 생산량 증가와 가격 인하가 수반되어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지는 배분적 효율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쟁 정책이 시장의 경쟁을 통하여 유발한 배분적 효율도 소비자의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경쟁 정책은 이처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이것만으로 소비자 권익이 충분히 실현되지는 않는다. 시장을 아무리 경쟁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①남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체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경쟁 정책이 소비자 이익을 **③증진**하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경쟁 때문에 시장에서 **⑥퇴출**된 기업의 제품은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 정책 자체를 포기하면 전체 소비자에게 **③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국가는 경쟁 정책을 **⑤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교섭력이 약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적으며, 중동구매나 유해 상품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 공개나 유해상품 회수 등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경쟁 정책에서 직접 다루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되었고, 이 **⑤요구**에 따라 수립된 것이 소비자 정책이다. 소비자 정책은

주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의 마련, 상품 정보 공개의 의무화 등의 **②조치**와 같이 **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중동구매나 유해 상품 구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직접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도 경쟁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23.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점에 대한 규제는 배분적 효율에 기여할 수 있다.
 - (O) 독점은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에 대한 규제는 배분적 비효율을 해소하여 배분적 효율이 향상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 ② 시장이 경쟁적이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O) 완전히 경쟁적인 시장일지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 ③ 생산적 효율을 달성한 독점 기업은 경쟁 정책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 (X) 비용 절감의 측면, 즉 생산적 효율의 측면에서는 독점 기업이 더 높은 효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적 효율이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더 싸게 만들어도 판매가격을 인하할 이유가 없죠. 기업은 봉사단체가 아니잖아요.) 독점을 규제해야 한다고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 ④ 기업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는 소비자 권익에 도움이 된다.
 - (O) 경쟁 정책만으로는 소비자 권익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소비자 정책을 집행하고 있죠. 기업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의 마련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이 있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합니다.
- ⑤ 소비자의 지위가 기업과 대등하지 못하다는 점은 소비자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 (O) 소비자는 기업과 대등하지 못합니다. 기업은 자사 상품에 대한 정보를 99.9%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이를 모두 공개하지는 않죠. 심지어 인체에 매우 유해한 성분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숨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오직 기업이 제공한 정보만 얻을 수 있죠. 또 기업은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일개 소비자와의 분쟁에 있어서도 압도적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으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들 수 있다. 경쟁 정책은 본래 독점이나 담합 등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국가가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경쟁 정책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효한 정책으로 인정된다. 경쟁 정책이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는 모습은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생산적 효율은 주어진 자원으로 낭비 없이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것으로서, 같은 비용이면 더 많이 생산할수록, 같은 생산량이면 비용이 적을수록 생산적 효율이 높아진다. 시장이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같은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창출된 이익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그리하여 경쟁 정책이 유발한 생산적 효율은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물론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는 독점 기업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꼭 이것이 가격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배분적 효율은 사람들의 만족이 더 커지도록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이 독점 상태에 놓이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가격을 올림으로써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에 경쟁이 활발해지면 생산량 증가와 가격 인하가 수반되어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지는 배분적 효율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쟁 정책이 시장의 경쟁을 통하여 유발한 배분적 효율도 소비자의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경쟁 정책은 이처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이것만으로 소비자 권익이 충분히 실현되지는 않는다. 시장을 아무리 경쟁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체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경쟁 정책이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경쟁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의 제품은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 정책 자체를 포기하면 전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국가는 경쟁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교섭력이 약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적으며,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 공개나 유해상품 회수 등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경쟁 정책에서 직접 다루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되었고, 이 요구에 따라 수립된 것이 소비자 정책이다. 소비자 정책은

주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의 마련, 상품 정보 공개의 의무화 등의 조치와 같이 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 구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직접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도 경쟁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2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생산적 효율을 통해 절감된 만큼의 비용에서 발생한다.
 - (O) 기업이 생존을 위해 생산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창출되는 '여력'이라고 했으니 기존에 투입되던 비용에서 절감된 만큼을 뜻하겠네요. 그러니 그만큼 품질을 향상시키거나(같은 값에 더 좋은 제품) 가격을 인하할(더 싼 값에 같은 제품) 수 있게 되겠죠.
- ② ㉡에는 유해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경쟁 정책이 직접 해결해 주기 어렵다는 문제가 포함된다.
 - (O) 경쟁 정책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장에서 각 기업들이 아무리 치열하게 경쟁하더라도 유해 상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일을 막을 수는 없겠죠. 경쟁 환경이 기업의 도덕성을 높여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이를 수습해주시도 않을 겁니다.
- ③ ㉢은 시장에서 경쟁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서 전체 소비자의 기준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 (O) 경쟁 정책 자체가 철회되면 독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담합 행위가 발생할 수 있죠. 둘 모두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④ ㉣은 경쟁 정책 이외에 소비자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이다.
 - (O) 경쟁 정책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라고 볼 수 있겠네요.
- ⑤ ㉤은 경쟁 정책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다.
 - (X) 소비자 정책에서 취하는 수단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으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들 수 있다. 경쟁 정책은 본래 독점이나 담합 등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국가가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경쟁 정책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효한 정책으로 인정된다. 경쟁 정책이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는 모습은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생산적 효율은 주어진 자원으로 낭비 없이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것으로서, 같은 비용이면 더 많이 생산할수록, 같은 생산량이면 비용이 적을수록 생산적 효율이 높아진다. 시장이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같은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창출된 이익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그리하여 경쟁 정책이 유발한 생산적 효율은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물론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는 독점 기업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꼭 이것이 가격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않는다. 따라서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배분적 효율은 사람들의 만족이 더 커지도록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이 독점 상태에 놓이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가격을 올림으로써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에 경쟁이 활발해지면 생산량 증가와 가격 인하가 수반되어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지는 배분적 효율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쟁 정책이 시장의 경쟁을 통하여 유발한 배분적 효율도 소비자의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경쟁 정책은 이처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이것만으로 소비자 권익이 충분히 실현되지는 않는다. 시장을 아무리 경쟁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체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경쟁 정책이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경쟁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의 제품은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 정책 자체를 포기하면 전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국가는 경쟁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교섭력이 약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적으며,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 공개나 유해상품 회수 등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경쟁 정책에서 직접 다루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되었고, 이 요구에 따라 수립된 것이 소비자 정책이다. 소비자 정책은

주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의 마련, 상품 정보 공개의 의무화 등의 조치와 같이 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 구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직접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도 경쟁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25. <보기>의 사례들 중 소비자 정책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정부는 모든 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하였다.
- 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판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자 정부는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 ㄷ. 온라인 게임 업체와 회원 간의 분쟁이 늘어나자 관계당국은 산하 기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ㄹ.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동시에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자 관계 당국이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은 모두 소비자 정책에 대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ㄷ의 경우 관계당국(정부)이 산하 기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사례인데, 이렇게 국가 기관에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⑤ ㄴ, ㄷ, ㄹ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으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들 수 있다. 경쟁 정책은 본래 독점이나 담합 등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국가가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경쟁 정책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효한 정책으로 인정된다. 경쟁 정책이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는 모습은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생산적 효율은 주어진 자원으로 낭비 없이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것으로서, 같은 비용이면 더 많이 생산할수록, 같은 생산량이면 비용이 적을수록 생산적 효율이 높아진다. 시장이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같은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창출된 여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그리하여 경쟁 정책이 유발한 생산적 효율은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물론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는 독점 기업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꼭 이것이 가격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않는다. 따라서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배분적 효율은 사람들의 만족이 더 커지도록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이 독점 상태에 놓이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가격을 올림으로써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에 경쟁이 활발해지면 생산량 증가와 가격 인하가 수반되어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지는 배분적 효율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쟁 정책이 시장의 경쟁을 통하여 유발한 배분적 효율도 소비자의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경쟁 정책은 이처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이것만으로 소비자 권익이 충분히 실현되지는 않는다. 시장을 아무리 경쟁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낡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체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경쟁 정책이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경쟁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의 제품은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 정책 자체를 포기하면 전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국가는 경쟁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교섭력이 약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적으며,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 공개나 유해상품 회수 등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경쟁 정책에서 직접 다루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되었고, 이 요구에 따라 수립된 것이 소비자 정책이다. 소비자 정책은

주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의 마련, 상품 정보 공개의 의무화 등의 조치와 같이 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 구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직접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도 경쟁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2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이바지하는

→ (O) 기여하다: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다.

② ㉡ : 내리는

→ (O) 인하하다: 가격 따위를 낮추다.

③ ㉢ : 늘리더라도

→ (O) 증진하다: 기운이나 세력 따위를 점점 더 늘려 가고 나아가게 하다.

④ ㉣ : 밀려난

→ (O) 퇴출되다: (조직체나 조직원 따위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이유로 물러나게 되다.

⑤ ㉤ : 세울

→ (X) 유지하다: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하다.

※ 이 외에도 이번 글에서 알아두면 좋을 단어

권익: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

집행하다: 실제로 시행하다.

담합: 사업자가 협약, 협정, 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서로 짜고 물건의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

여력: 어떤 일에 주력하고 아직 남아 있는 힘.

영리: 재산상의 이익을 꾀함. 또는 그 이익.

수반되다: 어떤 일과 더불어 생기기다.

사후: 일이 끝난 뒤. 또는 일을 끝낸 뒤. (여기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뒤)

교섭력: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와 의논하고 절충하는 힘.

충동구매: 물건 따위를 살 필요나 의사가 없이, 물건 따위를 구경하거나 광고를 보다가 갑자기 사고 싶어져 사는 행위.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삶은 더욱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더욱 바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할 것인가?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을 대비하여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런 물음의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초로 인간의 삶을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으로 구분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진리, 즐거움, 고귀함을 추구하는 사색적 삶의 영역이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근대 이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아 왔다.

근대에 접어들어 과학 혁명과 청교도 윤리의 등장으로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16, 17세기 과학 혁명으로 실험 정신과 경험적 지식이 중시되면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한 과학적 탐구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한 기술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또한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이해하고, 근면과 검약에 의한 개인의 성공을 구원의 징표로 본 청교도 윤리는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이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18, 19세기 산업 혁명을 계기로 활동적 삶은 사색적 삶보다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생산 기술에 과학적 지식이 응용되고 기계의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규율이 확립되었고, 인간의 삶은 시간적 규칙성을 따르도록 재조직되었다. 나아가 시간이 관리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작업 동선(動線)을 모색했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20세기 초부터 생산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았다. 이로써 두뇌에 의한 노동과 근육에 의한 노동이 분리되어 인간의 육체노동이 기계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과학을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어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과 산업체 연구소들이 출현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했던 진리 탐구마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하는 생산 활동의 논리에 포섭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처럼 산업 혁명 이후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그에 힘입어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를 전면적으로 지배하게 됨에 따라 근면과 속도가 강조되었다. 활동적 삶이 지나치게 강조된 데 대한 반작용으로, ‘의미 없는 부지런함’이 만연해진 세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나 성찰에 의한 사색적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이제 20세기 말 정보화와 세계화를 계기로 시간적-공간적 거리가 압축되어 세계가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인간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의식주 등 생활의 기본 욕구는 충족되었지만, 현대인들은 더욱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하고 있다. 경쟁이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사람들이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세울 수밖에 없는 내면화된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사색적 삶은 설 자리를 잃고 활동적인 삶이 폭주하게 된 것이다.

21.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존을 위한 필요에서 비롯된 생산 활동이 사색적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 (X) 사색적 삶이 활동적 삶의 영역(생산 활동)보다 더 상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위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이 겠죠.
- ② 과학 혁명의 시대에는 활동적 삶의 위상이 사색적 삶의 위상보다 높았다.
 - (X)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근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 속에서 사색적 삶의 위상은 활동적 삶보다 더 우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근대에 이르러 과학 혁명과 함께 두 삶의 위상이 대등해졌다고 나오네요. 활동적 삶의 위상이 아직 사색적 삶의 위상보다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③ 청교도 윤리는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켰다.
 - (X) 청교도 윤리는 근면 검약과 직업 활동을 통한 부의 축적, 즉 개인의 경제적 성공을 구원의 징표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윤리관이 널리 퍼진다면,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과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그런 인식이 심화된다고 추론할 수는 없겠습니다.
- ④ 시간-동작 연구는 인간의 노동이 두뇌노동과 근육노동으로 분리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 (O) 시간-동작 연구는 노동자의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모색하는 연구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동자의 ‘동선’을 노동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두지 않고, 시간 단위로 잘게 쪼개어 효율이 높아지도록 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통제받는 노동자의 경우, 명령에 따라 근육을 사용하는 생체 기계에 가까워지겠죠. 이는 순수한 육체노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과학적 관리론이 적용되기 전의 노동 현상은 이러한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추론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노동자가 일련의 복잡한 공정을 통해 완성품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스스로 관찰하고 판단하는 두뇌노동과 깔고 두드리는 육체노동이 구분되지 않는 융합된 형태였을 것입니다.
- ⑤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은 기술을 과학에 활용하기 위해 출현했다.
 - (X) 기술을 과학에 활용하기 위해 실용 학문이 출현한 것이 아니죠. 과학을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실용 학문과 산업체 소속 연구소들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앞뒤가 바뀐 설명이네요. 선지 구성에 자주 활용되는 방법이니 유의하세요.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삶은 더욱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더욱 바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할 것인가?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을 대비하여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런 물음의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초로 인간의 삶을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으로 구분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진리, 즐거움, 고귀함을 ㉔추구하는 사색적 삶의 영역이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근대 이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아 왔다.

근대에 접어들어 과학 혁명과 청교도 윤리의 등장으로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16, 17세기 과학 혁명으로 실험 정신과 경험적 지식이 중시되면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한 과학적 탐구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한 기술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또한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이해하고, 근면과 ㉕겸약에 의한 개인의 성공을 구원의 징표로 본 청교도 윤리는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이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18, 19세기 산업 혁명을 계기로 활동적 삶은 사색적 삶보다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생산 기술에 과학적 지식이 ㉖응용되고 기계의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규율이 확립되었고, 인간의 삶은 시간적 규칙성을 따르도록 재조직되었다. 나아가 시간이 관리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작업 동선(動線)을 ㉗모색했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20세기 초부터 생산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았다. 이로써 두뇌에 의한 노동과 근육에 의한 노동이 분리되어 인간의 육체노동이 기계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과학을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어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과 산업체 연구소들이 출현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했던 진리 탐구마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하는 생산 활동의 논리에 ㉘포섭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처럼 산업 혁명 이후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그에 힘입어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를 전면적으로 지배하게 됨에 따라 근면과 속도가 강조되었다. 활동적 삶이 지나치게 강조된 데 대한 반작용으로, ‘의미 없는 부지런함’이 만연해진 세태에 대한 ㉙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나 성찰에 의한 사색적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이제 20세기 말 정보화와 세계화를 계기로 시간적-공간적 거리가 압축되어 세계가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인간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의식주 등 생활의 기본 욕구는 충족되었지만, 현대인들은 더욱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하고 있다. 경쟁이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사람들이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세울 수밖에 없는 내면화된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사색적 삶은 설 자리를 잃고 활동적인 삶이 폭주하게 된 것이다.

22. ㉙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 ㉑ 기계 기술은 정신 기술처럼 가치 있으며, 산업 현장은 그 자체로 위대하고 만족스럽다.
 - (X) 기술과 산업 현장이 그 자체로 위대하고 만족스럽다는 말은, 그것 이외에 굳이 ‘성찰’이나 ‘사색’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㉒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며,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면 괴로움과 질곡에 빠지고 말 것이다.
 - (X) 인간의 존재 목적이 ‘일’, 즉 생산과 노동이라고 단정하는데, 사색이나 성찰이 설 자리는 없겠군요.
- ㉓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여유롭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유의 방법을 배워야 한다.
 - (O) ㉙은 ‘의미 없는 부지런함’, 즉 무의미한 파닥거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여유로운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겠죠. 또 성찰에 의한 사색적 삶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고 합니다. 이는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유의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선지의 주장과 상통합니다.
- ㉔ 나태는 녹이 스는 것처럼 사람을 쇠퇴하게 만들며 쇠퇴의 속도는 노동함으로써 지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 (X) 나태하면 안 된다는 말이네요. 더 빨리,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라는 말이니 활동적 삶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 ㉕ 인간은 기계이므로 인간의 행동, 언어, 사고, 감정, 습관, 신념 등은 모두 외적인 자극과 영향으로부터 생겨났다.
 - (X) 인간이 기계라면, 굳이 사색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계답게 외부 조건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데요. 이 선지도 ㉙과는 관련이 없겠네요.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삶은 더욱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더욱 바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할 것인가?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을 대비하여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런 물음의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초로 인간의 삶을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으로 구분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진리, 즐거움, 고귀함을 추구하는 사색적 삶의 영역이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근대 이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아 왔다.

근대에 접어들어 과학 혁명과 청교도 윤리의 등장으로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16, 17세기 과학 혁명으로 실험 정신과 경험적 지식이 중시되면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한 과학적 탐구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한 기술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또한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이해하고, 근면과 검약에 의한 개인의 성공을 구원의 징표로 본 청교도 윤리는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이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18, 19세기 산업 혁명을 계기로 활동적 삶은 사색적 삶보다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생산 기술에 과학적 지식이 응용되고 기계의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규율이 확립되었고, 인간의 삶은 시간적 규칙성을 따르도록 재조직되었다. 나아가 시간이 관리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작업 동선(動線)을 모색했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20세기 초부터 생산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았다. 이로써 두뇌에 의한 노동과 근육에 의한 노동이 분리되어 인간의 육체노동이 기계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과학을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어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과 산업체 연구소들이 출현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했던 진리 탐구마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하는 생산 활동의 논리에 포섭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처럼 산업 혁명 이후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그에 힘입어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를 전면적으로 지배하게 됨에 따라 근면과 속도가 강조되었다. 활동적 삶이 지나치게 강조된 데 대한 반작용으로, ‘의미 없는 부지런함’이 만연해진 세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나 성찰에 의한 사색적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이제 20세기 말 정보화와 세계화를 계기로 시간적-공간적 거리가 압축되어 세계가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인간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의식주 등 생활의 기본 욕구는 충족되었지만, 현대인들은 더욱 다양한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하고 있다. 경쟁이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사람들이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세울 수밖에 없는 내면화된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사색적 삶은 설 자리를 잃고 활동적인 삶이 폭주하게 된 것이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20세기 후반 이후의 ‘후근대 사회’를 ‘피로 사회’로 규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근대 사회가 ‘규율 사회’였음에 비해 후근대 사회는 ‘성과 사회’이다. 규율 사회가 외적 강제에 따라 인간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회라면, 성과 사회는 성공을 향한 내적 유혹에 따라 인간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이다.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결핍이 해소되고 규율 사회의 강제가 약화된다고 해서 인간이 삶의 온전한 주체가 되는 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생산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가 규율 사회에서 외적 강제에 의한 타자 착취를 통해 관철되었다면, 성과 사회에서 그 요구는 내적 유혹에 의한 자기착취를 통해 관철된다. 그 결과 피로는 현대인의 만성 질환이 되었다는 것이다.

- ① 근대 사회에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확립된 노동 규율은 타자 착취를 위한 규율 사회의 외적 강제로 볼 수 있겠군.
- (O) 규율은 어쨌든 강제적 성격을 가집니다. 기계의 속도에 기초한 근대의 노동규율은 타자의 노동 방식과 속도를 강제하고, 이는 곧 타자의 착취로 이어집니다.
- ②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현대인의 강박증은 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기 착취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겠군.
- (O) 더 좋은 성과를 내려는 내적 유혹은 자신의 능력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강박증으로 이어질 것임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 ③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세계가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이 되면서 성과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가 달라지는군.
- (X)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는 불변입니다.
- ④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삶이 더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견해는 현대 사회를 피로 사회로 포착하는 견해에 반하는 것이군.
- (O) <보기>의 견해는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온전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소외된다는 뜻입니다.
- ⑤ 다양한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을 소진하는 현대인의 행동은 성공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내적 유혹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O) 성공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내적 유혹은 성취 욕망을 불러 일으키고 결국 자신을 소진하게 됩니다.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삶은 더욱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더욱 바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할 것인가?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을 대비하여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런 물음의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초로 인간의 삶을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으로 구분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진리, 즐거움, 고귀함을 추구하는 사색적 삶의 영역이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근대 이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아 왔다.

근대에 접어들어 과학 혁명과 청교도 윤리의 등장으로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16, 17세기 과학 혁명으로 실험 정신과 경험적 지식이 중시되면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한 과학적 탐구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한 기술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또한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이해하고, 근면과 검약에 의한 개인의 성공을 구원의 징표로 본 청교도 윤리는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이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18, 19세기 산업 혁명을 계기로 활동적 삶은 사색적 삶보다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생산 기술에 과학적 지식이 응용되고 기계의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규율이 확립되었고, 인간의 삶은 시간적 규칙성을 따르도록 재조직되었다. 나아가 시간이 관리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작업 동선(動線)을 모색했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20세기 초부터 생산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았다. 이로써 두뇌에 의한 노동과 근육에 의한 노동이 분리되어 인간의 육체노동이 기계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과학을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어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과 산업체 연구소들이 출현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했던 진리 탐구마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하는 생산 활동의 논리에 포섭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처럼 산업 혁명 이후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그에 힘입어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를 전면적으로 지배하게 됨에 따라 근면과 속도가 강조되었다. 활동적 삶이 지나치게 강조된 데 대한 반작용으로, ‘의미 없는 부지런함’이 만연해진 세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나 성찰에 의한 사색적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이제 20세기 말 정보화와 세계화를 계기로 시간적-공간적 거리가 압축되어 세계가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인간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의식주 등 생활의 기본 욕구는 충족되었지만, 현대인들은 더욱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하고 있다. 경쟁이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사람들이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세울 수밖에 없는 내면화된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사색적 삶은 설 자리를 잃고 활동적인 삶이 폭주하게 된 것이다.

2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함.
→ (O)
- ② ㉡: 돈이나 물건, 자원 따위를 낭비하지 않고 아껴 씀.
→ (O)
- ③ ㉢: 어떤 이론이나 지식을 다른 분야의 일에 적용하여 이용함.
→ (O)
- ④ ㉣: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
→ (O)
- ⑤ ㉤: 어떤 대상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
→ (X) 포섭: 상대방을 자기편으로 감싸 끌어들이м.
참고로 선지의 뜻풀이는 ‘포용’의 뜻풀이에 가깝습니다.
포용: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

- ※ 이 외에도 이번 글에서 알아두면 좋을 단어
- 사색: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짐.
- 생계: 살림을 살아 나갈 방도.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
- 인식: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 과학 혁명: 17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자연 과학 분야의 획기적 변혁.
- 청교도: 16세기 후반, 영국 국교회에 반항하여 생긴 개신교의 한 교파. 칼뱅주의를 바탕으로 모든 쾌락을 죄악시하고 사치와 성직자의 권위를 배격하였으며, 철저한 금욕주의를 주장하였다.
- 소명: 『기독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
- 징표: 어떤 것과 다른 것을 드러내 보이는 뚜렷한 점.
- 불식하다: 의심이나 부조리한 점 따위를 말끔히 털어 없애다.
- 위상: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
- 초래되다: 일의 결과로서 어떤 현상이 생겨나게 되다.
- 단적: 곧바르고 명백한 것.
- 메커니즘: 사물의 작용 원리나 구조.
- 비약적: 지위나 수준 따위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높아지거나 향상되는.
- 소진하다: 점점 줄어들어 다 없어지다. 또는 다 써서 없애다.
- 강박증: 불합리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생각을 떨치려고 할수록 더욱 초조해지는 정신 이상증.
- 폭주하다: 매우 빠른 속도로 난폭하게 달리다.

현대 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에서도 지식 경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식 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조직적인 학습과 혁신 능력, 즉 기업의 지적 역량에 있다고 보아 지식의 활용과 창조를 강조하는 경영 전략이다.

지식 경영론 중에는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폴라니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지각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적 지식도 지적 활동의 주체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다. 어떤 지각 활동이나 관찰, 추론 활동에도 우리의 몸이나 관찰 도구, 지적 수단이 항상 수반되고 그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요컨대 모든 지식에는 암묵적 요소들과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간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폴라니의 말은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노나카 이쿠지로는 지식에 대한 폴라니의 탐구를 실용적으로 응용하여 지식 경영론을 펼쳤다. 그는 폴라니의 '암묵지'를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으로 파악했다. 또한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노나카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변환 과정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것은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개인의 숙련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동화'라 한다. 암묵지에서 명시지로의 변환은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것으로서 '표출화'라 한다. 또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것은 '연결화'라 하고,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것은 '내면화'라 한다. 노나카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대로 지식 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식 공유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에게 체화된 무형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한 정보와 유용한 지식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이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1. 밑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식에 대한 두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 경영의 유용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
→ (X) '지식에 대한 두 견해의 장단점'이라고 하는 순간 틀린 선지가 되죠. 그런 건 없으니까요.
- ② 지식에 대한 견해의 변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비되는 지식 경영론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X) '지식에 대한 견해의 변화 과정'이라고 하는 순간 틀린 선지가 되죠. 그런 건 없으니까요.
- ③ 지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지식 경영론을 소개하고 지식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 (O) 이 글은 지식의 성질에 대해 학술적으로 접근한 개념인 '암묵지'를 기반으로 지식 경영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의 말미에는 지식 경영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도 설명하고 있네요.
- ④ 지식이 분리되어 가는 과정에 따른 지식 변환의 단계를 설명하고 지식 경영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 (X) '지식이 분리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순간 틀린 선지가 되죠. 그런 건 없으니까요.
- ⑤ 지식의 성격이 변화된 원인을 분석하고 지식 경영론의 등장 배경을 탐색하고 있다.
→ (X) '지식의 성격이 변화된 원인'이라고 하는 순간 틀린 선지가 되죠. 그런 건 없으니까요.

현대 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에서도 지식 경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식 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조직적인 학습과 혁신 능력, 즉 기업의 지적 역량이 있다고 보아 지식의 활용과 창조를 강조하는 경영 전략이다.

지식 경영론 중에는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폴라니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지각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적 지식도 지적 활동의 주체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다. 어떤 지각 활동이나 관찰, 추론 활동에도 우리의 몸이나 관찰 도구, 지적 수단이 항상 수반되고 그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요컨대 모든 지식에는 암묵적 요소들과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간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폴라니의 말은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노나카 이쿠지로는 지식에 대한 폴라니의 탐구를 실험적으로 응용하여 지식 경영론을 펼쳤다. 그는 폴라니의 ‘암묵지’를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으로 파악했다. 또한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노나카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변환 과정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것은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개인의 숙련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동화’라 한다. 암묵지에서 명시지로의 변환은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것으로서 ‘표출화’라 한다. 또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것은 ‘연결화’라 하고,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것은 ‘내면화’라 한다. 노나카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대로 지식 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식 공유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에게 체화된 무형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한 정보와 유용한 지식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이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2.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폴라니는 고도로 형식화된 과학 지식도 암묵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 (O) 본문에 따르면 과학적 지식도 지적 활동의 주체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 지식에도 암묵지가 전제되어 있다고 봐야 하겠죠. 그 말은 과학 지식도 암묵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 ② 폴라니는 지적 활동의 주체와 분리되어 독립된 객체로서 존재하는 지식은 없다고 본다.
 - (O) 본문에 있는 문장을 조금 다르게 썼을 뿐입니다. 평가원은 앞뒤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출제자의 입장에서도 가장 편한 선지 구성 방식입니다. 사실 완전히 100% 옳은 선지 만들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본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긁어 쓰면 매력력이 떨어지고, 다른 용어로 바꿔 쓰면 오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 ③ 노나카는 암묵지가 그 속성 때문에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명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
 - (X) 암묵지와 명시지가 서로 뒤바뀐 설명입니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명시지가 더 공유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④ 노나카의 지식 경영론은 지식이 원활하게 변환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가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 (O) 본문에서 노나카는 조직 구조가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조직 구조가 혁신되면 재설계는 필연적이겠네요. 조직 구조 혁신이랑 조직 구조 재설계랑 무슨 관계냐고요? 혁신의 뜻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 ⑤ 폴라니는 지식에서 암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나카는 지식들 간의 변환 과정에 주목한다.
 - (O) 암묵지 개념은 폴라니가 만든 겁니다. 노나카는 이 개념을 응용해서 지식 변환 과정을 유형화한 인물입니다. 옳은 설명이네요.

혁신: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

현대 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에서도 지식 경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식 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조직적인 학습과 혁신 능력, 즉 기업의 지적 역량이 있다고 보아 지식의 활용과 창조를 강조하는 경영 전략이다.

지식 경영론 중에는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폴라니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지각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적 지식도 지적 활동의 주체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유린된 것이 아니다. 어떤 지각 활동이나 관찰, 추론 활동에도 우리의 몸이나 관찰 도구, 지적 수단이 항상 수반되고 그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요컨대 모든 지식에는 암묵적 요소들과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간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폴라니의 말은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노나카 이쿠지로는 지식에 대한 폴라니의 탐구를 실용적으로 응용하여 지식 경영론을 펼쳤다. 그는 폴라니의 ‘암묵지’를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으로 파악했다. 또한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노나카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변환** 과정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것은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개인의 숙련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동화’라 한다.** 암묵지에서 명시지로의 변환은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것으로서 ‘표출화’라 한다.** 또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것은 **‘연결화’라 하고,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것은 ‘내면화’라 한다.** 노나카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대로 지식 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식 공유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에게 체화된 무형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한 정보와 유용한 지식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이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3. **지식 변환**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사의 직원이 자사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과 계속 접촉하여 소비자들의 느낌을 포착해 낸 것은 ‘연결화’의 사례이다.

→ (X) 공동화 사례입니다.

② B사가 자동차 부품 관련 특허 기술들을 부문별로 재분류하고 이를 결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한 것은 ‘표출화’의 사례이다.

→ (X) 특허 기술은 문서화된 지식이죠. 명시지입니다. 이것을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은 명시지를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것이니 연결화입니다.

③ C사의 직원이 경쟁 기업의 터치스크린 매뉴얼들을 보고 제품을 실제로 반복 사용하여 감각적 지식을 획득한 것은 ‘내면화’의 사례이다.

→ (O) 매뉴얼이 무엇일까요? 사용설명서입니다. 이는 명시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을 숙련 노력(반복 사용)을 통해 감각적 지식을 얻었다고 했으니 명시지가 암묵지로 전환되는 내면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④ D사가 교재로 항공기 조종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이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 조종술에 능숙하게 된 것은 ‘연결화’의 사례이다.

→ (X) 내면화 사례입니다.

⑤ E사의 직원이 성공적인 제품 디자인들에 동물 형상이 반영되었음을 감지하고 장수하늘소의 몸체가 연상되는 청소기 디자인을 완성한 것은 ‘공동화’의 사례이다.

→ (X) 공동화로 착각하게끔 유도하는 선지입니다. 물론, E사의 직원이 암묵지를 새로이 형성한 것은 맞습니다. 성공적인 제품 디자인들에 동물 형상이 반영되었음을 ‘감지했다’고 했으니 이는 암묵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는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타자의 암묵지가 E사 직원의 암묵지로 변환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중의 대다수 해설서는 E사의 직원이 암묵지를 형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청소기 디자인을 완성한 것’을 표출화로 해설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의 내용은 표출화가 아닙니다. ⑤번 선지는 노나카의 4가지 지식 변환 유형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E사 직원의 행동은 기존의 지식을 변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 새로운 암묵지를 발견하고 창출한 뒤, 이를 활용한 사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식 변환은 없습니다.

물론 ‘청소기 디자인’을 ‘명시지’로 보아 ‘표출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 완성된 청소기 디자인은 암묵지에서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장수하늘소 모양 청소기 디자인은 ‘명시지’가 아닙니다. 명시지는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처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입니다. 청소기 디자인에는 그러한 지식이 활용된 것일 뿐, 청소기 디자인이 그러한 내용을 담은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은 결코 아니죠.

현대 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에서도 지식 경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식 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조직적인 학습과 혁신 능력, 즉 기업의 지적 역량에 있다고 보아 지식의 활용과 창조를 강조하는 경영 전략이다.

지식 경영론 중에는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폴라니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지각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적 지식도 지적 활동의 주체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유린된 것이 아니다. 어떤 지각 활동이나 관찰, 추론 활동에도 우리의 몸이나 관찰 도구, 지적 수단이 항상 수반되고 그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요컨대 모든 지식에는 암묵적 요소들과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간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폴라니의 말은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노나카 이쿠지로는 지식에 대한 폴라니의 탐구를 실용적으로 응용하여 지식 경영론을 펼쳤다. 그는 폴라니의 ‘암묵지’를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으로 파악했다. 또한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노나카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변환** 과정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것은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개인의 숙련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동화’라 한다. 암묵지에서 명시지로의 변환은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것으로서 ‘표출화’라 한다. 또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것은 ‘연결화’라 하고,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것은 ‘내면화’라 한다. 노나카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대로 지식 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식 공유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에게 체화된 무형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한 정보와 유용한 지식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이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나타난 F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만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F사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지식의 산출을 독려하고 이를 체계적인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였다. 보고서와 제안서 등의 **가시적인 지식의 산출에 대해서는 보상했지만, 경험적 지식이나 창의적 아이디어 같은 무형의 지식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제도는 갖추지 않았다.** 그 결과, 유용성이 낮은 제안서가 양산되었고, 가시적인 지식을 산출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애착과 헌신은 감소했으며, **경험 많은 직원들이 퇴직할 때마다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

- ① 직원들 각자가 지닌 업무 경험과 기능을 존중하고 **유형의 노력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 문화와 동기 부여 시스템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O) 무형의 지식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없었으니, 이를 평가하기 위한 조직 문화 및 동기 부여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 ② 직원들의 체화된 무형의 지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헌신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O) F사에서는 무형의 지식을 갖춘 직원들에게도 보상을 해서 회사에 대한 애착과 헌신을 높일 필요가 있죠.
- ③ 숙련된 직원들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면대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집단적 업무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 (O) 숙련 직원들이 퇴직할 때마다 그들의 암묵지가 사라져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F사. 암묵지는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훈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니 적절한 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④ 직원들이 회사에서 **사용할 논리적이고 형식화된 지식을 제안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할 필요가 있다.**
 - (X) 이걸 F사도 이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⑤ **창의적 아이디어가 문서 형태로 표현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 제안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O) <보기>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는 ‘무형의 지식’의 하나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문서 형태로 표현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한 다양한 의견 제안 방식이 요구된다는 선지 내용은 적절합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사단은 법인(法人)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登記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 사원 개인에게까지 ㉢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를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 '법인격 부인

론'이 제기된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3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사단성을 갖춘 단체는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 ➔ (O) 사단이 갖춘 성질인 사단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
 2.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
 3. 운영 기구를 둬
 4.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
- ㉡ 주주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단의 사원에 해당한다.
 - ➔ (O)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식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고 한다 했지요. 그럼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원으로 볼 수 있겠네요.
- ㉢ 법인격을 얻은 사단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 (O) 법인으로登記된 사단은 사단 법인이라고 한답니다. 이러한 사단은 권리 능력, 즉 법인격을 취득하여 소유권, 채권, 채무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겠네요.
- ㉣ 사단 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 ➔ (O) 사단 법인이든 법인이 아닌 사단이든, 사단이라면 모두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합니다.
- ㉤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가 사단이다.
 - ➔ (X) 사단 중에서도 법인으로登記된 '사단 법인'만이 법인격 즉 권리 능력을 가집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은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일 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자격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즉, 이 선지는 '사단'을 '법인'으로 바꾸어야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사단은 법인(法人)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登記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빛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 사원 개인에게까지 ㉢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 '법인격 부인

론'이 제기된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36. 앞글에서 설명한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대표 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 (O) 법이 어려운 이유를 아시나요? 세상의 상식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는 뉴스를 통해 자주 만날 수 있어서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관'이 맞습니다.
- ㉡ 일인 주식회사는 대표 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다.
 - (X) 법인격은 회사, 즉 사단 법인인 주식회사가 갖는 것이고요, 대표 이사는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선출된 기관일 뿐입니다.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이구요.
- ㉢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한다.
 - (X) 주주 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합니다.
- ㉣ 주식회사에서는 주주 총회가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이다.
 - (X) 본문에서 주주 총회는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사들이 모인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이죠. 회사에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주주 총회를 열어 수 많은 주주들이 일일이 회의하고 의결하는 건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이사진을 구성해서 선임하고, 이사들이 모인 이사회가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 ㉤ 여러 주주들이 모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일인 주식회사로 바뀔 수 없다.
 - (X) 여러 주주들이 모여 설립된 주식회사라고 할지라도, 상속 등의 방식으로 일인 주식회사가 될 수 있네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사단은 법인(法人)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登記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법인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 사원 개인에게까지 ㉢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를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 ‘법인격 부인

론’이 제기된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37. ㉠~㉣의 문맥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법인에 속해 있지만 법인격과는 구별되는 존재
 - (O) 사원은 사단의 구성원이니 (사단) 법인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의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고 했으니 적절한 선지입니다.
- ② ㉡ : 사단이 진 빚을 갚아야 할 의무
 - (O) 사단 (법인)이 진 빚을 갚을 의무는 사원 개인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 ③ ㉢ : 여러 사람이 결합한 조직체로서의 성격
 - (O)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개정된 상법과 관련된 이슈를 말하는 중이니, 사단성 중 하나인 ‘사람들의 결합’과 관련된 성질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 ④ ㉣ : 회사라는 법인격을 가진 독자적인 실체로서 운영되지 않는 경영
 - (O)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 독자적 실체로서의 경영이 아닌 어떤 개인의 독단적 영업이란 뜻이겠죠. 개인 사업자(자영업자)의 장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런 구매 없이 내 뜻대로 경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재벌 총수라도 자신의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회라는 운영 기관의 의결이 필수적이죠.
- ⑤ ㉤ :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여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된 상태
 - (X) 회사의 ‘이익’이 대표 이사인 일인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했을 뿐, 자산이 감소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다는 뜻으로 쓴 것도 아니었죠. 여기서 ‘허울은 실속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쓰였다고 봐야겠습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사단은 법인(法人)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登記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 사원 개인에게까지 ㉢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 ‘법인격 부인

론’이 제기된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38.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회사의 경영이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다.
 - (X)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일인 주식회사와의 거래에서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죠. 회사의 경영이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는 것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두게 되어 있다고 본문에 나타납니다.
- ㉡ 법인격 부인론은 주식회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 (X) 이 글에서 법률 개정과 관련된 정보는 일인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졌다는 것뿐입니다. 법인격 부인론은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존재하던 권리 남용의 조항을 인용해 이를 받아들인다고 나타냅니다.
- ㉢ 회사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확정되면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을 받아들여 그 회사의 법인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 (X) 회사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법인격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죠. 1번 선지와 마찬가지로 조건을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격이 부인되더라도 영구히 박탈되는 것도 아니죠. 그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 ㉣ 법원이 대표 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대표 이사가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인격 부인론의 의의이다.
 - (X) 아닙니다. 오히려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대표 이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 ㉤ 특정한 거래 관계에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려는 목적은 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진 책임을 주주에게 부담시키기 위함이다.
 - (O) 법인격은 특정한 거래 관계에만 예외적으로 부인된다고 본문에 나타납니다. 또한 그 목적은 허울뿐인 회사가 진 책임을 주주, 한 명뿐인 주주인 대표 이사에게 묻게 하려는 그 목적도 적절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법인격이 부정되지 않으면 법인인 회사만 책임을 지고 사원인 대표 이사는 책임이 없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①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사단은 법인(法人)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登記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②사원 개인에게까지 ③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⑤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⑥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를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⑦'법인격 부인**

론'이 제기된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39.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겸비(兼備)하면

→ (X) 겸비하다: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갖추다.

ex. 쇼핑몰은 넓은 매장과 주차 공간을 겸비했다.

㉠과 바꿔 쓰기엔 어색합니다. '겸비하다'는 목적어의 구성 요소가 두 개 이상 있어야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장에서 목적어는 '요건'뿐입니다. 겸비하다를 쓰면 어색하죠.

㉡ 구비(具備)하면

→ (O) 구비하다: 있어야 할 것을 빠짐없이 다 갖추다.

㉢ 대비(對備)하면

→ (X) 대비하다: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다.

㉣ 예비(豫備)하면

→ (X) 예비하다: 필요할 때 쓰기 위하여 미리 마련하거나 갖추어 놓다.

㉤ 정비(整備)하면

→ (X) 정비하다: 「1」 흐트러진 체계를 정리하여 제대로 갖추다. 「2」 기계나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살피고 손질하다. 「3」 도로나 시설 따위가 제 기능을 하도록 정리하다.

※ 이 외에도 이번 글에서 알아두면 좋을 단어

채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무: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이른다.

독자적: 「1」 남에게 기대지 아니하고 혼자서 하는.

실체: 「1」 실제의 물체. 또는 외형에 대한 실상(實相).

존속하다: 어떤 대상이 그대로 있거나 어떤 현상이 계속되다.

상법: 「2」 기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 사법.

출자하다: 자금을 내다. 특히 회사나 조합 따위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자본을 내는 일을 이른다.

양도: 「2」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 또는 그런 일.

이사: 법인(法人)의 사무를 처리하며 이를 대표하여 법률 행위를 행하는 집행 기관.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퇴색하다: 「2」 (비유적으로) 무엇이 낡거나 몰락하면서 그 존재가 희미해지거나 볼품없이 되다.

귀속되다: 「1」 재산이나 영도, 권리 따위가 특정 주체에 붙거나 딸리게 되다.

부인하다: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다.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 / 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

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 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가]

37.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 (X) 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이 조금 나타나는 하지만, 그것이 위글의 핵심은 아닙니다. 게다가 그 법률 규정(상법의 계약 해지권 관련)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네요.

*실효성: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

- ② 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 전략에 내재된 경제학적 원리와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X) 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 전략은 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험료를 책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타나 있죠.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하는가 하는 문제와 보험 상품을 어떻게 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③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를 살피고 있다.

→ (O) 위글은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데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고지 의무에 관해서도 절반 정도를 할애하고 있네요.

- ④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을 나열한 후 경제적 해결책과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 (X)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 ⑤ 보험 상품의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법률 조항의 문제점을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 (X) 보험 상품의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법률 조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글에서 소개하는 상법의 내용은 보험 상품의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지 의무'가 없다면 본문에 나타나듯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 자체를 꺼리게 되는, 보험 상품의 거래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의 '고지 의무'는 보험 상품 거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법률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 / 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

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 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가]

38.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험사가 청약을 하고 보험 가입자가 승낙해야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 (X) 계약의 성립에 관해서는 설명해주고 있지만 해지에 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해지에 관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케이스,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뿐입니다.

②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보다 보험금 총액이 더 많아 공정한 보험이 된다.

→ (X)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같아야 합니다.

③ 보험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 (X) 사고가 나야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사실... 보험금은 평생 안 받는 게 제일 좋은 인생이라고 봅니다.

④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 (O)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해 승낙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해서 말이죠. (그래서 돈이 있어도 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⑤ 우리 상법은 보험 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 (X)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고지 의무 위반이 다른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전가하는 부당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 본연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죠.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 / 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

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 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39.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다고 가정한다. A와 B에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 각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

단, 동일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끼리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같고, 지급받는 보험금이 같다. 보험료는 한꺼번에 모두 납부한다.

①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두 배가 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변하지 않는다.

→ (X) 보험료가 두 배가 되면 보험금도 두 배가 되는 것은 맞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도 두 배가 되어야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댓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 A의 구성원을 100명으로, 인당 보험료를 10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총 보험료가 10000원고 사고자는 10명이겠네요. 공정한 보험이니 사고자 10명에게 지급되어야 할 총 보험금도 10000원일 테니, 사고자 1명에게는 각 1000원씩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보험금의 기댓값은 1000원×0.1이니 100원, 보험료 100원과 똑같네요. 공정한 보험입니다.

이때 보험료를 두 배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와 같이 변화하겠습니다.

보험료	총 보험료/금	사고자	보험금	기댓값
100원	10000원	10명	1000원	100원
200원	20000원	10명	2000원	200원

②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두 배가 된다.

→ (X) 1번 선지와 반대네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려면 (공정한 보험이니까) 보험료도 두 배가 되어야 합니다.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두 배가 된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B의 구성원을 100명으로, 인당 보험료를 10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B는 사고 확률이 0.2니까 사고자가 20명입니다.

보험료	총 보험료/금	사고자	보험금	기댓값
100원	10000원	20명	500원	100원
200원	20000원	20명	1000원	200원

③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

→ (X)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A와 B는 사고 발생 확률이 다르죠. 당연히 보험료율은 서로 다르겠습니다. A는 보험료율이 0.1 즉 10%이며 B는 보험료율이 0.2로 20%인 것으로 계산됩니다.

④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이다.

→ (X) A는 사고 발생 확률이 10%이고 B는 20%인데 같은 보험금을 타는 상품이라면 (그리고 그 상품이 공정한 보험이라면) 당연히 B 보험료가 더 비싸야겠죠. 정확히는 두 배가 되어야 합니다. (1번 선지와 2번 선지 해설에서 사고자가 받는 보험금이 1000원일 경우의 보험료는 A가 100원, B는 200원이죠.)

⑤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서로 같다.

→ (O) 공정한 보험에서는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기댓값이 서로 같습니다.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도 서로 같을 것입니다.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가]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 / 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

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 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40. 위글의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 (X) 일반적인 의무 위반과 달리, 보험사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②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 (O) 고지 의무를 통해 파악한 보험 가입자의 '중요한 정보'는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보험료 책정에 큰 도움이 되겠죠.
- ③ 보험 계약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드는 어려움을 줄여 준다.
→ (O) 고지 의무는 보험 가입자의 특성을 보험 가입자가 직접 밝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 ④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이다.
→ (O) 보험 가입자는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보험사는 처음 보는 사람이죠. 고지 의무는 이러한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를 줄여 줄 수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 ⑤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 (O)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 / 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

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 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가]

41.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보험사 A는 보험 가입자 B에게 보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B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다.

- ①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 (X) 해지를 해야 보험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사는 계약 해지권이 없죠. A사는 계약 해지권이 없으니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도 돌려받을 수 없겠죠.
- ②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A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X)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③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X) B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A는 중대 과실이 있으므로 계약 해지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환 청구권도 없어요.
- ④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 (O)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돌려받을 수 없겠습니다.
- ⑤ B가 자신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A에게 즉시 알렸다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 (X) 사고 발생 즉시 알렸든 어쨌든 늦었어요. 반드시 계약 전에 알렸어야 합니다. 고지 의무 위반이죠.

42. ㉠~㉣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지난해의 이익과 손실을 대비해 올해 예산을 세웠다.
→ (X) 밑글의 대비는 아래의 첫 번째 뜻입니다. 선지의 대비는 두 번째 뜻이고요.
대비對比: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또는 그런 비교.
대비對備: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함. 또는 그런 준비.
 - ② ㉡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O) 파악: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앎.
 - ③ ㉢ :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 (O) 인상: 「2」 물건값, 봉급, 요금 따위를 올림.
 - ④ ㉣ : 이번 실험이 실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 (O) 배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 ⑤ ㉤ :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했다.
→ (O) 전가: 「1」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씩음.
- ※ 이 외에도 이번 글에서 알아두면 좋을 단어
- 재화: 『경제』 사람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 주는 모든 물건.
 - 서비스: 생산된 재화를 운반·배급하거나 생산·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함.
 - 상응하다: 서로 응하거나 어울리다.
 - 수령하다: 돈이나 물품을 받아들이다.
 - 보전하다: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채우다.
 - 청약: 『법률』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 의사 표시.
 - 고지: 게시나 글을 통하여 알림.
 - 본연: 「2」 본디 생긴 그대로의 타고난 상태.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22. 밑글에서 사용한 설명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통화 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 (X) 통화 정책의 목적은 '물가 안정' 한 가지만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했다고 볼 수 없죠.
- ㉡ 통화 정책에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O) '예를 들어'라고 그냥 써 냈네요.
- ㉢ 공개 시장 운영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O) 채권 매매가 원인이 되어 이자율의 변동이라는 결과를 만들고, 이 이자율의 변동이 다시 원인이 되어 경기와 물가 상승률의 변동이라는 결과를 만드는, 인과적 설명이 잘 나타납니다.
- ㉣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 (O) '통화 정책'이란 무엇인지, '선제성'이란 어떤 의미인지, '정책 외부 시차'란 무엇인지 관련 용어를 정의해줌으로써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 ㉤ 통화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준칙을 지켜야 하는 지에 대한 두 견해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O) 본문에서 회색 색칠 아래의 부분은 준칙주의와 재량주의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신뢰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경제학자 병’이 제안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4%로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단,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한다.

기간	1/1~3/31	4/1~6/30	7/1~9/30
	1분기	2분기	3분기
물가 상승률	2%	3%	3%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 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선제적 통화 정책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학자 병의 고려 사항]

기준 금리가 4%로부터 1.5%p*만큼 변화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 표의 각 분기 값을 기준으로 1%p만큼 달라지며, 기준 금리 조정과 공개 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수행된다.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이며 기준 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률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된다.

*p는 퍼센트 간의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1%에서 2%로 변화하면 이는 1%p 상승한 것이다.

- ①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2.5%로 유지해야 한다.
→ (X) 이려면 2분기는 4%, 3분기도 4%가 됩니다.
- ②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상해야 한다.
→ (X) 이려면 2분기는 4%, 3분기는 3%가 됩니다.
- ③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4%로 유지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5.5%로 인상해야 한다.
→ (X) 이려면 2분기는 3%, 3분기는 2%가 됩니다.
- ④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하해야 한다.
→ (X) 이려면 2분기는 2%, 3분기는 3%가 됩니다.
- ⑤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5.5%로 유지해야 한다.
→ (O) <보기>를 보니 2분기와 3분기 물가 상승률은 3%로 나타납니다.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이것을 예상했다고 나타냅니다. 경제학자 병은 물가 상승률을 2%로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자고 했을 것으로 추측되죠. 금리가 인상되면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고 물가 상승률이 하락할 테니까요. <보기>를 보면 금리가 1.5%p 올라가면 물가 상승률은 1%만큼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외부시차가 1개 분기라고 했으니, 1월 1일에 5.5%로 인상하면 2분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1%p 하락해서 2%가 될 수 있었겠네요. 그런데 이 효과는 딱 1개 분기 동안만 지속된다고 하니, 4월 1일에도 뭔가 선제적 조치가 있어야 3분기 물가 상승률을 잡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기준 금리는 4%보다 1.5%p 높은 5.5%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㉔파급된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셔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㉕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㉖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㉗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㉘‘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 이제 경기를 ㉙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㉚‘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24. 밑글의 ㉑과 ㉒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㉑ ㉑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느라 경제 변동에 신속적인 대응을 못해도 이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 (O) 원가 경제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준칙을 깨고 살짝 변화를 주고 싶을 때, 그때에도 준칙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약속한 게 있다면(준칙), 신속적인 대응 같은 것은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 ㉒ ㉒에서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정한 준칙을 지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 (X)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㉓ ㉓에서는 ㉑과 달리,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민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 (X) 민간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준칙주의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준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㉔ ㉔에서는 ㉑과 달리, 통화 정책에서 민간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 (X) 재량주의도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는 방법에 대한 하나의 견해입니다.
- ㉕ ㉕에서는 ㉑과 달리,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통화 정책의 탄력적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 (X)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신속적으로 정책 대응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통화 정책의 탄력적 대응이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떤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겠죠.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④파급**된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⑥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③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⑤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①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①‘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 이제 경기를 **③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②‘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25. ㉠~㉡의 문맥적 의미를 활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그의 노력으로 소비자 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

→ (O) 파급: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차차 다른 데로 미침.

② ㉡ : 의병 활동은 민중의 애국 애족 의식이 **발현**한 것이다.

→ (O) 발현: 속에 있거나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거나 그렇게 나타나게 함. 또는 그런 결과.

③ ㉢ : 이 질병은 구토와 두통 증상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 (O) 수반: 「2」 어떤 일과 더불어 생김.

④ ㉣ : 기온과 습도가 높은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 (O) 유의: 마음에 새겨 두어 조심하며 관심을 가짐.

⑤ ㉤ : 장남인 그가 늙으신 부모와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고 있다.

→ (X) (본문의) 부양: 가라앉은 것이 떠오름. 또는 가라앉은 것을 떠오르게 함.

(선지의) 부양: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봄.

※ 이 외에도 이번 글에서 알아두면 좋을 단어

통화: 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

채권: 『경제』 국가, 지방 자치 단체, 은행, 회사 따위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 증권. 공채, 국채, 사채, 지방채 따위가 있다.

매수: 물건을 사들임.

매도: 값을 받고 물건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김.

경기: 『경제』 매매나 거래에 나타나는 호황·불황 따위의 경제 활동 상태.

물가: 『경제』 물건의 값.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종합적이고 평균적으로 본 개념이다.

시차: 『경제』 경제 활동에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에, 이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적 지체.

운용: 무엇을 움직이게 하거나 부리어 씬.

준칙: 준거할 기준이 되는 규칙이나 법칙.

사후: 일이 끝난 뒤. 또는 일을 끝낸 뒤.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㉞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자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정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속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증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 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 (X)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의 환율은 물가 상승에 따라 함께 상승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②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하락 폭이 작을 것이다.

→ (O)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인과관계를 볼 수 있죠.

물가가 경직적이다(원인) -> 실질 통화량 증가(결과)
 실질 통화량 증가(원인) -> 시장 금리 하락(결과)
 시장 금리 하락(원인) ->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결과)
 기대 수익률 하락(원인) -> 외국인 자금 해외 유출(결과)
 외국인 자금 해외 유출(원인) -> 환율 상승(결과)

위의 환율 상승은 물가 경직성에 의한 단기적이고 추가적인 환율 상승입니다. 이것이 오버슈팅이죠. 반대로 물가가 신속적이라면, 실질 통화량 증가량이 (경직적일 때에 비해) 적어서 시장 금리 하락 폭도 적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③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 (O) 그렇습니다. 환율이 조종되는 속도를 물가가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④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오버슈팅 정도는 커질 것이다.

→ (O) 2번 선지와 판단 근거가 같습니다. 선지의 가정대로 환율의 오버슈팅이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미 국내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른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외국 투자 자금의 해외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이때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금리가 하락할 때 기대 수익률이 더 크게 하락한다는 것이겠죠. (기억합시다. 경제에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 변화 폭이 크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자금 유출이 더욱 심해져 이에 따른 환율 상승, 즉 오버슈팅은 더욱 심해질 겁니다.

⑤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 (O)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물가가 오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림) 오버슈팅이 더 심하고 오래 간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물가가 상승하고, 실질 통화량이 통화량 증가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시장 금리가 다시 오르고, 투자 기대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고, 이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국내로 복귀하고, 그 결과 오버슈팅이 종료된다면,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됩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㉞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자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속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증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를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 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28. ㉠를 바탕으로 정책 수단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X) 보조금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겠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벌을 주는 건데 당연히 과태료가 더 강제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장려금을 주는 게 무슨 강제성이 있겠습니까? 출산을 권장하는 것이지 출산을 강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푸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BS를 비롯한 시중 해설지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해설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다자녀 가구 아닌 사람들에게는 장려금을 못 받는 것이 일종의 벌금과 같은 성격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다자녀 가구와 비교하면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도 거꾸로 생각하면, 합법 주차를 하는 사람들에게 장려금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를 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는 셈이니까요.

정리하면, 출산 장려금이나 불법 주차 과태료나 모두 금전적인 수준에서 개인의 행동을 강제하려 하기 때문에, 강제성의 측면에서 서로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익과 손해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행정학에서는 벌금과 보조금을 비슷한 수준의 강제성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중간 수준 강제성) 개인의 행동을 금전적인 손실이나 이익을 바탕으로 제한하려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마음먹고 어길려 하면 어길 수도 있는 수준의 약한 강제성이 있습니다. 반면 본문에서 설명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사회적 규제로서 강제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분류됩니다. 아예 해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제한을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여기면 단순히 벌금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가장 낮은 수준의 강제성을 띤 정책 수단은 정부가 개인에게 강제하고 싶은 행위에 관한 정보를 주는 '정보제공', 어떤 행위를 저질렀을 때 개인 간 소송을 통해 책임을 지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손해책임법'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② 전기 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가시성이 높다.

→ (X) 가시성은 정책 수행을 위한 자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라고 했습니다. 덧붙여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이 들지 않으니 가시성이 낮다고도 했습니다. 선지의 전기 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니 가시성이 낮습니다. 반면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니 가시성이 높겠죠.

*자원 : 재화나 자금이 나올 원천.

③ 문화재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자연 보존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X) 문화재 발견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주는 것은,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많은 재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문화재를 발견해도 신고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되면 안 해도 그만인 것이죠. 그러나 자연 보존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④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에 맡겨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정부 기관에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직접성이 높다.

→ (X) 아니겠죠.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민간 업체에 맡기는 건 위탁이니까 직접성이 낮죠. 반면 정부 기관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건 직접성이 높습니다.

⑤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외 계층에 제공하던 복지 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을 감독하는 것보다 자동성이 높다.

→ (O) 자동성의 핵심은 별도의 행정 기구(부서)가 필요하지 아닌지입니다.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은 자동성이 낮죠. 반면 원래 복지 카드 담당 부서에서 카드 혜택을 좀 늘려주는 건 자동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㉞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자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정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속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증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를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 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29.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국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금융 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환 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다.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두어야 한다.

①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질 것이다.

→ (X) <보기>에 보면 경제학자 갑이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음이 나타납니다. 오버슈팅이 발생한 것이죠. 이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답은 나와있죠. 경제학자 갑은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 즉 오버슈팅은 다소 진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버슈팅의 정도가 커질 것이라는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②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O) 경제학자 갑이 <보기>에서 말하길 금융 시장 불안의 여파*로 인해 생긴 문제랍니다.

*여파: 어떤 일이 끝난 뒤에 남아 미치는 영향.

③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 환율이 장기에는 균형 환율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O) 경제학자 갑은 A국의 환율 급등(오버슈팅)은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며, 환율 상승에 따라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므로, 그냥 시장에 맡겨 두면 (장기적으로는)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④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동반하므로 A국의 정책 당국은 외환 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

→ (O) 맞습니다. 경제학자 갑은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⑤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O) A국 환율 상승이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품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품이 비싸지면 국산품을 이용하면 되니까 딱히 내수 위축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선지처럼 생각할 수 있느냐? 본문에 근거가 있죠. 오버슈팅으로 인한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수입품 가격 급등으로 인한 내수 위축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자 갑도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 예견했네요.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㉞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자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속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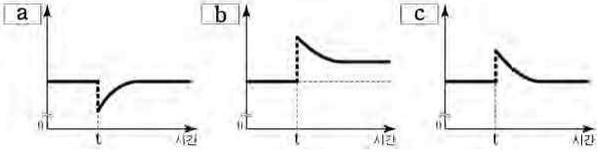
㉢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증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를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 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30. <보기>에 제시된 그래프의 세로축 a, b, c는 [가]의 ㉠~㉢과 하나씩 대응된다. 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 <보 기> —

다음 그래프들은 [가]에서 국내 통화량이 t 시점에서 증가하여 유지된 경우 예상되는 ㉠~㉢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단, t 시점 근처에서 그래프의 형태는 개략적으로 표현하였으며, t 시점 이전에는 모든 경제 변수들의 값이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다고 가정한다. 장기 균형으로 수렴되는 기간은 변수마다 상이하다.)

- | | | | |
|---|---|---|---|
| | ㉠ | ㉡ | ㉢ |
| ① | a | c | b |
| ② | b | a | c |
| ③ | b | c | a |
| ④ | c | a | b |

→ (0) ㉠은 실질 통화량, ㉡은 시장 금리, ㉢은 환율입니다.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이 중에 ㉠실질 통화량과 ㉢환율은 값이 커지고 ㉡시장 금리만 값이 작아집니다. 따라서 그래프a는 무조건 ㉡시장 금리인 것이죠. 그래프b와 c의 차이는 값이 커졌다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입니다. 둘 중 ㉠실질 통화량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c가 ㉠실질 통화량입니다. 남은 그래프b는 ㉢환율입니다. 그래프b에서는 t시점 이후 오버슈팅으로 급등한 환율이 장기적으로는 살짝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본문에서 구매력 평가설에 의한 환율 변화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참고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매력 평가설에 의하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되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⑤ c b a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㉞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자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속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증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31.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기치 못한 외환 손실에 대비한 환율 변동 보험을 수출 주력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 (O) 환율의 오버슈팅 같은 일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로 인해 수출 주력 중소기업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급락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난달에 수출한 물품 대금이 1만\$이었는데, 이달 초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급락해서 원화로 바꿨을 때 국내에서 생산비나 이자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위기에 처할 수 있겠죠. 이런 손실에 대비한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원유와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환율 변동에 따라 조정한다.

→ (O) 유류세를 낮추면 환율 급등에 따른 유가 상승을 조금이나마 커버할 수 있지요. 이런 것도 미세 조정 정책 수단입니다.

③ 환율의 급등락으로 금융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을 통제하여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

→ (X) 자금 유출 유입을 통제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한다는 설명은 있습니다.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는 건 하락장을 상승장으로, 상승장을 하락장으로 바꾼다는 건데... 직관적으로도 그런 건 '미세 조정'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추세: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

《더 읽어볼 이야기》

만약, 시장에 무제한 개입하여 자금 유출입을 통제하고 환율을 입맛대로 바꾸는 정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은 기축 통화인 미화(USD)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환율을 조작한다는 건 미국에게 도전하는 행위라고 봐야겠죠? 미국에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전방위적 경제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미국기업이 해당 국가에 투자하려고 하면 금융지원을 끊어 버립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 기업들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에서 퇴출되고요, IMF를 통해서 환율 압박도 들어갑니다.

④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 수입 대금 지급을 위해 외화를 빌리는 수입 업체에 지급 보증을 제공한다.

→ (O) 외화 차입은 외화(주로 달러겠죠)를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급등하면 외화 가치가 급등하니 환율이 오르기 전보다 빌리기가 더 어렵겠죠? 쉽게 말하면 환율이 오르기 전에 비해 갑자기 더 많은 돈을 빌리는 셈이 되는 거니까요.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위험이 더 커지는 셈이니 주저하게 될 겁니다. 한도를 넘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자금 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준다는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⑤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금리 변동, 해외 투자 자금 동향 등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O) 본문에서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알고는 있어야'는 거죠. 이렇게 정보를 주는 수준이니까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인 겁니다.

32. 문맥상 ㉠~㉣와 바뀐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동떨어져

→ (O) 괴리되다: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지다.

② ㉡ : 드러낼

→ (X) 노출되다: 겉으로 드러나다.

직관적으로 일단 말이 안 되죠. '위험에 드러낼 수 있다'? 부사어가 어울리지 않죠? '노출되다'는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지만, '드러내다'는 목적어를 요구합니다.

③ ㉢ : 불러온다

→ (O) 초래하다: 일의 결과로서 어떤 현상을 생겨나게 하다.

④ ㉣ : 되돌아오면서

→ (O) 복귀하다: 본디의 자리나 상태로 되돌아가다.

⑤ ㉤ : 꺾히는

→ (O) 도모하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우다.

※ 이 외에도 이번 글에서 알아두면 좋을 단어

관여하다: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하다.

위탁하다: 「2」 『법률』 법률 행위나 사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부탁하다.

경직성: 「2」 사고방식, 태도, 분위기 따위가 부드럽지 못하여 융통성이 없고 엄격한 성질.

촉발되다: (어떤 일이) 다른 어떤 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자극되어 일어나게 되다.

반등: 『경제』 물가나 주식 따위의 시세가 떨어지다가 오름.

사후적: 일이 끝난 뒤에 일어나는. 또는 그런 것.

실물 경제: 「2」 『경제』 이론이 아닌 실제의 동향으로 나타나는 경제.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이다.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와프(CDS)'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 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AAA라는 최고 신용 등급이 부여된다.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난 채권에는 D라는 최저 신용 등급이 주어진다. 그 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AA, A, BBB, BB 등 점차 낮아지는 등급 범주로 평가된다.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 각각 '-'나 '+'를 붙이거나 하여 각 범주가 세 단계의 신용 등급으로 세분되는 경우가 있다.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보장'이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 한다.

[A] 가령 은행 ㉠같은, 기업 ㉡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 회사 ㉢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기초 자산은 ㉡이 발행한 채권이다.

보장 매도자는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데, 이것의 요율이 CDS 프리미엄이다. CDS 프리미엄은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한편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

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크다.

2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 (O)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가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위험은 커진다.
 - (X)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위험은 낮아지겠소.
- ③ 신용 평가 제도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 (O) 신용 평가 제도의 취지가 본문에 명시되어 있네요.
- ④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어떤 채권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해당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 (O) 보상은 같은데(다른 조건 일정) 위험만 커진다면, 투자자들은 그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하겠소. 가격은 하락합니다.
- ⑤ 채권 발행자는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지만, 채권에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이 수반된다.
 - (O)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겠지만, 지켜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권도 그렇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신용 위험이 수반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이다.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와프(CDS)'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 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AAA라는 최고 신용 등급이 부여된다.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난 채권에는 D라는 최저 신용 등급이 주어진다. 그 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AA, A, BBB, BB 등 점차 낮아지는 등급 범주로 평가된다.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 각각 '-'나 '+'를 붙이거나 하여 각 범주가 세 단계의 신용 등급으로 세분되는 경우가 있다.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보장'이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 한다.

[A] 가령 은행 ㉠같은, 기업 ㉡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 회사 ㉢와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기초 자산은 ㉣이 발행한 채권이다.

보장 매도자는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데, 이것의 요율이 CDS 프리미엄이다. CDS 프리미엄은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한편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

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크다.

22. [A]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기초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 (X) 갑은 채권 매수자입니다. 또한 CDS 보장 매수자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기초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업 을이 발행한 채권이죠.
- ② ㉠은 기초 자산에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 (X) 을이 발행한 채권에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은 보장 매도자인 보험 회사 병이 되겠습니다.
- ③ ㉡은 신용 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이다.
 - (X) 을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 채권 발행 기업입니다. 신용 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는 갑이겠죠.
- ④ ㉢은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보장 매도자이다.
 - (O) 맞습니다. 보험 회사 병이 신용 위험을 부담하죠.
- ⑤ ㉣은 기초 자산에 부도가 나야만 이득을 본다.
 - (X) 보험 회사 병은 은행 갑으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기업 을이 발행한 회사채의 부도 손실을 보상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부도가 나지 않아야 이득을 봅니다. 부도가 나면 이득을 볼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이다.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와프(CDS)'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 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AAA라는 최고 신용 등급이 부여된다.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난 채권에는 D라는 최저 신용 등급이 주어진다. 그 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AA, A, BBB, BB 등 점차 낮아지는 등급 범주로 평가된다.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 각각 '-'나 '+'를 붙이거나 하여 각 범주가 세 단계의 신용 등급으로 세분되는 경우가 있다.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보장'이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 한다.

[A] 가령 은행 ㉠같은, 기업 ㉡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 회사 ㉢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기초 자산은 ㉡이 발행한 채권이다.

보장 매도자는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데, 이것의 요율이 CDS 프리미엄이다. CDS 프리미엄은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한편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

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크다.

23. <보기>의 ㉠~㉣ 중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큰 것은?

—<보기>—
 윗글의 ㉠과 ㉡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CDS 거래 ㉠~㉣를 비교하여 CDS 프리미엄의 크기에 순서를 매길 수 있다. (단, 기초 자산의 발행자와 보장 매도자는 한국 기업이며, ㉠~㉣에서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CDS 거래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등급
㉠	BB+	AAA
㉡	BB+	AA-
㉢	BBB-	A-
㉣	BBB-	AA-
㉤	BBB-	A+

- ① ㉠ ② ㉡ ③ ㉢ ④ ㉣ ⑤ ㉤

② ㉡ → (O) 일단 보험료와 관련된 두 가지 사실이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CDS P(프리미엄)가 크대네요. 그럼 BB+와 BBB-중 누가 더 위험할까요? 정답은 BB+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으니 초록색 파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같은 조건 이라면 ㉠, ㉡가 CDS P가 크겠네요. 다음으로 보장 매도자의 채권 신용등급을 살펴 봅시다. 이건 신용이 좋을 수록 P가 큼니다. 보장이 확실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이 비싼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제일 신용이 좋은 AAA와 CDS를 거래한 ㉠가 가장 P가 크겠네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 두 번째로 큰 걸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AA-와 거래한 ㉣의 P가 되겠네요. 문제가 미궁에 빠지지 않게끔 평가원에서는 ㉠~㉣의 보장 매도자 신용등급을 AA- 이하로만 세팅을 해주었네요.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이다.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와프(CDS)'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 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AAA라는 최고 신용 등급이 부여된다.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난 채권에는 D라는 최저 신용 등급이 주어진다. 그 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AA, A, BBB, BB 등 점차 낮아지는 등급 범주로 평가된다.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 각각 '-'나 '+'를 붙이거나 하여 각 범주가 세 단계의 신용 등급으로 세분되는 경우가 있다.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보장'이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 한다.

[A] 가령 은행 ㉠같은, 기업 ㉡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 회사 ㉢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기초 자산은 ㉡이 발행한 채권이다.

보장 매도자는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데, 이것의 요율이 CDS 프리미엄이다. CDS 프리미엄은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한편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

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크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X가 2015년 12월 31일에 이자와 원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채권 BX를 2011년 1월 1일에 발행했다. 발행 즉시 BX 전량을 매입한 Y는 BX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CDS 계약을 Z와 체결하고 보장 매입자가 되었다. 계약 체결 당시 BX의 신용 등급은 A-,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은 AAA였다. 2011년 9월 17일, X의 재무 상황 악화로 BX의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다. 2012년 12월 30일,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되었다. 2013년 9월에는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AA+로 변경되었다. 2013년 10월 2일, BX의 CDS 프리미엄은 100 bp*였다. (단, X, Y, Z는 모두 한국 기업이며 신용 등급은 매월 말일에 변경될 수 있다. 이 CDS 계약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매월 1일에 갱신되며 CDS 프리미엄은 매월 1일에 변경될 수 있다. 제시된 것 외에 다른 요인에는 변화가 없다.)

2011.1.1.	2011.9.17.	2012.12.30.	2013.9.30.
CDS 계약	X의 재무 상황 악화	X의 지급 능력 개선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 변경

*bp : 1 bp는 0.01%와 같음.

- ① 2011년 1월에는 BX에 대한 CDS 계약으로 X가 신용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겠군.
- (X) 발행 즉시(2011.01.01.) CDS 계약으로 BX에 대한 신용 위험은 Z가 부담합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하면, Y가 보장 매입자, Z가 보장 매도자입니다.
- ② 2011년 11월에는 BX의 신용 등급이 A-보다 높았겠군.
- (X) 채권 BX의 신용 등급은 발행 시 A-였는데, 이때보다 더 높았을 것이라 추론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2013년 1월에는 BX의 신용 위험으로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2011년 10월보다 작아졌겠군.
- (O) 신용 위험은 2011년 10월 > 2011년 8월 > 2013년 1월 순으로 높았을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④ 2013년 3월에는 BX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100 bp보다 작았겠군.
- (X) 2013년 10월 2일 CDS P가 100bp였습니다. 이때는 Z 신용등급이 AA+였죠. 그런데 3월이면 다른 조건은 모두 같고 Z(보험회사)의 신용 등급이 AAA였던 시절입니다. P는 100bp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⑤ 2013년 4월에는 BX의 신용 등급이 BB-보다 낮았겠군.
- (X) 2012.12.30. 이후로는 발행 당시였던 A-시절보다 더 지급 능력이 높은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신용 등급은 지급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A-보다 더 낮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이다.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와프(CDS)'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이 매도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 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AAA라는 최고 신용 등급이 부여된다.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난 채권에는 D라는 최저 신용 등급이 주어진다. 그 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AA, A, BBB, BB 등 점차 낮아지는 등급 범주로 평가된다.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 각각 '-'나 '+'를 붙이거나 하여 각 범주가 세 단계의 신용 등급으로 세분되는 경우가 있다.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보장'이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 한다.

[A] 가령 은행 ㉠값은, 기업 ㉡을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 회사 ㉢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기초 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다.

보장 매도자는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데, 이것의 요율이 CDS 프리미엄이다. CDS 프리미엄은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한편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

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크다.

25.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①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 (0) 기온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의 '떨어진다'가 '가격이 떨어진다'의 '떨어진다'와 가장 의미가 유사합니다.

떨어지다

(뜻이 정말 너무 많아서 ①~⑤는 생략합니다.)

⑥

「1」 값, 기온, 수준, 형세 따위가 낮아지거나 내려가다.

갈수록 성적이 떨어져서 큰일이다.

그 마라톤 선수는 지쳐서인지 달리는 속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졌다.

연일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2」 병이나 습관 따위가 없어지다.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큰 고생을 하였다.

「3」 해, 달이 서쪽으로 지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 일을 마치도록 하여라.

「4」 이익이 남다.

과자 한 봉지를 팔면 10원이 떨어진다.

「5」 뒤를 대지 못하여 남아 있는 것이 없게 되다.

쌀이 떨어져 두 끼를 라면으로 때웠다.

「6」 입맛이 없어지다.

피곤해서 그런지 입맛이 떨어졌다.

「7」 일이 끝나다.

그 일이 언제 다 떨어질지 모르겠다.

「8」 옷이나 신발 따위가 헤어져서 못 쓰게 되다.

신발이 떨어지다.

아이가 기어 다니기만 해서 바지의 무릎이 금방 떨어졌다.

「9」 숨이 끊어지다.

숨이 막 떨어졌다.

「10」 뱀 아이가 유산이 되다.

임신 초기엔 아이가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11」 나뭇섬에서 나머지가 없이 나뉜다.

1과 자기 자신 외의 어떤 수로 나누어도 떨어지지 않는 수를 소수라 한다.

「12」 셈에서 다 치르지 못하고 얼마가 남게 되다.

지난번 물건을 사고 돈이 부족해서 떨어진 천 원을 아직도 갚지 못하였다.

「13」 말이 입 밖으로 나오다.

선생님의 호령이 떨어지다.

배가 고프다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밥상이 나왔다.

「14」 지정된 신호 따위가 나타나다.

파란불 신호가 떨어지자 사람들이 건널목을 건너기 시작했다.

② 과자 한 봉지를 팔면 내게 100원이 떨어진다. → (X)

③ 더위를 먹었는지 입맛이 떨어지고 기온이 없다. → (X)

④ 신발이 떨어져서 걸을 때마다 빗물이 스며든다. → (X)

⑤ 선생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모두 자리에 앉았다. → (X)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집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

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에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 한다.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된다.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 실체법에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 (O) 실체법에서 채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법률 용어는 항상 이해하기 어렵거나, 직관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은 그렇지 않네요. 실체법은 ‘권리’의 실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절차법은 그것을 실현시키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 절차법에 강제 집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O) 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있다고 하네요.
- ㉢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X) 사건을 통해서 ‘도’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 ㉣ 법원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 (O)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 ㉤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 (O)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을 설명하는 본문의 문장을 보면, 그 이유를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으로 꼽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집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

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에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 한다.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된다.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17.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은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행으로 소멸한다.
 - (X) 매도인과 매수인을 혼동하면 적절한 선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판매자고 매수인은 구매자입니다. 을은 매도인입니다. 을의 채무, 을의 의무는 매도인인 을이 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소멸합니다. 지문에 서로 비슷하거나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용어가 나오면, 문제를 풀기 전 반드시 확인하고 푸는 게 좋습니다.
- ㉡ ㉡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 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한 것이다.
 - (X) 갑이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 바로 원상회복 청구권입니다. 여기에 채무자의 의사 표시가 작용했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 ㉢ ㉢과 ㉣은 ㉢이 이행되면 그 결과로 ㉣이 소멸하는 관계이다.
 - (X) 만약 ㉢이 이행되었다면 애초에 ㉣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결과 ㉢이 발생하였으며, 을이 매매 대금을 갑에게 반환하는 채무를 이행하면 ㉣은 소멸합니다.
- ㉣ ㉢과 ㉣은 동일한 계약의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 (X) 같은 계약 상태 안에서 채무와 채권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과 ㉣은 계약 상태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은 매매 계약 상태에서 을의 채무이고, ㉣은 계약 해제 상태에서의 갑의 채권입니다.
- ㉤ ㉢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O) 정답입니다. 매매 계약에서 을의 채무는 물건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반면 매매 대금을 이미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갑은 금전(기지불한 매매 대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죠.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집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

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에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 한다.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된다.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18. ㉣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을’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되어 ‘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 (O) 을의 과실로 불이 났다고 설명되어 있고,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갑에게 계약 해제권이 생깁니다.

㉡ ‘갑’은 소를 제기하여야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 (X) 소를 제기해도 매매의 목적이 된 물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한 번도 쓰인 적 없는 ‘재산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요, 소유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뜻 풀이만 정리하고 가도록 합시다.

재산권: 『법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인 권리. 물건, 채권, 무체 재산권 따위이다.

소유권: 『법률』 물건을 전면적·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물건이 가지는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완전 물건이다.

㉢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그림 A’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 (X)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림 A’를 사려고 지불했던 대금을 다시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갑’과 ‘을’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행 불능이 되었다.

→ (X) ‘계약 체결 -> 대금 지불 -> 화재 발생’의 순서로 진행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을의 과실로 인해 이행 불능이 된 것입니다.

㉤ ‘을’이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을’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X) 본문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을 때문이라면, 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집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

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에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 한다.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된다.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다.

- ① 증여, 유언, 매매는 모두 법률 행위로서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다.
 - (O) 쌍방이든, 일방이든 어쨌든 의사 표시는 있어야 합니다.
- ② 증여와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 (O)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에 명시되어 있지만, 증여는 그런 말이 없어서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도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것이라고 했으니, 소유권 이전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리라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③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
 - (X) 변제의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자가 이행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죠.
- ④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를 갖는 매매와 차이가 있다.
 - (O) 그렇습니다. 증여는 일방만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 ⑤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의사 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과 차이가 있다.
 - (O) 그렇습니다. 누군가 당신과 관련된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당신이 승낙하든 말든 일단 그 유언이 목적인 법률 효과는 발생해버립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집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

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에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 한다.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된다.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20.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 오랜 연구 끝에 만족할 만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
- ㉡ 본문의 ‘판결’과 가장 유사한 게 ‘실험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판가름한 결과’가 ‘판결’이니까 ‘실험한 결과’와도 결이 유사합니다.
- ㉢ 그 사람이 부드럽게 나오니 내 마음이 누그러졌다.
- ㉣ 우리 마을은 라디오가 잘 안 나오는 산간 지역이다.
- ㉤ 이 책에 나오는 옛날이야기 한 편을 함께 읽어 보자.
- ㉥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걸출한 인물이 많이 나왔다.

※ 이 외에도 이번 글에서 알아두면 좋을 단어

일방: 어느 한쪽. 또는 어느 한편.

매도: 값을 받고 물건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김.

(賣渡 팔 매, 건널 도)

매수: 물건을 사서 넘겨받음.

(買受 살 매, 받을 수)

매매: 물건을 팔고 사는 일.

(賣買 팔 매, 살 매)

대금: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

행사하다: 「2」 행동하거나 어떤 짓을 하다. 「3」 『법률』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다.

이행하다: 「1」 실제로 행하다. 「2」 『법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다.

동산: 『법률』 형상, 성질 따위를 바꾸지 아니하고 옮길 수 있는 재산. 토지나 그 위에 고착된 건축물을 제외한 재산으로 돈, 증권, 세간 따위이다.

인도하다: 「1」 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주다. 「2」 『법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다.

소: 『법률』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소송물의 정당성 여부를 심판하여 권리 보호를 허락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신청.

실력: 「2」 강제력이나 무력.

무효: 「2」 『법률』 사법(私法)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법률 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 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일.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게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

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2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 (X) 본문에서 '단기적일 때와 달리'라고 명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 ②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개별 금융 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X)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의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이 곧 금융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 ③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 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 (X)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의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통화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이 별개의 기능과 목적을 가진 이원적 정책이었어요. 통화 정책은 경기의 조절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금융감독 정책은 말 그대로 금융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인지만 감독하는 정책이었던 겁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금융은 통화 정책의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 ④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O)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통화 정책이 금융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통화 정책은 경기나 물가와만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시건전성 정책에만 집중하면 금융안정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구요. 그런데 웬걸, 저금리가 버블을 일으키고 버블이 금융 안정을 훼손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 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X)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고, 이 변화된 자산 가격 변동(버블 또는 급락)이 다시 경기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본다고 본문에 나오네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게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

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기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O) 미시건전성 정책에서는 통화 정책과는 다른 정책 수단, 이를테면 최저 자기자본규제 같은 것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은 정책 금리 조절이 언급되고 있는데, 둘은 완전히 별개의 정책이죠.
 - ㉡ ㉡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 (O) 경기가 호황이면 신용 공급이 늘어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급등한 자산 가격이 다시 경기를 더욱 과열시키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은 금융 안정을 훼손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거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이러한 순응성을 감안하여 이를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을 강구하겠지요.
 - ㉢ ㉢은 ㉠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X) ㉢도 예방적 규제를 사용합니다. 본문에 나오네요.
 - ㉣ ㉣은 ㉠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 (O) ㉣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만 추구하고, ㉡은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 ㉠과 ㉡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 (O) ㉡은 최저 자기자본 규제, ㉢은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있겠네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게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협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협 요인 간의 상관

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협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기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D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에는 정책 수단 운용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가 (A)일 때 (B)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자본을 (C)하도록 하고, (D)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여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

- | | | | | |
|---|----|----|----|----|
| | A | B | C | D |
| ① | 불황 | 거시 | 사용 | 미시 |
- (O) 일단 D를 제일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하는 순간 미시 건전성이겠죠. 마침 1~3번 모두 B는 거시네요. 거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호황일 땐 최저 자기자본을 추가로 적립하게끔 하고(시장에 돈이 더 풀리는 걸 억제) 불황일 때는 적립된 완충자본을 시장에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데 쓰라고 합니다. 따라서 A가 호황이면 C는 적립, A가 불황이면 C는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모두 충족하는 건 바로 이 선지뿐이네요.
- | | | | | |
|---|----|----|----|----|
| ② | 호황 | 거시 | 사용 | 미시 |
| ③ | 불황 | 거시 | 적립 | 미시 |
| ④ | 호황 | 미시 | 적립 | 거시 |
| ⑤ | 불황 | 미시 | 사용 | 거시 |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게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협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협 요인 간의 상관

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협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 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31.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나는 그 사람에게 친근감이 든다.
- ② 그는 목격자의 **진술**을 증거로 들고 있다.
- (O) 본문의 문장을 뜯어 보면 '~으로 ~을 들다'의 문장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와 마찬가지로 목적어와 부사어(~로)를 갖추고 있는 위 선지를 정답으로 추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다른 선지는 문장 구조부터 다르네요.
- ③ 그분은 이미 대가의 경지에 든 학자이다.
- ④ 하반기에 **들자** 수출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 ⑤ 젊은 부부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들기로 했다.

※ 이 외에도 이번 글에서 알아두면 좋을 단어

통화: 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

(경제 지문에서 '통화'란 구체적인 사물로서의 화폐가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모하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우다.

인상: 물건값, 봉급, 요금 따위를 올림.

신용: 재화를 먼저 주고받은 다음에 그 대가나 대금을 뒷날 치를 수 있음을 보이는 거래 능력.

(경제 지문에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는 것은 구매자들이 신용을 바탕으로 재화를 구입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빌려서 뭘 사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부양: 가라앉은 것이 떠오름.

효율적 시장: 가격은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미 반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면 즉각 반응하는 시장. (그러나 현실의 시장은 그러하지 않죠. 그러니 버블도 일어나고 주식 시장은 투기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자본: 기업의 소유자가 출자한 자본과 기업 내부에 축적된 적립금, 준비금 따위의 유보 자본을 합한 자본.≠순자산

이원적: 사물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근본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 일. 또는 그 근원.

와해되다: 조직이나 계획 따위가 산산이 무너지고 흩어지게 되다.

자성: 자기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스스로 반성함.

야기하다: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키다.

구성의 오류: 개별적인 것을 합한 것이 전체의 모습과 다를 수 있는 것.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①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②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협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협 요인 간의 상관

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협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기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30. 윗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현실에서의 통화 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화 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로 은행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끈 밀어올리기(pushing on a string)’라고 부른다. 이는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것은 쉽지만, 밀어서 위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에 빗댄 것이다.

- ① ‘끈 밀어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에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군.
- (O) 경기 침체에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으로 풀린 돈(신용 공급)이 주식 버블, 부동산 버블로 이어질 수 있음이 잘 설명되어 있네요.
- ②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경제 주체의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군.
- (O) ‘가계’는 경제 주체 중 하나입니다. 이 가계의 ‘소비 심리’에 따라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 읽어볼 이야기》

경제 주체란 경제 활동(수입과 지출 활동)을 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경제 주체로 가계, 기업, 정부를 들 수 있습니다. 기업은 원자재 구입과 임직원 임금으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재화와 서비스 판매로 수입을 얻습니다. 이 중에서 임금은 가계의 수입이 되겠죠. 그리고 가계에서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 비용은 다시 기업의 수입이 되고요. 한편 정부는 기업이나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수입으로 삼고, 이를 다시 국가 경영을 위해 지출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부의 지출은 다시 기업이나 가계의 수입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서로 긴밀히 얽히고 엮인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세 주체를 3대 경제 주체라고 합니다.

③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 (X)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이 가진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호황기에 신용 공급이 확대되어 버블이 일어나고, 이 버블이 경기를 더욱 과열시키는 걸 막고, 반대로 불경기에는 신용 공급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 자산 가격 급락이 일어나고, 이것이 다시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완화하려는 대책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도 ‘끈 밀어올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불경기라서 경기 부양을 위해 신용 공급을 원활히 해주었는데, 경기는 부양되지 않고 버블 같은 문제만 생기는 현상이니까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불경기에 신용 공급이 원활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는 장점이 있을 뿐, 그 신용 공급이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으로 몰려가는 일을 막을 재주가 없습니다.

④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경기 침체기에는 정책 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군.

→ (O) 통화 정책으로 금리를 낮추고, 대출 문턱을 낮추고, 신용 공급을 풀어줘도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어렵다면 당연히 정책 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당위가 있죠. 그래야 경제 안정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⑤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정책 금리 인상은 신용 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겠군.

→ (O) <보기>에서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에는 통화 정책이 잘 먹힌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22년 11월 11일 현재, 저는 금리 인상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미국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유래 없는 고강도 금리 인상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다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언론을 통해 경기 침체가 예고되고 있고요. 경기를 진정시키는 데에는 정말 통화 정책만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7.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 (O)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가방의 기능인 '물건을 넣어 들거나 메고 다니고' 있는 사람이겠습니다. 이 사람은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이네요. 직접점유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사용하다: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쓰다.
- ②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 (O) 가방을 빌려 쓰고 있는 사람은 점유자이긴 하나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 ③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한다.
 - (O) 소유권 양도 조건은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1-유효한 양도 계약, 2-소유권 양도 공시
가방과 같은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고 하네요.
- ④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 (O) 가방 등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고 합니다.
- 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 (X) 가장 확실한 선지입니다. 소유권의 이전, 즉 소유권의 양도는 유효한 계약과 함께 소유권 양도 공시가 있어야 한다고 본문에서 그냥 그대로 설명해 두었네요.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의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8.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 (X) 동산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직접점유입니다. 동산의 반환 청구권을 가진 경우가 간접점유네요.
- ㉡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 (X) 그 어디에도 간접점유로는 소유권을 공시할 수 없다는 말이 없어요. 간접점유도 점유에 해당하고, 모든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 하나의 동산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 (X) 거꾸로입니다. 간접점유자가 있으려면 직접점유자가 있어야 하겠죠. 반대로 간접점유자가 없어도 직접점유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 ㉣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 (X) 지문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간접점유자가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간접점유자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데, 이런 권리가 곧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 (O)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양수인이 피아노 소유권을 넘겨받는다를 의미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유권 양도 공시가 필요합니다. 피아노 같은 동산은 점유 인도로 공시가 되겠죠. 점유에는 2가지가 있다고 [A]에 나타납니다. 종합하면 그 2가지 중 하나를 갖춰야 소유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이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9.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 (X) ㉠은 점유 인도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되고요,

② ㉠은 ㉠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 (O) 그렇습니다. 우리의 법 체계가 ㉡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는 것은 원 소유자의 권리 보호보다 시장에서의 거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과 같은 고가의 재산의 경우 시장에서의 거래 안전보다 원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선의취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③ ㉡은 ㉠과 달리,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 (X) 부동산의 경우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만,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상식적으로 부동산에는 사람이 거주할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장사를 할 수도 있죠. 모두 물리적 지배입니다.

④ ㉠과 ㉡은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 (X)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은 ㉠뿐입니다. ㉡은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기에 불가능합니다.

⑤ ㉠과 ㉡은 모두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 (X) ㉠은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되지 않습니다.

[A]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A]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O) 갑이 끼고 있던 금반지가 갑의 소유라면, 계약에 문제가 없고(유효한 양도 계약) 점유 인도로 공시만 되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 ②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O) 본문에도 나오네요. 양수인이 직접 점유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게 되는 형태로도 점유 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 (X) 먼저 파란색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으로 점유 인도까지 받았으나, 을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는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선의취득을 한다고 확정할 수 없어 틀린 서술이 됩니다.
또한,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라면 을 역시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을은 점유개정으로 점유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 ④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O) 소유권과 별개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은 맞습니다.
-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O) 그렇습니다. 위 3번 선지에서 설명한 대로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다는 점만 충족된다면 선의취득 조건이 모두 갖춰집니다.

— <보기> —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O)

30번 문제를 풀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저 도둑놈 갑은 어떻게 됨?!?”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갑은 자신이 금반지 주인도 아니면서 당당하게 을에게 반지를 팔았고, 을이 충분히 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만큼, 진짜 타고난 사기꾼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추후에 을이 병과 계약을 맺고 갑에게 반환청구권 양도를 통지했을 때에도 아마 얼굴에 첩판을 깔 듯 금반지의 1대 주인 행세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비행기는 고가의 물건이라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중요하다는데, 사실 반지나 가방 같은 동산도 비싼 건 차보다 비싼 게 엄청 많거든요. (예X메스 공식 홈페이지 참조) 그렇게 보면 선의취득 제도란 거래 안전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도둑놈들이 금이나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물건을 훔쳐다 팔아먹는 걸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본문에는 설명이 없었지만, 만약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갑은 적어도 도둑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서는 선의취득 요건으로 목적물이 도품(도둑질 당한 물건)이나 유실물(잃어버린 물건)이 아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보기>에서 금반지는 누가 훔친 물건이 아니고, 누가 잃어버린 물건도 아니어야만 병의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무척 마음이 따스해지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훔친 물건도 아니고 주운 물건도 아니면서 주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는 대체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서 물품 A를 구입하는 계약을 했는데, 일단 계약금만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약속된 날짜에 입금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계약상의 날짜보다 앞서서 미리 A를 받아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갑은 그저 을의 신용을 믿었을 뿐) 이 경우, 아직 을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이슈로 인해 이 A의 가격이 갑자기 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을은 너무 신납니다. 그리고 당근에서 A를 병에게 비싼 값으로 재판매해요. 병은 을이 A의 소유자가 맞는지 몇 번이나 확인도 했고 유효한 계약을 한 후 돈도 모두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A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갑도 A의 가격이 폭등한 것을 알고 을과의 계약을 철회하기로 마음먹고(위약금 따위 얼마든지 줄 수 있지!), A를 비싼 값에 정에게 판매하기로 새로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꼬인 경우, 대체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선의취득이 인정되면서 A는 병이 가져가는 게 맞다고 해주는 겁니다. 갑과 을, 갑과 정 의 계약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적당히 합의하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든가 해서요.

그리고 하나 더. 다른 점유 인도는 다 인정해주면서 왜 유독 점유개정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보기>의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라면, 왜 을은 선의취득을 못 하는 걸까요?

<보기>의 금반지가 원래 X의 소유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갑은 금반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X로부터 빌려 쓰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죠. 이렇게 되면 X나 을이나 금반지를 직접 쓰지도 않고 갑에게 맡겨 둔 입장인 서로 별다른 차이가 없고, 심지어 외부에서 보기에는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조차 알기 어려우니(갑은 처음부터 계속 금반지를 끼고 다녔음) 이런 경우에는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더 우선해 준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병아, 어차피 쓰지도 않는 거 그냥 계약 없던 걸로 하자.” 이거죠.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A]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1.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작년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 해였다.
 - (0) 본문에서는 ‘소유권 박탈’이라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데요, 그나마 가장 가까운 것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 ② 청중 사이에서는 기쁨으로 인해 환호성이 일어났다.
- ③ 형님의 강한 의지력으로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 ④ 나는 그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 ⑤ 사회는 구성원들이 부조리에 맞서 일어나므로써 발전한다.

※ 이 외에도 이번 글에서 알아두면 좋을 단어

물리적: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존재하는 대상과 관련이 있는 것. 또는 그것이 지니는 속성과 관련이 있는 것.

반환: 빌리거나 차지했던 것을 되돌려줌.

동산: 형상, 성질 따위를 바꾸지 아니하고 옮길 수 있는 재산. 토지나 그 위에 고착된 건축물을 제외한 재산으로 돈, 증권, 세간 따위이다.

양도: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 또는 그런 일.

(讓渡 사양할 양, 건널 도)

유효하다: 법률적 행위가 당사자나 법률이 의도한 본래의 효과가 있다.

계약: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를 표시함.

인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일.

간주되다: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여겨지다.

등기: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이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 따위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 또는 적어 놓은 것.

등록: 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증하기 위하여 행정 관서나 공공 기관 따위에 비치한 법정(法定)의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일.

경시하다: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업신여기다.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도 도입한 것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text{BIS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I'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 II'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

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바젤 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받아들여지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37. 위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 (O) 첫 문단에서부터 이 글은 BIS 비율 규제가 비회원 국가에서도 지켜지는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하는 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BIS 규제를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라고 본다면, 그 내용과 변화 양상이 글의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이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에 대해 말미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 ②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의 규범을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X)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규범을 분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젤1, 바젤2, 바젤3와 같이 하나의 규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 ③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수용되는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다.
→ (X) 그냥 아무말 대잔치입니다.
- ④ 특정한 국제적 기준과 관련된 국내법의 특징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규범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 (X) 그냥 아무말 대잔치입니다.
- ⑤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를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서 규범 설정 주체가 지닌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 (X) 글에서는 계속 바젤위원회가 규제를 설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규범 설정 주체가 지닌 특성에 대해서도 별달리 분석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도 도입한 것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text{BIS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I'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 II'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

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바젤 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받아들여지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38.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O) 권리와 의무를 서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라 했으니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원칙이다'라는 서술어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문장의 처음을 잘 보시면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법'에서 일반적으로 통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그것은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②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 (O) 그렇습니다. 글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③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 (X) 딱딱한 법에서는 제재로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④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O) '결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위반'이라고 합니다. '제재'는 직·간접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국제법이 이러한 '제재'를 통해 효력을 확보한다고, 즉 구속력을 얻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재: 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국가가 처벌이나 금지 따위를 행함. 또는 그런 일.

⑤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 (O) 이 기준을 법제화하지 않으면,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72개가 넘는 나라들이 바젤위원회 회원도 아니면서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있죠. 금융을 포함한 모든 것이 세계화된 시장에서 먹고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심지어 중국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도 도입한 것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text{BIS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I'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 II'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

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바젤 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받아들여지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39. BIS 비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바젤 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 (X) 바젤1 협약에서는 회사채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100%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종인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지더라도 BIS 비율에는 변화가 없다고 해야 맞습니다.

②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 (X) 감독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을 규제 비율인 8%보다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나라에서는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9%나 10%로 설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③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 (X) 표준 모형을 따르는 은행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OECD 국가의 국채는 0%~150%까지 가중치가 정해지고, 회사채는 20%~150%까지 가중치가 정해집니다. OECD 국가 중 0% 가중치가 붙었던 국채를 팔고, 이 금액만큼 회사채에 투자하면 무조건 가중치가 20% 이상 붙겠죠. 그럼 위험가중자산은 증가하니까, 본문의 BIS 공식에서 분모가 커지는 셈이니 BIS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중치 150%짜리 국채를 팔아서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같거나 높아지겠죠.

내부 모형을 따르는 은행의 경우,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추론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단정적인 서술은 틀린 서술이 되죠.

④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 (O) 바젤2 협약은 바젤1 협약을 바탕으로 '개정'된 협약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개정되었다고 명시한 부분이 외에는 개정되지 않고 유지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본문에서는 바젤2 협약에서 시장 위험 측정 방식이 바뀌었다고 서술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는 곧 바젤1 협약에서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을 은행이 선택할 수 있게끔 했던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라는 말이 적절한 서술이 됩니다. 또한 바젤2 협약에 이르러서는 신용 위험에 대해서도 표준 모형 외에 내부 모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⑤ 바젤 III 협약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보완된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

→ (X) 이 2%는 대체 어디를 노리고 나온 말이나 하면, 바젤3 협약이 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젤 3에서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 비율이 최소 6%가 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자본이 6%면 보완자본이 최소한 2%는 되어야 최종 8%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보완자본도 2%는 넘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엉뚱한 고민하면서 시간도 끌고 문제도 틀리라고 낸 선지입니다. 기본자본이 최소! 6%가 되게끔 했다면, 보완자본은 최소를 규정할 필요가 없죠. 보완자본은 말 그대로 플러스 알파, 기본자본이 예를 들어서 8% 맞춰버리면 보완자본은 0%라도 됩니다. BIS 비율 충족시키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도 도입한 것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text{BIS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I'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 II'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

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바젤 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받아들여지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40.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갑 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갑 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바젤 II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그 이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항목	자기자본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후순위채무
금액	50억 원	20억 원	40억 원

항목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시장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국채	회사채	
금액	300억 원	300억 원	400억 원

① 갑 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 (O) 평가원 참 친절합니다. 은행에서 BIS 비율을 산출해서(계산 다 끝냈다는 말) 공시한 자료입니다. 무려 BIS 공식에서 분자 분모 자리까지 고려해서 위에는 자기자본, 아래에는 위험가중자산을 딱 표로 주네요. 그냥 단순 계산하면 됩니다. 밑에 분모 다 더해요. 1000억이죠? 위에 분자 다 더해요. 110억이죠? 바젤2 협약에 따른 BIS 비율은 무려 11%겠네요.

② 갑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 (O) <보기>에서 회사채가 50%로 계산된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은 본디 회사채가 600억이었던 거였겠죠. 그런데 가중치를 20%로 잡으면 120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위험가중자산이 820억이 되네요. 분모 작아졌고 분자 그대로입니다. BIS 비율은 높아집니다.

③ 갑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 (O) 갑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실제 규모는 600억입니다. 이것보다 국채의 실제 규모가 더 크려면 위험가중치가 50%보다 더 낮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채 위험가중치가 50%라면, 실제 국채 규모는 600억으로 추산되는데, 위험가중치가 100%라면 추산되는 실제 국채 규모는 300억으로 줄어들죠. 반대로 위험가중치가 10%라면 실제 국채 규모는 3000억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국채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크려면 국채 위험가중치는 회사채보다 낮아야 합니다.

④ 갑 은행이 바젤 I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 원이 되겠군.

→ (O) 그렇습니다. 지금 <보기>에서 회사채는 위험가중치가 50%로 잡혀서 300억이 된 거니까 실제 규모는 600억입니다. 그런데 바젤1 협약에서는 신용도고 나발이고 무조건 회사채는 100%니까, 600억 그대로 잡히겠네요.

⑤ 갑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바젤 III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 (X) 안 됩니다. 바젤3에서는 기본자본을 6% 이상 맞춰야 합니다. 위험가중자산의 변동이 없다면 분모가 1000억이 되니까 자기자본을 60억 이상으로 맞춰야 하겠네요. 보완자본이 10억 증가하더라도, 바젤3 협약의 자기자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재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도 도입한 것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text{BIS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I'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 II'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

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바젤 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받아들여지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①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②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41.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바젤위원회가 국제 금융 현실에 맞지 않게 된 바젤 기준을 개정한다.

→ (X) 본문과 일치하지만 ㉠의 사례로는 부적절하죠.

② 바젤위원회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한다.

→ (X) 그런 내용은 없어요.

③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준수 의무가 있는 바젤 기준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

→ (X) 그런 내용은 없어요.

④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이행한다.

→ (X) 그렇긴 한데, 문맥상 ㉠의 사례로는 부족하죠.

⑤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 (O) 완벽합니다. ㉠ 앞에 보면 '이런 현실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추론의 단서가 되죠. 그렇다면 '이런' 현실이란 어떤 현실일까요? 형식적으로는 바젤 협약의 구속을 받을 이유가 없는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이 협약 내용을 실천하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런: 「관형사」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이러한.

4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 (O) 적절합니다. 해설은 생략합니다.

② ㉡ : 8%가 넘도록

→ (O) 규제 비율이 8%니까 적절합니다.

③ ㉢ :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 (X)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기는커녕, 아예 시장에 진입 자체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④ ㉣ :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 (O) 제재를 가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⑤ ㉤ :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될지

→ (O) 적절합니다. 해설은 생략합니다.

※ 이 외에도 이번 글에서 알아두면 좋을 단어

규범: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

권고: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 또는 그런 말.

구속력: 『법률』 자유행동을 구속하는 효력.

산하: 어떤 조직체나 세력의 관할 아래.

준수하다: 전례나 규칙, 명령 따위가 그대로 좇아져서 지켜지다.

주안점: 특히 중점을 두어 살피는 점. 또는 중심이 되는 목표점.

재무: 돈이나 재산에 관한 일.

건전성: 온전하고 탈이 없이 튼튼한 상태의 성질.

자산: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

회사채: 주식회사가 일반 사람들에게 채권이라는 유가 증권을 발행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

개정하다: 주로 문서의 내용 따위를 고쳐 바르게 하다.

징표: 어떤 것과 다른 것을 드러내 보이는 뚜렷한 점.

헌장: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한 규범.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①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②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를 수 시사한다.

29. 밑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O)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② 영업 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 (X)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③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

→ (O)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를 최소화하려는 꼼수를 부리자 이를 막기 위해 디지털세 도입이 추진 중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④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 (O) 로열티는 결국 비용이니까, 이를 통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겠네요. 로열티가 높으면 이윤을 0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⑤ 이론적으로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 (O)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계산하여 설정합니다.

[A]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①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②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를 수 시사한다.

30.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 (X) '디지털세'는 과세 이슈와 관련이 있어요.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 이윤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

→ (X) 본문에서 디지털세는 '수입'에 대해 부과된다고 분명히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야 뭐 로열티가 어떻게 저평가, 그래서 남는 게 없으니 법인세를 어찌고 저찌고 그런 말이 안 나오겠죠. 만약에 법인세처럼 수입에서 비용을 뺀 이윤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세금이라면, 디지털세가 도입되지 않은 다른 국가에 자회사를 세워서 피할 수 있습니다.

③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이다.

→ (X) 본문에서는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 중 '어떤' 국가들은 디지털세 도입에 방어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위와 같이 진술하면 곤란하죠. 한정적인 수식어(일부, 다수, 어떤, 특정 등등) 없이 그냥 저렇게 서술하면 마치 모든 국가들이 적극적인 것처럼 이해될 수 있으니까요.

④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

→ (X) 자회사 방식의 키포인트는 '비용'을 뺀 뒤기해서 법인세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입'을 기준으로 세금을 때려버리면, 자회사가 100개든 1000개든, 비용이 수익을 넘어서든 말든 '수입'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절대 줄일 수 없어요.

⑤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

→ (O)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A]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①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②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적적이다.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를 수 시사한다.

31.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㉞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과제: ‘㉞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

- 가설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 판단

가설이 참이라면 ㉞고 할 수 있으므로 ㉞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

- ①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 (X)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고 가설에 써 있네요.
- ②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 (X) ㉞에 조세 회피의 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 선지처럼 하면 법인세 덩탱이 씩니다.
- ③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 (X) 제반 비용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을 것이라 추론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야 이윤의 비율이 커지겠조?
- ④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 (O) 과제는 가설에 대한 판단을 묻고 있습니다. ㉞이 근거가 되겠네요. 가설은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는 것입니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자회사의 이윤이 많지 않도록, 즉 세금을 많이 내지 않도록 세팅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이라면, ㉞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로 이윤을 다 몰아서 세금을 줄이고 있다는 말이 되겠조. 한두 개면 몰라도, 무슨 줄을 세운 것처럼 법인세율이 높은 순서대로 이윤이 작다는 건 우연치고는 이상하잖아요? 어떤 의도적 조작이 있었다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 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
 - (X) <보기>의 가설은 자회사들에 대한 이야기라 애초에 이상한 선지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회사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은 게 맞으니 확실히 틀린 선지입니다.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①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②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적적이다.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화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를 수 시사한다.

[A]

32.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S국은 현재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 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

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

→ (O)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한다는 것은, 지식 재산에 대한 보호가 약한 것에 대한 대가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② S국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

→ (O) 본문에서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에서는 접근 비용보다 유인 비용의 증가, 즉 지식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S국은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입니다. 위의 경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문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후략)' 이 말은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위의 일반적 경향에서 벗어나 있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그럭저럭 맞아떨어진다는 말 아니겠어요? 즉 S국은 일반적 경향에 부합한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③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 (X)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보호 수준을 낮추는 게 맞겠죠. 그러면 접근 비용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게 됩니다.

④ S국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겠군.

→ (O) S국은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현재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보다 더 약한 수준으로 갈 겁니다. 그러다가 더 높은 소득 수준으로 올라서게 되면 일반적인 경향에 따라 보호 수준이 높아지겠죠.

⑤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증가하겠군.

→ (O) 보호 수준을 높이면, 유인 비용이 감소하고, 접근 비용이 증가합니다.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①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②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벽적이다.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한다.

33. 문맥상 ㉔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
→ (O) 크... 인터내셔널한 절세 클래스... 부럽습니다.
- ②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
→ (O) 결과적으로 B자회사가 A자회사에 돈을 보내주는 셈이니 A자회사는 수입이 늘겠조.
- ③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
→ (X) A자회사의 이윤을 늘리는 게 절세의 키포인트.
- ④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 (O) B자회사의 이윤을 최소화해서 법인세를 최소화하는 게 절세의 키포인트.
- ⑤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늘린다
→ (O) B자회사의 이윤을 어떻게 최소화하죠? 로열티 비용을 늘리는 거조.

- ※ 이 외에도 이번 글에서 알아두면 좋을 단어
- 수입:** 『경제』 개인, 국가, 단체 따위가 합법적으로 얻어 들이는 일정액의 금액.
- 과세:** 세금을 정하여 그것을 내도록 의무를 지움.
- 불거지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두드러지게 커지거나 갑자기 생겨나다.
- 제반:** 어떤 것과 관련된 모든 것.
- 자회사:** 『경제』 다른 회사와 자본적 관계를 맺어 그 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 ≒관계 회사.
- 징수:** 『행정』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서 조세, 수수료, 벌금 따위를 국민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일.
- 유인:** 주의나 흥미를 일으켜 꺾어냄.
- (편집자 주: 경제 지문에서는 '유인'을 '사람들이 행동을 바꾸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 또는 그런 수단' 정도로 이해하심이 좋습니다.)
- 시사하다:** 어떤 것을 미리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다.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예약은 예약상 권리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 배상 채무로 바뀐다.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가 가지는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 수 있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26.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O) 계약이 성립하면 채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네요.

②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외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한다.

→ (O)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재화: 『경제』 사람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 주는 모든 물건.

*서비스: 생산된 재화를 운반·배급하거나 생산·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함.

③ 예약상 권리는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O) 본문에 나타난 예약의 두 가지 종류 모두, 예약상 권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네요. 원한다면 본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본계약 승낙을 요구하거나 본계약을 바로 성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④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

→ (O) 그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와 있네요.

⑤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

→ (X) 채권자와 채무자 이외에 그 누구라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A]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 배상 채무로 바뀐다.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 수 있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2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 (X) 기차 탑승은 승객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차를 태워주는 건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라고 볼 수 없어요.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급부이긴 한데, 이걸 기차 회사의 채권(기차표값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응하는 급부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 ㉡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 (X) 아무말 대잔치네요. 승객이 포기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 ㉢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 두는 것이다.
 - (O) 계약은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약이 아닐까요? 본문에 나타난 예약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본계약 성립 승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의사 표시만으로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이미 본계약이 다 체결된 것입니다. 예약은 뭐가 어쨌든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본계약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겁니다.
- ㉣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 (X) 계약이라고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 ㉤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 (X) 위 선지의 내용은 예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위 선지가 옳은 선지라면 본문에서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라는 서술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사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 배상 채무로 바뀐다.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 수 있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29.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을과 예약을 하여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기로 했다. 갑이 시간에 맞춰 미용실을 방문하여 머리 손질을 요구했을 때 병이 이미 을에게 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다. 갑이 예약해 둔 시간에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 ㉦갑은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 ①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 병은 갑에 대해 손해 배상 채무가 있다.
→ (O) 병은 불법행위를 했으니 손해 배상 책임이 있고, 을도 과실이 있었다면 을에게도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습니다.
- ②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지고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진다.
→ (O) 둘 다 갑에게 채무가 있어요. 그런데 을이든 병이든 아무나 갑에게 배상을 하면, 두 사람의 채무가 동시에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입은 손해가 100만원으로 산정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갑은 을에게도 100만원, 병에게도 100만원? 이렇게는 배상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을이 100만원 줬으면 병은 안 줘도 된다는 거죠.
- ③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
→ (O) 고의나 과실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채무자인 을에게 있어요. 증명되지 않았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건 곧 손해 배상 채무가 되죠. 병도 손해 배상 채무가 있어요. 급부 내용은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동일합니다.
- ④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진다.
→ (X) 을은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병은 애초에 이행할 채무가 없었는데 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었어요? 병은 불법행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가 있는 것이죠.
- ⑤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을과 달리 병에게는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 (O) 이 경우 을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아요.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㉓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사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㉑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㉒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㉓ 생길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 배상 채무로 바뀐다.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30. 문맥상 ㉓~㉑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㉓ :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 ② ㉑ : 올해 생일에는 고향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 (O) '대금(돈)을 받다'와 '편지를 받다' 비슷하긴 한데 확실하진 않으셨죠? 그래도 나머지보다는 더 비슷한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나머지 문장도 결합한 문장성분을 비교하면서 의미상의 거리를 비교해 보세요.
- ③ ㉑ : 기차역 주변에 새로 생긴 상가에 가 보았다.
- ④ ㉒ : 나는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방법을 물어 보았다.
- ⑤ ㉑ : 바닷가의 찬바람을 쐬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 이 외에도 이번 글에서 알아두면 좋을 단어

당사자: 어떤 일이나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
합의: 『법률』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함. 또는 그런 일.

예약: 「1」 미리 약속함. 또는 미리 정한 약속.

「2」 『법률』 앞으로 일정한 계약을 맺을 것을 미리 약속하여 두는 계약.

공모: 「1」 일반에게 널리 공개하여 모집함.

선정되다: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이 뽑혀 정해지다.

통지하다: 기별을 보내어 알게 하다.

응하다: 물음이나 요구, 필요에 맞추어 대답하거나 행동하다.

고의: 「1」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

「2」 『법률』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 상태.

과실: 「1」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

「2」 『법률』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 일.

배상: 『법률』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

비교) 보상: 『법률』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代償).

(가)

광고는 시장의 형태 중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그 효과가 크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시장이다. 각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한다. 판매자에게 그러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대체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키므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도 이러한 지위 덕분에 상품에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그 이윤이 지속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그 결과 기존 판매자가 공급하던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여 이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도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 판매자가 경쟁력에 자신 없는 상품에 많은 광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매자의 추측을 유도하는 것이 이 광고 방법의 목적이다.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하는데,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 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한다. 이처럼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강화된다. 판매자는 이렇게 광고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린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도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광고를 빈번하게 이용한다.

(나)

광고는 광고주인 판매자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기획되지만, 그러한 광고가 광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우선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 특히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면, 판매자는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게 되어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또한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촉진된다.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고,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광고가 특정한 상품에 대한 독점적 경쟁 시장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개별 광고가 구매자의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환기하여 대상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합쳐지면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경제에 광고가 없는 상황을 가정할 때와 비교하면 광고는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하고, 신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단축하여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촉진된 소비는 생산 활동을 자극한다. 상품의 생산에는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가 @들어가므로, 생산 활동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한다.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은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소비뿐만 아니라 소비로 촉진된 생산 활동에서도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경 오염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에 충분한 비용을 판매자나 구매자가 지불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환경 오염은 심할 수밖에 없다.

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광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광고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소개하고 있다.
 - (X) 개념 정의 없었어요.
- ② (가)는 **광고가 판매자에게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O) 광고가 판매자에게 중요한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또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어떤 효과를 얻으려는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얻으려 한다네요.
- ③ (나)는 **광고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각각의 견해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 (X) 다양한 견해가 소개되었다기보다는 광고의 다양한 영향을 소개했다고는 볼 수 있죠. 한계점도 없고요.
- ④ (나)는 **광고가 구매자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구매자가 광고를 수용할 때의 **유의점**을 나열하고 있다.
 - (X) 광고가 구매자에게 인지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고요, 구매자에게 경제적 영향을 끼치는 과정을 제시했다고 봐야 합니다. 유의점도 없고요.
- ⑤ (가)와 (나)는 모두 구매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광고와 관련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X) 광고와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지요.

(가)

광고는 시장의 형태 중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그 효과가 크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시장이다. 각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한다. 판매자에게 그러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대체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키므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도 이러한 지위 덕분에 상품에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그 이윤이 지속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그 결과 기존 판매자가 공급하던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여 이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도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 판매자가 경쟁력에 자신 없는 상품에 많은 광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매자의 추측을 유도하는 것이 이 광고 방법의 목적이다.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하는데,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한다. 이처럼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강화된다. 판매자는 이렇게 광고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린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도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광고를 빈번하게 이용한다.

(나)

광고는 광고주인 판매자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기획되지만, 그러한 광고가 광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우선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 특히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면, 판매자는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게 되어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또한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촉진된다.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고,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광고가 특정한 상품에 대한 독점적 경쟁 시장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개별 광고가 구매자의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환기하여 대상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합쳐지면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경제에 광고가 없는 상황을 가정할 때와 비교하면 광고는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하고, 신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단축하여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촉진된 소비는 생산 활동을 자극한다. 상품의 생산에는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가 @들어가므로, 생산 활동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한다.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은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소비뿐만 아니라 소비로 촉진된 생산 활동에서도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경 오염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에 충분한 비용을 판매자나 구매자가 지불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환경 오염은 심할 수밖에 없다.

5. 독점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점적 경쟁 시장에 신규 판매자가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지는 않는다.
- (O) 독점적 지위를 누림으로써 신규 판매자가 진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면,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없겠조.
- ② 판매자가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O)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 ③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상품 공급량에 따라 어느 정도인지를 판매자가 감안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 (X)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안해야 한답니다.
- ④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다소 비싼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하지만 이윤을 지속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 (O) 다소 비싼 가격을 책정할 수 있으니 이윤을 좀 보겠조. 그런데 그 이윤이 지속되리라 기대할 순 없답니다.
- ⑤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 자신의 상품을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하게 하면 강화된다.
- (O) 차별적 인지와 선호를 통해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다고 하네요.

(가)

광고는 시장의 형태 중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그 효과가 크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시장이다. 각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한다. 판매자에게 그러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대체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키므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도 이러한 지위 덕분에 상품에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그 이윤이 지속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그 결과 기존 판매자가 공급하던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여 이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도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 판매자가 경쟁력에 자신 없는 상품에 많은 광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매자의 추측을 유도하는 것이 이 광고 방법의 목적이다.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하는데,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 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한다. 이처럼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강화된다. 판매자는 이렇게 광고가 ①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린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도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광고를 빈번하게 이용한다.

(나)

광고는 광고주인 판매자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기획되지만, 그러한 광고가 광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우선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②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 특히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면, 판매자는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게 되어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또한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촉진된다.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고,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광고가 특정한 상품에 대한 독점적 경쟁 시장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개별 광고가 구매자의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환기하여 대상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합쳐지면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경제에 광고가 없는 상황을 가정할 때와 비교하면 광고는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하고, 신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단축하여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촉진된 소비는 생산 활동을 자극한다. 상품의 생산에는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가 @들어가므로, 생산 활동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한다.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은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소비뿐만 아니라 소비로 촉진된 생산 활동에서도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경 오염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에 충분한 비용을 판매자나 구매자가 지불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환경 오염은 심할 수밖에 없다.

6.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광고에 의해 유행 주기가 단축되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
- (O) 유행 주기가 단축되면 소비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유행이 바뀌었으니, 유행에 따라 새로 사야 하니까요.
- ② 광고가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정도는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질 때 작아진다.
- (X) 광고의 소비 촉진은 생산 및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정도가 더 커질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네요.
- ③ 광고가 생산 활동을 자극하면,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
- (O) 생산 활동이 자극되면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하고 이는 근로자나 투자자의 소득 수준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④ 광고가 생산 활동을 증가시키면,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 이용이 증가한다.
- (O) 생산 요소를 이용해야 생산 활동이 일어나겠죠. 생산 활동이 증가되면 생산 요소 이용도 당연히 증가하겠습니니다.
- ⑤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경제 전반에 광고가 없는 상황에 비해 환경 오염을 심화할 수 있다.
- (O) 광고에 의해 촉진된 소비와 그로 인해 촉진된 추가 생산 활동에서도 환경 오염이 발생할 것이므로, 광고가 없는 상황에 비해 환경 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가)

광고는 시장의 형태 중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그 효과가 크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시장이다. 각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한다. 판매자에게 그러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대체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키므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도 이러한 지위 덕분에 상품에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그 이윤이 지속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그 결과 기존 판매자가 공급하던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여 이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도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 판매자가 경쟁력에 자신 없는 상품에 많은 광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매자의 추측을 유도하는 것이 이 광고 방법의 목적이다.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하는데,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한다**. 이처럼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강화된다**. 판매자는 이렇게 광고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린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도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광고를 빈번하게 이용한다.

(나)

광고는 광고주인 판매자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기획되지만, 그러한 광고가 광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우선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 특히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면**, 판매자는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게 되어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또한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촉진된다.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고,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광고가 특정한 상품에 대한 독점적 경쟁 시장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개별 광고가 구매자의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환기하여 대상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합쳐지면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경제에 광고가 없는 상황을 가정할 때와 비교하면 광고는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하고, 신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단축하여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촉진된 소비는 생산 활동을 자극한다. 상품의 생산에는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가 @들어가므로, 생산 활동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한다.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은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소비뿐만 아니라 소비로 촉진된 생산 활동에서도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경 오염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에 충분한 비용을 판매자나 구매자가 지불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환경 오염은 심할 수밖에 없다.

7.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충성도가 높아질 때 일어나고, ㉡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질 때 일어난다. → (O) 본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 ② ㉠의 결과로 판매자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기** 어렵게 되고, ㉡의 결과로 구매자는 **다소 비싼 가격을 감수**하게 된다. → (X) 본문과 반대로 설명하고 있네요.
- ③ ㉠은 **시장 전체의 판매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은 **신규 판매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다. → (X) 경쟁이 제한된다는 것은 시장 전체의 판매자가 늘어날 수는 있어도, 그 안에서 해당 제품이 독점적인 시장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경쟁이 촉진된다는 것은 신규 판매자가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 ④ ㉠은 기존 판매자의 광고가 **차별성을 알리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고, ㉡은 신규 판매자의 광고가 의도대로 성공한 결과로 나타난다. → (X) 차별성을 알리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 경쟁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에 관한 설명은 맞습니다.
- ⑤ ㉠은 광고로 인해 가격에 대한 구매자의 민감도가 약화될 때 발생하고, ㉡은 광고로 인해 **판매자가 경쟁 상품의 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감소**될 때 발생한다. → (X) ㉡에 관한 설명은 맞습니다. 반면 ㉠은 광고로 인해 상품의 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증가할 때 발생합니다.

(가)

광고는 시장의 형태 중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그 효과가 크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시장이다. 각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한다. 판매자에게 그러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대체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키므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도 이러한 지위 덕분에 상품에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그 이윤이 지속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그 결과 기존 판매자가 공급하던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여 이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도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 판매자가 경쟁력에 자신 없는 상품에 많은 광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매자의 추측을 **유도**하는 것이 이 광고 방법의 목적이다.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하는데,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한다. 이처럼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강화된다. 판매자는 이렇게 광고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린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도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광고를 빈번하게 이용**한다.

(나)

광고는 광고주인 판매자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기획**되지만, 그러한 광고가 광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우선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 특히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면**, 판매자는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게 되어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또한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촉진된다.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고,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광고가 특정한 상품에 대한 독점적 경쟁 시장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개별 광고가 구매자의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환기**하여 대상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합쳐지면 경제 전반에 **전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경제에 광고가 없는 상황을 가정할 때와 비교하면 광고는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하고, 신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단축하여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촉진된 소비는 생산 활동을 자극한다. 상품의 생산에는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가 **@들어가므로**, **생산 활동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한다.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은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소비뿐만 아니라 소비로 촉진된 생산 활동에서도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경 오염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에 충분한 비용을 판매자나 구매자가 지불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환경 오염은 심할 수밖에 없다.

8. 다음은 어느 기업의 광고 기획 초안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초안을 분석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기업의 광고 기획 초안

○ 대상: 새로 출시하는 여드름 억제 비누

○ 기획 근거: 다수의 비누 판매 기업이 다양한 여드름 억제 비누를 판매 중이며, 우리 기업은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려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의 신제품은 새로운 성분이 함유되어 기존의 어떤 비누보다 여드름 억제 효과가 탁월하며, 국내에서 전량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사인 ‘을’ 기업은 여드름 억제 비누로 이윤을 보고 있으며, 큰 비용을 들여 인기 드라마에 상품을 여러 차례 노출하는 전략으로 광고 중이다. 반면 우리 기업은 이번 광고로 제품에 대한 정보 검색을 많이 하는 소비 집단을 공략하고자 제품 정보를 강조하되, 광고 비용은 최소화하려 한다.

○ 광고 개요: 새로운 성분의 여드름 억제 효과를 강조하고, 일반인 광고 모델들이 우리 제품의 여드름 억제 효과를 체험한 것을 진술하는 모습을 담은 TV 광고

① 이 광고가 ‘갑’ 기업의 의도대로 성공한다면 ‘을’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될 수 있겠어.

→ (O) ‘을’ 기업은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에서 선도 기업이며 이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만약 ‘갑’의 의도대로 광고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 검색을 많이 하는 소비 집단을 공략하는 데 성공한다면,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을’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될 수 있겠습니다.

② 이 광고로 ‘갑’ 기업의 여드름 억제 비누 생산이 확대된다면 이 비누를 생산하는 공장의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할 수 있겠어.

→ (O) 생산이 확대된다면 생산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하겠네요.

③ 이 광고로 ‘갑’ 기업이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게 된다면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 내의 판매자 간 경쟁은 장기적으로 약화될 수 있겠어.

→ (X) 광고를 통해 단기적으로 ‘갑’이 이윤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독점적 지위를 확보 및 강화), 이러한 이윤에 이끌려 장기적으로는 경쟁자들이 증가한다고 나옵니다.

④ 이 광고로 ‘갑’ 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이는 방법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차별성을 알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O) ‘갑’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정보 검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공략하고자 합니다.

⑤ 이 광고가 ‘갑’ 기업의 신제품을 포함하여 여드름 억제 비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높인다면 ‘갑’ 기업은 자사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겠어.

→ (O) 광고로 인해 ‘갑’의 신제품을 포함한 모든 여드름 억제 비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진다면,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가 아주 탄력적으로 획획 움직일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가격을 함부로 높게 책정할 수 없겠지요.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반입(搬入)되므로

→ (X) 운반되어 들어오다.

② 삽입(插入)되므로

→ (X) 「1」 틈이나 구멍 사이에 다른 물체가 넣어지다.
「2」 글 따위에 다른 내용이 넣어지다.

③ 영입(迎入)되므로

→ (X) 환영하여 받아들여지다.

④ 주입(注入)되므로

→ (X) 「1」 흘러 들어가도록 부어져 넣어지다.

「2」 『교육』 기억과 암기가 주로 되어 지식이 넣어지다.

⑤ 투입(投入)되므로

→ (O) 「1」 던져져 넣어지다.

「2」 사람이나 물자, 자본 따위가 필요한 곳에 넣어지다.

※ 이 외에도 이번 글에서 알아두면 좋을 단어

차별: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

지위: 「1」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서 따르는 위치나 자리.

「2」 어떤 사물이 차지하는 자리나 위치.

물량: 물건의 분량.

부각하다: 「1」 【…을】 어떤 사물을 특징지어 두드러지게 하다.

유도하다: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인 장소나 방향으로 이끌다.

기획되다: 일이 궤하여져 계획되다.

환기하다: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려일으키다.

촉진하다: 다그쳐 빨리 나아가게 하다.

순순환: 순환이 잘됨. 또는 좋은 현상이 끊임없이 되풀이됨.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①금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②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 환 본위제’가 되었다.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하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10. 밑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①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가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O) ‘그 이유로’라고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는데요.

②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의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트리핀은 어떤 전망을 했는가?

→ (X) 트리핀은 유동성 공급 중단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거나, 달러화(유동성) 과잉 공급으로 고정 환율 제도(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가 붕괴될 수 있다고 전망했을 뿐, 그 이후 세계 경제의 향방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했는지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③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했는가?

→ (O)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oz = 28.35g)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달러는 곧 금이라는 것이죠. 금 본위 체제를 바탕으로 무역을 해왔던 사람들에게 달러도 금처럼 쓸 수 있다고 믿게 해 주는 약속의 상징이었겠습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을 ‘돈’이라는 단위로 많이들 거래하는데요, 금 한 돈은 3.75g입니다.

④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인가?

→ (O)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금과 달러화가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달러화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 (O) 적자 상태가 지속된다는 건, 미국에 들어오는 달러화보다 미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달러화가 많다는 소리겠죠? 미국에서는 계속 달러화를 발행하고 있을 테고, 발행되는 달러화 중 해외로 유출되는 달러화가 계속 누적 되겠죠? 그러면 35달러를 금 1온스와 바꿔주기로 했던 약속은 점점 지키기 어려워지겠네요? 달러화를 찍어내는 건 별로 어렵지 않겠지만, 그 찍어낸 달러화만큼 금을 자국에 추가로 보유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일 테니까요. 그래서 본문에도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서술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국가들이 멍청이도 아니고, 다들 뭔가 눈치를 채지 않겠습니까?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이죠.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①**금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②**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 환 본위제**’가 되었다.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pm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③**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 (O) 미국의 무역 적자로 인해 세계에는 달러화가 다량으로 누적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달러화의 가치는 금 1온스의 가치보다 낮았겠지만, 브레턴우즈 체제의 ‘금 태환 조항’ 때문에 달러화는 굉장히 고평가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닉슨 쇼크로 ‘금 태환 조항’이 깨지면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도 가능해졌겠네요. 예전에는 35달러를 가져와서 금 1온스를 달라고 하면 무조건 바꿔줘야 했는데, 닉슨 쇼크 이후에는 미국 중앙은행에서 “70달러를 가져와야 금 1온스를 준다.”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같은 물건을 얻는 데 돈을 2배로 줘야 한다는 건 돈의 가치가 반값이 된 거겠죠? 이게 바로 평가 절하입니다.
- ②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 (O) 본문에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 누적으로 인한 금 준비량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여타국 통화의 평가 절상이었죠. 평가 절상은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걸 예상했을 테니(꼭 오를 거야! 마르크 가즈아!) 환투기가 일어났겠지요.
- ③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 (O)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를 찍어내는 속도만큼 금 보유량을 높일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만약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해 국제 유동성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트리핀이 말한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 ④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 (O)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불황), 계속하면 금 보유량이 부족해서 달러화의 신뢰도가 떨어져 브레턴우즈 체제의 기반이 흔들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입니다.
- 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 (X) 예를 들어 1달러당 10마르크의 환율이었다고 생각 해봅시다. 35달러는 350마르크겠네요. 350마르크로 1온스의 금을 살 수 있었겠군요. 그런데 평가 절상되면 환율이 떨어지죠? 1달러당 5마르크의 환율이라 해봅시다. 350마르크는 70달러겠네요. 세상에 같은 돈으로 금 2온스를 살 수 있습니다. 마르크화가 평가 절상되면, 마르크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금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 환 본위제’가 되었다. 1944년에 설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pm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13. 뒷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 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는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

①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겠군.

→ (X)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이해할 근거가 없습니다. <보기>에는 A국이 외국 자본 유입으로 인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다고만 했을 뿐인데요, 본문에서 미국 달러화의 신뢰도가 떨어졌던 것은 통화가 '과잉 공급'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반면 <보기> 속 A국은 (금리 인상으로) 통화 공급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②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

→ (X)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은 <보기>의 말미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본문과 <보기>의 내용만으로는 '국제 유동성 공급량 증가'의 시비를 추론하기는 어렵죠. 이런 건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능 국어영역이 경제학 또는 경제사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도 A국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서술(A국 화폐 평가 절상)은 틀렸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환율의 등락은 화폐 가치의 등락과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해 둔 만큼, 그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했는데 결과적으로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틀린 선지입니다.

③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군.

→ (X)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은 <보기>에 그대로 나타나죠. 그런데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교차 환율)은 어떨까요? ABC 삼국의 통화를 ABC로 가정합시다. 1A=100B, 1A=100C였다고 가정해 보죠. 환율 변동 이후 1A=50B, 1A=70C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원래는 1B=1C였는데, 환율 변동 이후 50B=70C, 즉 1B=1.4C니까 B국에 대한 C국의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④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겠군.

→ (O) 본문에서 미국이 경상 수지를 개선하려면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리든가, 다른 나라 화폐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무역 흑자였던 주요국들은 자국 화폐의 평가 절상(환율 하락)을 원치 않았겠죠. 거꾸로 말하면 상대 국가 화폐에 대한 자국 화폐의 평가 절하(환율 상승)가 무역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제적 합의 이후 B에 대해 C는 환율이 상승하고 C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B에 대한 C의 경상 수지는 이전보다 개선되었겠군요!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것이 반길 일이 된다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를 선뜻 수용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러니한 부분이 독서의 출제 포인트니까 경제 파트에 대해서만이라도 이런 아이러니에 대해 미리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되며,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겠군.

→ (X)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요인입니다. 금리 인상은 외국 자본 유입을 불러일으켰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로 인해 어떤 '상황'을 겪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 내용과 <보기> 내용만으로는 금리 인상과 경상 수지 악화의 관계를 추론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추론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A국 경상 수지가 악화되었을 때, 그 완화 방안으로 B국의 통화 환율 상승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틀린 서술입니다. B국의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B국의 평가 절하인데요,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이것은 오히려 B국에게 무역 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A국에게는 무역 수지 악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읽어볼 이야기》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는 환율이 어떻게 운영되었을까요? 이후 1973부터 1975까지는 스미스소니언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금 1온스에 대한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35달러에서 38달러로 바꾸고(달러화 평가 절하), 고정 환율제를 유지하되 변동폭을 기준율의 상하 2.25%로 설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1976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개최된 IMF 잠정위원회에서 각 국가가 환율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변동환율제 가능) 허용해 줍니다. 이를 킹스턴 체제라고 합니다.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①금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②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 환 본위제’가 되었다. 1944년에 설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③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12.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는 금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보다 하나 적다.

→ (X) 세 국가를 한국, 미국, 일본이라고 해봅시다. 세 국가는 모두 통화 가치를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했겠네요?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환율이 결정되는데, 한미일 삼국 간의 환율은 한-미, 한-일, 미-일 세 가지뿐입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와 금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는 서로 같아요.

② ㉡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 통화라면 ㉡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적어진다.

→ (X) ㉡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 통화라면 교차 환율의 가짓수 측면에서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③ ㉢에서 국가 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짓수도 하나씩 증가한다.

→ (X) 대문자 알파벳을 국가라고 생각해 봅시다. AB(2개국)-환율 가짓수: 1개, ABC(3개국)-환율 가짓수: 3개. 당장 2국에서 3국으로만 늘어나도 환율 가짓수가 2개 증가함을 볼 수 있네요.

④ ㉣에서 ㉡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가 많아진다.

→ (X) ㉣에서는 모든 국가 간의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됩니다. 반면 ㉡에서는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인 교차 환율만 자동적으로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가 적어지겠네요.

⑤ ㉠에서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짓수보다 적다.

→ (O) ㉣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짓수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 간의 짝짓기 개수입니다. 그런데 ㉠에서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끼리만 짝짓기한 개수입니다. ㉣에서 환율의 가짓수보다 ㉠에서의 교차 환율의 가짓수가 더 적겠네요.